



#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2022년 8월 18일 (목) 오후 2:30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좌장 박인환 전 건국대학교 교수

발제 이주천 전 원광대학교 교수

“건국 전후 애국청년단체의 활동 재평가”

박철균 정치학 박사

“4·3사건 왜곡, 4·3사건부터 박진경대령 암살까지”

토론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남광규 고려대학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

**주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 애국시민단체 연합

**후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신청** 02-737-0717



---

## 목 차

---

■ 행사순서.....	4
■ 참여단체.....	5
건국(建國) 전후 우익청년단체의 활동 재평가: 서북청년회를 중심으로 / 이주천 .....	7
제주 4·3 사건 역사 왜곡 -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4·3 사건부터 박진경 대령 암살까지 / 박철균.....	51
토론문 대한민국은 월남자들이 세운 나라 / 김용삼.....	89
토론문 서북청년단의 재발견 / 남광규.....	103

■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4:00~14:30	등 록
14:30~14:35	개회선언 문무일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
14:35~14:40	국민의례
14:40~14:45	기 념 사 황교안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14:45~14:50	축 사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사학자
14:50~15:00	이승만 장학금 수여 고요한 등 8명
15:00~15:05	제주4·3 다큐영화 '탐라의 봄' 예고편 상영
15:05~16:10	좌 장 박인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 전후 애국청년단체의 활동 재평가 이주천 전 원광대학교 역사학 교수
	4·3사건 왜곡, 4·3사건부터 박진경 대령 암살까지 박철균 정치학 박사
16:10~16:40	토 론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남광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
16:40~16:50	질의응답
16:50~17:00	폐 회 - 기념촬영

2022년 8월 1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 참여단체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 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재)굿소사이어티/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국본/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비상시국국민회의/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수호포럼/자유시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도민연대/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제주4·3역사왜곡반대학부모도민연대/제주4·3정립연구유족회/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하늘교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행동하는자유시민 등 39개 시민단체



**건국(建國) 전후 우익청년단체의 활동 재평가:  
서북청년회를 중심으로**

이 주 천





# 건국(建國) 전후 우익청년단체의 활동 재평가: 서북청년회를 중심으로

이주천<sup>1)</sup>

##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분단과 남북한의 해방정국
III	월남(越南) 이후 서북청년들의 활동상
IV	서북청년회의 창설과 활동상
V	최후의 투쟁지, 제주4·3폭동 진압
VI	대한청년단으로 통합과 분열
VII	결론
	참고문헌

“서북청년회는 해방 후에 좌익들과 싸워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고, 6·25 때는 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들의 건국(建國), 호국(護國)의 공로는 까맣게 잊혀져 젊은 세대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에 통탄할 뿐이다. 그들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받는 건국공로훈장도 못 받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다.”<sup>2)</sup>

## I. 문제의 제기

이 글의 목적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좌익들과 투쟁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에 기여했던 우익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sup>3)</sup>의 활동상을 개관, 재평가해 보는 것이다. 오늘날 친북과 종북좌익의 전위대 행동대 역할을 하는 전교조와 민노총의 발호를 바

1) 전 원광대학교 교수,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역사수호위원장

2) 손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건국이념보급회, 2014), 머리말에서.

3) 서북청년단, 서청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서북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통칭했으며, 황해도는 별도로 취급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을 서부지역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서북을 평안도 전체와 황해도 북부 지역에 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락교회 50년사에서는 서북을 평안도와 황해도에 국한해 사용하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한울, 2005), 29-30, 주1)과 주4)를 참조할 것.

라보면서, 이에 맞서 투쟁하는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세력의 부재를 한탄하는 해방동이 고령의 인물들은 지난 건국-6·25동란의 모진 세월을 헤쳐나간 우익애국청년들의 활동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반도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누구 덕분에 이런 삶을 만끽하고 있는지를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체제는 절대로 안된다’고 소련군정 통치에 저항하고 그 하수인인 김일성집단의 횡포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월남한 서북 청년들의 좌익소탕과 건국을 위한 희생과 반공투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해방 이후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한 과정, 그 자체였다. 일제의 식민지 질곡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준 미국과 소련은 2차대전 당시 연합국으로서 독일과 일본을 함께 물리친 동맹국이었다. 38선 이남에 북쪽의 소련군보다 뒤늦게 진주한 미군은 한반도 지형과 정세에 매우 어두웠으며 일제 강점기의 관료들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다. 미군정은 소련과의 협조하에서 신탁통치 구상을 추진하려했고, 남한에서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어도 좌우합작 정부를 시도했으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에 비해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히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려고 했다.

그에 반해, 한반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임을 인식한 소련은 처음부터 북한 지배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2차대전 말기에 독일 나치군이 물러간 동유럽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했던 방식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즉 소련 적군의 점령지에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인민위원회를 조직, 권력을 장악하게 하고 그 곳 주민들을 강압, 통제하면서 공산정권의 수립을 시도했듯이, 북한에 ‘민주기지’를 우선 만들고 난 뒤, 시기가 무르익으면 남한을 접수하려는 한반도 공산화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갔다. 이를 위해 북한을 적화시키려고 파견된 특무기관이 로마넵코 사령부로서 소련군 내부에서는 ‘정치사령부’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 당시 평양도청 청사에 소련 제25군의 본부를 두었고, 평양세무서 자리에 별도의 작은 부대로 간판 없이 주둔했다. 로마넵코 사령부는 정당의 조직활동 등은 물론, 출판물 및 방송·신문의 검열, 산업·경제 및 농림정책의 결정, 교육의 통제 등 막강한 권력을

이런 소련의 공산화 계획에 반대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교회성직자, 지주, 그리고 지식 엘리트계층은 철저히 탄압을 받았으며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던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한으로 탈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남한의 사정은 달랐다. 이미 지하에서 공산주의 모임은 비밀리에 존재했다. 그 단적인 예가 서울에서 “박헌영 동지를 환영합니다. 어서 나오세요”라는 벽보가 붙었던 것이다. 해방에 들뜬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일부는 공산주의운동에 동조하면서 공산주의자를 독립운동가의 일환으로 인정할 정도

로 대중적 동정심을 보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막연하게 사회주의를 동경했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능력이 오늘날보다 뒤떨어진 상태였다. 비근한 예로, 해방후 1년된 시점인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에서, 미군정청 여론국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어 있다. 그 답변의 결과는 자본주의(1,189명, 14%), 사회주의(6,037명, 70%), 공산주의(574명, 7%), 모릅니다(653명, 8%)였다.<sup>4)</sup>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판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해방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이 점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병폐를 비난하고 유토피아와 평등사회를 선전선동하는 공산주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구사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건국의 험난한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를 위시한 명성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은 세인의 주목을 받았기에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건국의 뒀안길에서 수많은 무명 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란, 폭동, 전쟁 그리고 정변 등 역사적 격랑 속에서 기록이 파기되었고 심지어 왜곡, 폄하되기도 했으며 점차 세월 속에 국민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건국유공자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인정도 정당하게 받지 못했고, 그들의 후손들은 민주화유공자들의 그늘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다. 그런 한 예가 바로 서북청년회를 위시한 우익 청년단체들의 활동상이다.

서북청년회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를 검토해 본다면, 독립운동과 건국에

4)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049872942>(검색일; 2022.7.7.)

서 지도자 중심의 연구가 집중되었으며, 서북청년회와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원래 전통적인 관점에서 서북청년회는 ‘행동적 반공단체’로 간주되어왔다.<sup>5)</sup> 그러나 87체제 이후 ‘민주화 광풍’ 이후 서북청년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폭력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방향이 심각하게 좌편향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북청년회의 민간인 피해와 관련된 최초의 조사는 1960년 4·19 이후 시작되었으나 5·16군사혁명을 거치면서 조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유신말기인 1978년 <창작과 비평>에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실리면서, 다시 관심이 살아났다. 1987년 직선제 개헌과 함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북청년회의 민간인 피해에 관해 학술적으로 처음 규명한 것은 박명림의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1988)다.<sup>6)</sup>

그런데 본격적으로 서북청년회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 1999년에 발표된 임대식의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이었다. 이후 서북청년회 연구는 정종식의 「서북청년회의 결성과 활동」(2007), 김평선의 「서북청년회의 폭력행위 연구: 제주4·3을 중심으로」(2010) 등으로 이어졌다.

이 네 편의 연구는 서북청년회가 왜 앞장서서 잔혹한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박명림은 서북청년회를 북한의 사회 개혁에 따라 일제 치하에서 누려온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을 모두 박탈당한 뒤 월남한 집단으로, 이들이 반공전위역의 청부 테러단이 된 이유는 생계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대식은 미군정과 극우 세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해석했으며, 정종식은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월남해 우익세력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김평선은 서청을 일종의 ‘민병대’로 규정하였다. 그는 또 서북청년회의 폭력 동기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이념적, 세속적 차원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보았는데, 지도부는 정치적 차원의 기득권 수호, 단원들의 경우에는 세속적 차원의 생존 전략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sup>7)</sup>

그 이후 서북청년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폭력의 동기와 행위에 관심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결국 서북청년회는 ‘백색테러단’, ‘역겨운 단체’ 등으로만 기

5) 김점근,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박영사, 1974), 146.

6) 주목할 것은 제주4·3반란사건을 ‘제주4·3항쟁’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반란과 폭동의 성격을 이유있는 항변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점에 있다. 특히 제주4·3사건과 연관된 서북청년회의 연구사적 검토로 구체적으로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5권(전예원, 1998), 395-416을 참조할 것.

7)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임대식,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 역사문제연구소 외 엮음, 『제주4·3연구』(역사비평사, 1999); 정종식, 「서북청년회의 결성과 활동」(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평선, 「서북청년회의 폭력행위 연구: 제주4·3을 중심으로」(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역이 고착되어 버리고 말았다.<sup>8)</sup>

이와 반해, 서청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들(손진, 선우기성, 문봉제)의 회고록과 신문 연재 등이 있고,<sup>9)</sup> 후대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서는 많지 않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검인정교과서 좌편향 논쟁에서 조선말기에서 독립운동-건국-6·25 등 한국근대화에서 이르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소홀히 기술되었다는 각성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한국기독교사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서청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업적이 나오게 되었다.<sup>10)</sup>

## II. 분단과 남북한의 해방정국

한국의 해방은 제2차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미국이 일본 본토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월 6일과 9일에 원자탄 2발을 투하하면서 일본 천황의 무조건항복 선언으로 이루어졌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과 오랫동안 싸워왔던 미군에 비해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었고, 소련이 일본에 대항하여 선전포고한 것은 전쟁의 막바지인 1945년 8월 8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탄의 투하일이었다. 소련군의 파죽지세에 놀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8월 13일 한반도를 38선을 경계로 분할하기로 서둘러서 결정, 소련에 통고했는데 스탈린은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sup>11)</sup> 연합국들은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권국가로 세워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문제는 미군이 남한으로 진주한 것보다 소련군이 북한으로 더 빨리 진주한 것이고, 소련군정은 이미 한반도 공산화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남한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귀국을 서두르고 있었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익 조직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국의 초기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승리로 이끈 24군단 사령관 존 하지 장군은 한국에 대한 아무런 준비된 지식도 없이 한반도로 향했다.

---

8) 서북청년회의 폭력행위를 초점으로 특집기사화한 언론잡지사와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역사비평』(제주4·3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1998.2), 『한겨레신문』(‘서북청년단 재건’ 파문....도대체 어떤 단체였길래, 2014.9.29.), 『제주의 소리』(“경찰복과 군복, 빨갱이 사냥의 합법성” 2014.5.14), *News & Joy*(서북청년회①, 1946 서울, 백색테러단체의 탄생, 2018.4.19) 등이 있다.

9) 대표적인 회고록으로 선우기성, 『어느 운동자의 일생』(배영사, 1987). 문봉제, ‘서북청년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2-1973. 손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등이 있다.

10) 그 대표적 두 연구자로 ① 박명수,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공저, 2014), 『한경직 목사와 한국교회』(공저, 2015), 『건국투쟁』(2015), ②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등이 있다.

11) 38선 분단에 관한 연구는 많은 논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해방전후사의 인식 1』(한길사, 2020), 제15쇄, 86-88을 참조할 것.

## 1. 소련군 진주와 급속히 전개된 북한의 공산화 과정

소련군은 일본군이 항복하기 1주일 전인 8월 9일에 한반도에 진입하여 신속한 속도로 점령해 나갔다. 소련군은 8월 26일 평양에 들어오자마자, 조만식에 의해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인민위원회(평남정치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소련은 당시의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처럼 점령지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장 실시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인민위원회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려고 했다.

인민위원회의 명분은 좌익과 우익을 모두 끌어모은 좌우합작의 연립정부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련군정은 인민위원회의 숫자를 조만식의 우익과 현준혁의 좌익을 16대 16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그것이 소련군이 파놓은 함정임을 알고 협조를 거부했다. 그러자 소련군정은 가면을 벗고 좌익만으로 이루어진 정권, 즉 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루어진 계급정권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 의도는 9월 14일에 발표한 ‘인민정부 수립요강’에 드러났다. 그런 정부는 남한의 미군정과 협의해서 세워질 통일정부가 아니었고 북한의 단독정부였는데, 그런 소련의 의도는 9월 20일의 스탈린의 전문에서 드러났다. 그것은 비밀이었기에 미군정은 소련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

1946년 2월 8일, 마침내 북한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는데, 김일성이 위원장이었다. 당시 공산국가에서는 인민위원회는 정부를 의미했기에 실제적으로 김일성의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인민정권이였다.<sup>12)</sup> 이것은 남한의 대한민국 건국보다 무려 2년 6개월 앞선 일이었지만,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치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이 위원회는 소련군정이 제시한 공산혁명을 즉시 추진했다. 그들은 1946년 토지개혁이란 미명하에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했고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다. 그러나 분배된 것은 토지의 경작권이지 소유권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8월에는 산업체와 금융기관을 국유화했으며, 11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도, 시, 군 인민위원 선거를 거쳐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 1947년 12월에는 ‘화폐개혁’을 통해 국민의 화폐자산을 몰수해 국유화했다. 이런 엄청난 변화들은 독자적 정부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일이었다. 북한에서의 급속한 공산혁명의 과정에서 「김일성의 20개 정강」이 강조했던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분자에 대한

12) 여기에서 인민은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자본가, 지주, 고급관료 등이 제외된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대자본가, 지주, 고급관료들을 제외한 사람들만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통치형태이다. 더 자세한 것은 양동안,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치사상용어 바로 알기』(대추나무, 2020), 179.

무자비한 투쟁'이 일어났다.<sup>13)</sup> 따라서 기존의 식자층과 유산자층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산체제에 대한 저항은 죽음이나 시베리아 강제노동을 의미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이었다.

무서운 공산주의 체제가 북한 전역을 뒤덮어갈 때, 저항하는 북한인들도 있었다. 주로 엘리트층에 속한 소수의 지주들과 기독교인들로서 대부분이 학생과 청년들이었다. 최초의 저항은 해주 9.16반공사건이었다. 해주 공산당 본부를 습격하여 그곳에 갇혀 있던 우익인사들을 석방한 것이다. 김인식, 이영호 등 주동자들은 소련군의 보복을 피해 서울로 탈출했다. 두 번째는 함경남도의 함흥과 영흥에서 소련군의 만행에 저항해 시위한 반공의거사건이다. 소련군의 만행은 식량과 산업시설의 강제반출이었다. 소련군은 자기 나라의 산업부흥을 위해 북한의 공업시설을 일본으로부터 전리품이라는 명분으로 반출시켰다. 세 번째는 가장 사상자가 많고 파장이 컸던 신의주 반공학생사건(1945.9.18-23)<sup>14)</sup>이었다. 네 번째 1946년 3월 '평양 장대현교회 사건'<sup>15)</sup>이었고, 다섯

13) 「김일성의 20개 정강」 중 ②항에서 드러났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및 조선임시정부 수립>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수립될 통일된 임시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일성의 방송연설로 발표된 <20개 정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온갖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 ②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금지할 것. ③ 전체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민주주의적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기타 민주주의적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할 것. ④ 전조선 인민은 일반적·직접적·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로써 일체 지방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⑤ 전체공민들에게 성별·신앙 및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치경제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⑥ 인격·주택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며 공민들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⑦ 일제통치시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일체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고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선거할 것이며 일반공민에게 법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 ⑧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업·농업·운수 및 상업을 발전시킬 것. ⑨ 대기업소·운수기관·은행·광산·산림을 국유로 할 것. ⑩ 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며 장려할 것. ⑪ 일본인·일본국가·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에 속한 일체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가 관리할 것. ⑫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정하여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들과 투쟁할 것. ⑬ 단일하고도 공정한 세납제를 제정하여 누진적 소득세제를 실시할 것. ⑭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며 13세로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는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⑮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 ⑯ 전반적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 들을 광범히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따라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 ⑰ 민족문화·과학 및 예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도서관·라디오방송국 및 영화관의 수효를 확대할 것. ⑱ 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요구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학교들을 광범히 설치할 것. ⑳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하며 그들에게 방조를 줄 것. ㉑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0166&cid=42958&categoryId=42958&expCategoryId=42958>(검색일: 2020.7.11.)

14) 용암포 제일교회에서 공산당과 소련군의 찬양대회를 보고,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가서 공산주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발단되었다. 그래서 공산당 성토회로 바뀌었고 공산당은 적위대를 투입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십명이 다치고 제일교회 흥 장로가 맞아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신의주 6개 중학교의 5천여명이 항의행진을 했는데, 소련군은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관총 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학생 23명이 죽었고, 수백명이 다쳤다. 2천여명이 체포되고, 그 중 100여명이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15)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는 기독교계의 3·1운동 기념행사를 금지하고, 평양

째로 1946년 11월 ‘일요일선거 거부사건’<sup>16)</sup>이었다. 살아남은 학생들은 급히 남한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일반인들의 월남이 줄을 이었다.

## 2. 남한의 상황: 건준(建準)과 인공(人共)의 등장과 경제적 혼란

해방후 남한에서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 세력은 좌익이었다. 일본 총독부의 권유로 여운형이 8월 16일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그것을 모방한 지방 건준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건준은 산하에 청년치안대를 조직하였다. 서울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약 2,000명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동원하는 한편, 지방에 지부를 결성하기 위해 200명 이상을 지방에 파견했다. 그 결과 8월 25일까지 140개 이상의 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렇지만 3주도 안된 9월 6일, 여운형은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공산주의자 박헌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에 따라 지방의 건준위들도 인민위원회들로 바뀌었다. 그러나 인민공화국은 총선거나 국민대회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상의 정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9월 8일,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그것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은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약속하지는 않았으며,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아직 박헌영의 좌익공산세력과 미군정의 갈등, 대립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은 치안유지가 최우선 과제였고 좌익을 탄압하거나 우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방초기, 건국운동의 주도권은 좌익에게 넘어갔다. 여운형의 건준과 박헌영의 인공 등 공산좌익의 조직화를 지켜본 우익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귀국함에 따라 세력을 결집해 나갔다. 송진우,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이 결성되었으며, 미국에서 외교노선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도 10월 16일 귀국하였고, 중국 중경에서 활동 하던 김구 등 임시정부 수반들도 11월과 12월에 귀국하였다.

남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혼란이었다. 해방으로 인해 일본 경제권에 묶여 있던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물자와 자금의 순환이 마비됨에 따라 생산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했다. 1946년 남한의 제조업 생산액은 1939년에 비해 무려 75%나 감소하였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한의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시기에 일제가 건설한 공업시설은 주로 북한에 분포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

역 앞에서 인민위원회가 주최하는 기념집회에 참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신도 5천명이 모인 가운데 단독집회를 강행했고, 적위대원들이 황은균 목사를 연행하려하자 이에 분개하여 시가 데모를 벌였다. 김상태,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1998.11), 206.

16) 일요일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성한 예배주일인데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일로 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평안도 기독교계는 선거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 기독교인 상당수가 이 선거를 거부했다. 김상태, 위의 논문, 206.



### III. 월남(越南) 이후 서북청년들의 활동상

#### 1. 남한에서의 정착

북한의 소련군정과 그 앞잡이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의 압제로부터 38선을 넘어 탈출한 북한 사람들의 숫자는 해방에서 1946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50만 명에 이르렀다. 그중 단신으로 38선을 넘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고통이 가장 컸다.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거리를 헤매던 그들은 빈 공간을 찾아 고향사람들끼리 모여 합숙을 시작했다. 빈 공간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 기숙사, 창고건물, 사찰 등이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서울 합숙소는 60여개에 이르렀고 그 인원은 2,000-3,000명에 이르렀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종로구 권농동의 호림장<sup>18)</sup>, 효창공원 옆의 함북청년회 합숙소, 삼각병원 2층, 옛 목정초등학교 자리의 대원장, 용산 해방촌의 천막촌 등이었다. 각자 동향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그 명칭도 고향 이름을 따랐다. 진룡동지회(평남 진남포와 용강군 출신), 대동강동지회(평양 출신), 압록강동지회(평북 신의주 출신), 양호단(함남 원산 출신, 김성이 조직한 항일 비밀단체), 수양산특별동지회(황해도 출신), 구월산동지회(황해도 출신) 등이 있었다. 우선 일감을 찾는 가운데, 특히 호림장의 서북청년들은 1945년 11월 말에서 12월초에 걸쳐 중국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자 그들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 그들은 김구가 머무는 경교장, 신익희가 머무는 낙산장, 이시영 등이 머무는 충무로 한미호텔의 경비를 맡게 되었다.<sup>19)</sup>

서북청년들이 38선을 넘어 남한에 정착할 때, 이미 건준과 인민공화국 산하기관들의 지방조직화로 좌익노조에 의해 기업체의 접수는 물론이고 살인, 방화, 기물파괴 및 폭력사태 등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월남한 청년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다. 1946년 봄, 월남한 문봉제의 눈에 비친 서울 장안은 길거리를 도배하는 좌익언론의 빼라 및 벽보와 난무하는 좌익 폭력의 혼란스런 실상이었다. “동아, 조선, 대동 등 이부 신문을 제외하고 현대, 인민, 해방, 중앙일보 등 많은 신문, 잡지가 좌익 일색이었고 종각을 비롯한 종로, 충무로 일대에 나붙는 벽보나 비라도 그들의 것뿐이었다. 우익 벽보는 눈을 비벼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우익의 무기는 대체로 맨손이었던 반면에 좌익은 해머, 단도 등을 들고 설치는 폭력, 힘의 우월은 장안을 그들의 판도로 이미 굳혀가고 있는 것”이었다.”<sup>20)</sup> 드디어 좌익의 만행에 개탄한

17) 남한의 경제적 혼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은 교과서 포럼 편, 『한국현대사』(기파랑, 2008), 39를 참조할 것.

18) 합숙소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합숙소로 종로3가 종묘공원 옆의 호림장이다. 그 건물은 일제시대 노구치 피복공장의 여공 기숙사였으나, 중경임시정부의 특파사무국 사무실로 쓰게 된다. 그러나 미군정의 압력으로 임정의 특파사무국이 해체되자, 1945년 10월, 호림장의 서북청년들은 대한혁신청년회(혁청)으로 바꾸고, 유진산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19) 이주영, 『서북청년회』(백년동안; 2015), 22-25.

그들은 반공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서청의 투쟁은 침묵으로 방관하던 대다수 국민들을 반공대열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월남한 북한청년들이 조직을 서두르는 동안, 남한내의 우익 청년들도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그런 조직중에서 중요한 두 청년단체를 소개한다면, 하나는 1946년 5월 13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청년단이었다. 이 단체의 중요한 임무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집회를 보호하고 청중을 동원하고 인도하는 것이었다. 즉 그 회원들은 이승만의 근위대 역할을 자임하였다. 다른 하나는 1946년 4월 9일 조직되었고, 김두한이 이끌었던 대한민주청년동맹이었다. 일제치하에서 주먹으로 명성을 날린 김두한은 그 별동대를 거느리고 좌익세력의 활동을 분쇄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들 청년 단체들은 경찰의 보조조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서청회원은 이북에서 38선을 넘어온 피난민이므로, 다른 피난민처럼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일정량의 식량과 구호물자들, 광목, 이불, 면사, 신발, 옷가지 등을 배급받았다. 그 구호물자들 일부를 시중에 팔아서 운영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 우익단체들인 독촉국민회, 애국부인회 등의 도움을 받았다.

## 2. 서북청년회의 특징

서청의 대공투쟁이 초인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조직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① 반공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했다. 그들은 이북 고향에서 해방 후 진주한 소련군과 그들의 앞잡이인 김일성 일당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무자비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에 직접 저항하기도 했다.

②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은 단체였다. 서청 회원들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중학교(지금의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그들의 월남으로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엘리트층을 많이 상실하고 말았다.

③ 합숙생활을 통해 동지적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그 때문에 합숙소 생활은 필수적이었다. 고향 친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합숙소는 도별로 이루어졌다. 합숙소는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토론하고 공부하는 곳인 생활공동체였기에 학습장이고 동시에 수련장이었다. 언제 적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기에 항상 긴장하고 경계했다.

④ 좌익과의 투쟁에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며, 반드시 보복한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었다. 좌익에게 우두커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 이상의 보복이 따랐다.

20) 문봉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643)<제30회> 서북청년회', 『중앙일보』(1972.12.23.(검색일: 2022.8.5.)).

죽기를 각오하면서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sup>21)</sup> 이런 특징은 향후 준군사조직의 성향을 나타내면서 경찰과 군에 대거 입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 3. 주먹패와의 관계

서북청년회의 단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다니던 지식인이었지만, 그 중에는 주먹으로 유명한 인물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요새 말하는 조직폭력배(깡패)가 아니라 일제 때 일본인들에 맞서 정의의 주먹을 날리던 김두한 유형의 협객들이었다. 이들을 다룬 드라마로 협객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한 SBS의 「야인시대」(2002-2003)가 있다. 주먹패로 대표적으로 3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화룡: 평양 출신. 명동지역의 상권을 지배하면서 종로패의 김두한과 경쟁하였다.

② 이성순: 평북 신의주 출신. 시라소니로 알려짐. 장면박사의 경호를 맡기도 했다.

③ 황병관: 일본 메이지대학시절 올림픽대회에 출전했던 씨름선수. 그러나 애석하게도 1952년 5월 부산 피난시절 깡패의 총에 맞아 비명에 갔다.

### 4. 서북청년회 창설 이전의 활동상

서북청년회는 1946년 11월 30일 종로 YMCA 대강당에서 결성되었다. 그때까지의 조직과 활동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출신 청년들은 출신 도별로 조직을 결성하였다. 대한혁신청년회(함남 출신), 함북청년회<sup>22)</sup>, 황해청년회<sup>23)</sup>, 북선청년회(北鮮靑年會)<sup>24)</sup>, 양호단(養虎團), 평안청년회 등을 결성하고 각자 나름대로 대공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활동상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김일성 암살미수사건이다.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평양군중집회에 나타난 김일성을 노렸지만 모두 실패했다. 1946년의 경우는 백의사(白衣社)에 의해 이루어졌다.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백의사는 중국 장개석 국민당정부의 낙양군관학교 출신인 염동진이 중국의 남의사(藍衣社)를 본떠서 만든 것이었다. 남의사는 중경임시정부의 중앙정치공작대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해

21) 손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9-10.

22) 1946년 6월에 조직되었는데 장소에 따라 둘로 갈렸다. 종로파는 장윤필, 장필홍, 장창원, 임일, 반성환, 전두열, 윤하선 등이고, 충무로파는 허금룡, 김계룡 등이 속했다.

23) 중심축은 해주 9.16반공사건에 가담한 김인식과 이영호였다. 그들은 황해도 출신 정치인들 이승만, 김구, 백남훈, 그리고 기업인 강익하를 고문으로, 지도자로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를 모셨다. 주로 38선을 서해를 통해 넘었기에, 인천이 주요 거점이 되었다.

24) 1946년 4월 용산구 남영동에서 구성된 고향과 관계없이 조직된 단체.

방 후에는 북한에도 지하조직이 있었다.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서울에서 김제철(39세), 김형집(19세), 최기성(20세), 세 사람이 평양에 파견되었다. 며칠 뒤 백의사 요원인 이성열도 염동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평양으로 떠났다. 드디어 1946년 3월 1일, 거사일이 찾아왔다. 김일성이 연단에 나타났을 때, 김형집은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나 수류탄은 계단 밑으로 떨어졌고, 경비중이던 소련군인이 썩싸게 멀리 던져버리는 순간 터지고 말았다. 김형집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3월 13일 자정 무렵, 김제철 등은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북조선임시위원회 서기장인 강양욱 목사의 집을 습격하여 수류탄을 던지고 권총을 난사한 사건도 일어났다. 그 가족의 일부만 사살했을 뿐, 강양욱을 암살하는데 실패했다. 김제철은 현지에서 이희두와 최의호 등 5명을 포섭했다. 총격전 과정에서 최기성이 사망하고 이희두는 총상을 입었다. 결국 평양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성열만이 천신만고 끝에 3월말 서울에 돌아왔다.

둘째로, 북한실정을 폭로한 순회강연이었다. 당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이 공산혁명으로 자상낙원이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었다. 실제로, 좌익들의 선전선동이 먹혀들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공산당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런 선전이 허구임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이 38선을 넘어온 서북청년들의 북한실정 보고대회 때문이었다. 그들은 북한이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조장으로 야만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생지옥이 되었음을 증언하였다.

그 최초의 보고대회가 1945년 11월 28일 박용만의 조선유학생동맹이 개최한 풍문여고 집회였다. 그것은 11월 23일 평북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대한 진상을 알리는 보고대회였다. 그런데 강연장은 공산당이 동원한 좌익학생들로 꽂았고, 이들은 소란을 피웠다.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잠복해 있던 우익의 혁신청년회 대원들이 강연을 방해하는 좌익학생들을 끌어낸 것이 패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좌익테러단이 쳐들어왔고, 급기야 우익의 혁신청년회와 좌익의 아호기파의 길거리의 패싸움으로 번져갔다.

풍문여고의 북한실정 보고대회는 공산당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큰 의의를 지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청은 전국 각지에서 북한실정 보고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파견되어 반공과 건국의 투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강연 내용은 북한에서 직접 체험한 소련군과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한 것이었다. 특히 소련군의 약탈, 강간, 도둑질 등을 예로 들면서, 손목시계만 보면, “다와이(내 놔)”라는 말과 함께 시계를 강탈하고 손목에 시계를 주렁주렁 차고 자랑한다는 것이었다. 또 소련군은 압록강 수풍댐 발전소, 흥남 비료공장 시설 등의 산업시설을 통채로 뜯어 소련으로 실어갔고, 식량까지 실어갔다고 증언했다.

셋째로, 서북청년회는 북한실정을 폭로하는 행사를 여는 가운데, 38선 철폐운동도 벌였다. 1946년 3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는 2만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의 38

선 철폐대회가 열렸다. 조선민주당 부당수인 이윤영을 대회장으로 하고 사회자는 문봉제<sup>25)</sup>였다. 북한의 각 지역별로 소련군과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보고했으며, 이승만박사는 격려 메시지를 보내오고, 조소앙은 중경임시정부의 대표로 참석하여 격려사를 했다.

넷째로, 서청은 서울 소련영사관을 습격하여 반소반공운동을 벌렸다. 1946년 3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38선 철폐국민대회를 마친 다음 서북청년들은 “때려부셔라. 38선!”, “때려부셔라. 공산당!”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그들은 종로를 거쳐 김구의 숙소인 서대문의 경교장까지 행진했고, 다시 정동 골목으로 빠져 소련영사관으로 돌진했다. 영사관 넘어 돌맹이를 던지자 샤부신 총영사 등 직원들이 급히 피신했다. 미군정 기마대들의 출동으로 시위대는 해산되었지만, 다시 여러무리들로 분산되어, 서울 중심부의 좌익기관들을 습격했다. 그에 따라 인민위원회 본부, 조선공산당 본부, 해방일보사, 인민일보사, 현대일보사, 중앙일보사, 자유신문사 등이 습격을 당했다.<sup>26)</sup>

다섯째로, 좌익노조 파업을 분쇄하고 조직이 정상화되도록 협조한 일이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한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좌익은 일제가 남긴 모든 산업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을 서둘렀다. 국영기업체인 철도, 전매, 체신, 경전(지금의 한전) 등에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다. 1945년 11월 5일, 이것들을 모두 총괄하는 노동조합 전국평의회(全評)까지 조직되었다. 허성택이 위원장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평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에 외곽조직인 농민동맹, 청년동맹, 학생동맹, 문학기동맹, 법률가동맹, 예술가동맹, 여성동맹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생산공장은 90%이상이 일본인에 의하여 경영해온 적산공장이었다. 남한에 미군진주가 예상외로 지연되어 통치의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공장과 산업체는 노동조합과 자치위원회에 의해 운영, 관리하게 되었다. 심지어 한국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공장조차도 친일파 반민족자들의 기업체로 매도당하면서 자치위원회에 의해 경영권이 박탈당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영등포 경방, 양평동 고무공장(사장 김연수)이었다. 특히 양평동 공장은 전평 위원장인 허성택이 직접 장악하고 있었던 지휘부였다. 경영권을 박탈당한 경성방직측에서 양평동 공장과 영등포 공장을 전평 자치위원회로부터 탈환해달라는 부탁을 서청에 요청해왔다. 3대의 트럭을 타고 달려간 서청회원들은 전평측과 처절한

25) 평남 개천 출신으로 동경의 일본대학 졸업한 후 고향에서 동양상회를 경영한 기업가로서 월남하여 평남동지회를 조직하여 반공전선에 나섰다. 그러나 서북청년회가 발족될 당시, 서청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족통일총본부에 가담했다. 그런데 1947년 여름 지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대동청년단이 창설되었는데, 그것에 합류를 놓고 합류파와 잔류파간의 내분이 일어났다. 잔류파는 1947년 9월 26일, 천도교강당에서 문봉제를 위원장으로, 김성주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6) 이주영, 『서북청년회』, 34-35.

난투극을 벌였다. 마침내 승리한 서청이 승리하면서 경방은 질서를 회복했다. 경방측은 서청 간부인 송태윤을 공장장으로 임명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좌익노조 간부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서북청년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한 인물들 11명(김성주, 반성환, 장창원, 장동춘 등)은 미군정의 수도경찰청에 구속되었다.

전평의 본거지인 양평동 공장이 정상화되자, 경인지구의 다른 공장들도 서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 여세를 몰아 서청은 인천지구에까지 진출했다. 인천의 동양방직공장에서도 서청은 적도(敵徒)를 물리치고 동양방직공장에 대한노총 분회 간판을 거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서청은 조선화학비료공장, 조선기계, 조선제마, 조선차량, 조선알미늄공장, 노다 장유(野田醬油) 등 인천의 우수한 공장들을 차례로 전평으로부터 탈환했다.

서청은 단순히 좌익의 파업과 폭동을 분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었다. 1946년 9월 총파업의 경우,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에 가세했을 때 파업반대 기술자로서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에서 인천·수원·동두천·개성방면의 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고 철도·전화도 복구되도록 협조하였다.<sup>27)</sup>

이러한 서청의 투쟁목표는 생산업체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전평에 대항한 대한노총을 조직하고 서청회원들의 직장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그 결과 대한노총 중앙본부의 임원자리는 대부분 서청 출신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은 경인공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전국 도처의 경전, 철도, 석탄공사, 대한중석 등 기업체에서 발생하였다.<sup>28)</sup> 이처럼 건국을 위한 반공투쟁에서 전위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 5. 서청과 미군정과의 관계

해방 당시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신망이 높은 민족진영의 거두 송진우와 접촉했다. 그러나 송진우는 중경임시정부의 귀환을 기다리겠다고 거절했고, 조선총독부는 결국 고심하던 차에 좌익의 여운형에게 접근하여 그의 허락을 받아내었다.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권인수 권한과 막대한 자금을 받은 여운형은 신속하게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을 지방으로까지 145개로 확대하여 남한 전역을 장악하였다. 그 뒤 박헌영은 건준에 합세하여, 9월 14일에는 전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에 따라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간판을 바꾸게 되었다.

미군정의 기본정책은 치안유지에 있었으므로 일제 때 경험있는 경찰과 관리들을 중

27) 박갑동, 『박헌영』(인간사, 1988), 4판, 151.

28) 더 자세한 내용은 손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10-21을 참조할 것.

용할 수밖에 없었다.<sup>29)</sup> 또한 소련과는 2차대전시에 연합국으로 참전했기에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한 적대감은 강했지만, 소련이 주도한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한 인물이 적었기에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경각심이 적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반도문제에서 소련과 협조하여 해결되기를 원했다. 미군정은 중립정책, 좌우합작 연립정책을 고수했기에 좌익들의 활동을 방관했다. 남한내의 좌익의 충돌과 소요사태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을 원치 않았으며 가급적 중립을 취하려는 태도를 견지했다. 심지어는 미군정 고위 책임자가 좌익의 행사에 참여하여 축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1945년 11월 5일 서울에서 각 노조대의원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평이 결성되었을 때, 그 결성식을 미군정청이 허락한 점이다. 따라서 미군정 경찰도 공산당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경찰의 힘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서청을 비롯한 우익청년단체들이 좌익 폭도에 맞서서 맨주먹으로 혈투를 벌렸던 것이다.

후일 미군정이 우익단체에 호의적 반응을 보인 계기가 된 것은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1일 대구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군정의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였다.

미군정의 경찰력으로는 전국 도처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좌익의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의 산간지역에서는 공비출몰이 빈번했다. 좌익들은 야간에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하는가하면, 우익 청년단체의 간부 집을 습격하여 살해하고, 입산(入山)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에 의해 경무국이 창설되었다. 서청은 그런 취약지역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경찰지서를 지키기 위해 교대로 경찰들과 함께 보초를 섰으며, 그런 과정에서 경찰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미군정은 경무부장으로 조병옥, 수도경찰청장으로 장택상을 임명하였다. 둘다 한민당 간부였다. 미군처럼 사단제로 편성된 경찰의 병력은 1945년 11월, 1만5천명으로 출범했으며, 다음 해 7월에는 2만5천명으로 증강되었고, 1948년 8월에는 34,000명에 이르렀다. 서청은 조병옥, 장택상의 신임을 받으면서, 군정 경찰과 자연스럽게 협조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그래서 서청이 대공투쟁에서 불법을 저질렀어도 경찰은 가볍게 처리하거나 묵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무부장 조병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하지 중장이 서청을 해체하라고 지시한 것을 세 번이나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중장은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총)과 같은 좌익

29) 일본이 항복할 당시, 식민지 한국경찰의 약 30%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있었고, 그 중 한국인 약 80%가 미군정에 의해 재기용되었다. 더 자세한 것은 김진웅, 『미군정 기 국내정치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대구사학』, 97집, 2009, 6.

단체를 해산시키면 우익단체도 이처럼 함께 해산해야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논리였다. 조병옥은 “가혹한 북한 공산치하에서 고향과 부모형제와 생이별하고 월남한 그들에게 다소 불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북청년회와 같은 열렬한 반공적 우익청년단체를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자유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기관인 미군정치의 본래의 임무와 사명에 어긋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또 서북청년회를 해체하는 경우 국립경찰만으로는 남한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실상이므로 서북청년회를 절대로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sup>30)</sup>

후일 서청이 하지 장군과 화해하게 된 계기는 유엔이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라는 결의를 하면서부터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미소공동위원회 대신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라는 결의를 했다. 그것은 이승만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하지 중장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 IV. 서북청년회의 창설과 지방으로의 진출

### 1. 서청의 창설과 역사적 정체성

서북청년회는 대한혁신청년회, 함북청년회, 황해회청년부, 북선청년회, 양호단, 평안청년회 등 이북출신 우익 청년단체가 통합하여 1946년 11월 30일, 결성되었다. 이들은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 전취, 균등사회의 건설, 세계평화의 건설”을 강령으로 내걸고 좌익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했다. 12월 13일에 열린 1차 중앙집행위에서는 위원장으로 평남 정주 출신의 선우기성 등 임원 인선을 완료했다.<sup>31)</sup>



선우기성(1909-1988)

서청이 서둘러 조직을 결성한 이유는 1946년 9월 12일 대한독립청년단(단장 서상천)과 10월 9일 민족청년단(단장이범석) 등의 창립선언이 계기가 되었고, 10월 1일 대구폭동이 발발하자 이에 대항한 반공세력의 결집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1946년 9월에 발발한 중국대륙의 국공내전에서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모택동의 공산군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전황을 전개한 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30) 조병옥, 『나의 회고록』(1959), 149-150.

31) 류상영, 「8.15 이후 좌우의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4』(한길사, 1989), 109.



서청은 이념적으로 중경 임시정부와 인연이 깊었다. 그러기에 심정적으로 이승만보다는 김구를 더 따랐다. 이승만을 더 지지한 인물로는 민족통일총본부에서 일한 평남 출신의 문봉제 정도였다. 서청의 중앙총본부는 동아일보사 3층에서 시민회관(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의 3층으로 옮기면서 더 전투적이 되어갔다. 그들은 행사나 시위를 할 때마다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 '서북청년행진곡'을 불렀는데,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부르던 '독립군행진곡'에 가사를 변형시킨 것이었다.

우리는 서북청년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38선 넘어 매국노 쳐버리자  
진주(眞珠) 우리 서북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등잔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밝힌 꽃봉이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서청은 어떤 성격의 집단인가? 서청의 역사적 정체성은 서북이란 지역적 특성과 독립운동을 선구적으로 전개한 민족주의성향,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전파를 핵심키워드로 들 수 있다. 19세기말 이후 서북 지역에서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민족운동에 나섰던 것이고, 서청은 이런 민족적 정통성을 계승하였다.

서북지역의 대표적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인으로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으로 이어지며,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 오산학교, 평양 송실학교 등의 설립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청을 이끌었던 서청 초대위원장 선우기성을 통해, 그리고 서청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한경직 목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우기성은 평북 정주 출신으로, 임정요인이던 선우혁, 선우훈, 선우섭 등의 조카였다. 민족운동가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오산학교 재학 중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의 숙부인 선우혁과 선우훈은 모두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선우혁은 1918년 중국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 당원으로, 국내에서 이승훈을 만나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상해 임정에 참여했다. 그는 상해에서 교회와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광복 후에도 상해에서 거류민단 단장을 지냈다.

선우기성은 출옥 후 만주로 가서 항일운동에 뜻을 품고 있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1941년 봄 상해로 가서 선우혁과 함께 지내다가 광복이 되자 귀국했다. 이처럼 선우기성은 서북지역 민족운동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었다.<sup>32)</sup> 선우기성은 서청의 활동이 서북 지역의 애국적 민족운동을 계승한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저서를 발간했다.<sup>33)</sup>

한경직 목사도 또한 오산학교, 송실전문학교 출신으로 서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산학교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했다. 한경직도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등에게서 찾았다. 오산학교는 3·1운동을 주도한 기독교계 학교이기에 서북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족주의 학교였다. 1945년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했을 때, 한경직은 한국에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지지하며 한국의 대내외 정치에 다른 정부의 영향력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김구의 임정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밝혔다.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애국적 정체성과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둔 민족운동의 핵심 주체였음을 내세웠다.<sup>34)</sup>

한경직은 월남 이후 영락교회를 설립했으며, 서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한경직은 월남 기독교인들이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방촌을 주선했다. 이곳에 자리잡은 월남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으며, 해방촌의 청년들은 서청에 가입해 활동했다. 이들은 해방촌 주위에 천막을 치고 숙식하며 지냈다. 그들의 나이는 거의 20대와 30대였다. 이보다 어린 10대들은 서북학생총연맹에 가입했으며, 서북청년회와 함께 활동했다. 다음과 같은 인터뷰는 영락교회의 청년회가 서청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했나를 잘 보여준다.

그 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겠시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sup>35)</sup>

## 2. 임일의 남선(南鮮)파견대와 조직확장

서청의 창설 이후 서청의 지방 진출은 본격화되었다. 서청의 투쟁력에 고무된 지방

32)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2021, 5쇄), 222.

33) 선우기성의 저서들로 민족운동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을 기술한 『서북의 애국자』(1947.7),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서청의 애국적인 정체성을 강조한 『청년운동의 오늘과 내일』(햇불사, 1969), 『한국청년운동사』(금문사, 1973), 그리고 『어느 운동자의 일생』(배영사, 1987) 등이 있다.

34)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223.

35) 김병희 편저, 『한경직목사』(규장문화사, 1982), 55-56; 윤정란, 위의 책, 224에서 재인용.

의 기업가나 지방유지들, 그리고 치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들의 요청에 의해 지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1947년 남선파견대(대장 임일)가 충남 대전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진출하여 충남, 호남, 경남의 도, 시, 군 지부를 설치하고, 좌익과 투쟁했다. 충남도본부의 경우, 남선파견대 본부 임원들이 겸임하여 조직되었는데 서산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지부가 결성되었고,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 김제, 임실, 남원, 이리 등에, 전남지역의 경우,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담양, 화순, 장성 등에, 충북지역의 경우 충주, 청주, 제천, 옥천, 영동, 보은 등에 지부가 결성되었다. 전남도본부의 경우 제주도까지 조직을 확대했는데, 전국적으로 남선파견대의 활동에 의해 약 57개 시, 군, 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공산좌익과 많은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 와중에서 서청회원들이 불의의 습격으로 살해되기도 했고, 공산프락치로 의혹을 받은 좌익인사들의 암살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 좌익신문사를 습격하여 인쇄시설물을 파괴하기도 하고, 소련군정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예술문화행사를 방해, 제지하기도 했다. 서청은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피의 보복은 불가피했다. 서청이 개입한 크고 작은 주요 사건을 거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충북 영동 국방경비대 사건;

서청 남선파견대가 설치된 이후 수많은 사건이 터졌지만, 가장 참혹한 것이 충북 영동 사건이었다. 그것은 영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의 좌익분자들이 밤중에 서청 합숙소를 습격하여 잠자고 있던 10명의 서청 대원 전원을 대검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 국방경비대는 군대인데 어떻게 서청회원들을 무단으로 살해할 수가 있었던가? 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미군정이 임시로 국방경비 임무를 맡기기 위해 조직한 군대였다. 창설 당시 만주군, 일본군, 일본군 지원병, 광복군 등의 다양한 전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사병은 가두(街頭)모집으로 충당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미군정 초기 좌우합작의 중립정책을 내걸었기에, 공산당을 합법화했고, 그 결과 조선경비대에 입대할 때 신원조회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 이점을 이용해 공산당은 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해 당원을 국방경비대에 입대시켰다. 그 결과 국방경비대는 좌익의 온상이나 도피처가 된 것이다. 특히 좌익장교들 가운데 대학에 다니다가 일본군에 끌려간 학도병 출신이 많았다. 예를 들어, 제주4·3폭동사건과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에 주동자들도 대부분 학도병 출신의 장교들이 많았다.

그 사건은 임일 대장의 명령을 받은 장훈종(張訓宗)이 15명의 대원과 함께 영동에 파견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 서청대원이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을 보고받은 임일은 허태화(許泰和) 훈련부장에게 대전 근처에 있는 대원들을 최대한 대전

본부로 집결하도록 지시했다. 120여 명이 모였다. 20명의 보복결사대는 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새벽2시 정각에 습격을 강행했다. 우선 좌익이 몰려있는 국방경비대 막사에 불을 지른 다음, 미리 매복 중인 서청대원들이 일제히 돌진해 들어갔다. 무기는 몽둥이가 전부였다. 어두운 밤이라 양측의 부상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날이 밝으면서 현장에 국방경비대 책임자, 경찰서장, 태극청년회, 독촉국민회 회장 등이 모여들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임일은 사태수습을 위해 경교장의 김구를 만나서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말했다. 미군정은 경비대 습격을 총지휘한 임일을 체포해야한다고 했다. 영동서장이 미군정과 경찰관계자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서청회원들의 시체를 보여주었고, 송호성 국방경비대 사령관이 사과했다. 그도 군대내에 좌익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수습되었다.

## (2) 서청 경남 지부의 설치

부산지역의 우익들도 서청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서면 일대의 고무공장, 견직공장, 목재공장 등을 운영하는 신흥재벌들은 좌익들의 발호에 떨고 있었다. 그 단적인 예로, 서청이 부산에 진주하기 한 달 전인 1947년 5월, 부산경찰서 권 서장이 백주에 좌익에게 암살당했고, 일주일 뒤에 독촉 엄진영 경남지부장도 좌익에게 암살당했다. 6월 22일, 훈련부장 반성환의 인솔로 30명이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부산의 깡패 두목인 마사이찌(고영복)의 행패에 지장이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마사이찌를 만나서 굴복시켰다.

서청은 부산에 친척 등의 인연이 없어서 광복청년회의 주선으로 적산가옥(일본인이 살던 집) 2층 다다미방을 합숙소로 마련하였다. 그 합숙소도 좌익으로부터 몇 차례 습격을 당했다. 그래서 서청은 좌익의 행포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고, 좌익신문사를 습격하는 등 좌익 타도의 선봉에 뛰어 들었다.

## (3) 부산극장사건:

1947년 7월 초, 부산극장에서 좌익들의 문화인동맹과 민주중보신문 공동주최로 '미소공동위원회 축하 종합예술제'가 열렸다. 당시 문화인과 예술인 가운데는 좌익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당시 서울 덕수궁에서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1945.12)에 따라 제2차 미소공동위가 열리고 있었다.

서청 경남본부는 이 예술제를 분쇄하기 위하여 작전을 세웠다. 거사일은 7월 7일이였다. 서청 대원들은 우선 부산극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무대 아래층에 한창협 훈련부 차장 등 40명이 자리를 잡았고, 위층에는 허원섭 학생부 차장 등 30명이 자리

를 잡았다. 그리고 무대에서 농군의 농악과 춤이 이어졌을 때, 허원섭은 다이어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여서 무대에 던졌다. “꽝”하는 폭음과 함께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에 따라 초만원을 이루던 예술제는 중단되었다.

#### (4) 부산 정 검사 피살사건;

1947년 9월 4일, 부산 지방검찰청 정수복 검사가 서청대원 허원섭에 의해 피살당했다. 정 검사는 사상 담당 검사였는데, 그는 공산주의자로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가 공산당 피의자에게는 관대하고 민족진영 피의자에게는 가혹했기 때문이다. 서청이 정 검사가 좌익이라는 확증을 잡은 것은 8월 14일 남로당 사무실을 습격하면서였다. 탈취한 남로당 명부에서 사상 공안검사인 정 검사가 남로당 비밀당원임을 확인했다.

#### (5) 부산 민전 의장 박경영 피살사건;

뒤이어 일주일 후인 9월 12일에는 이춘식<sup>36)</sup>(전 함남도민회 회장)은 권총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의장 박경영을 쓰러뜨렸다. 민전은 전평과 더불어 공산당의 양대 산맥으로 막강한 조직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민전 의장 박경영은 공산당 기관지인 조선신문사 사장인 동시에 대선 양조장을 경영하는 재벌이기도 했다.

서청 경남본부는 그 이전에 좌익신문사를 습격하여 허위로 공산주의를 찬양, 선전 선동하는 기세를 꺾은 바 있다. 다음으로 민전회관, 해운동맹회관, 남로당사, 민애청회관 등을 차례로 습격하여 점령하기도 했다.

### 3. 서청의 분열과 후기 서청의 활동상

서북청년회는 발족 후 1946년 12월 미군정 여론국에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회원수가 6천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47년 6월에 이르면 2천명으로 감소된다. 좌익과의 상호 폭력과 테러행위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서청 회원들이 조선경비사관 학교나 일반 학교에 입학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후일 대동청년단이 결성되면서 합류파와 잔류파로 분열되었다.

1947년 여름 대만에 있던 중경임정의 광복군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이 이승만박사의 권유로 귀국하였고 그를 중심으로 9월 9일 대동청년단이 창설되었다. 그때 그것에 합류할 것인가를 놓고 합류파와 잔류파간에 내분이 생겼고, 잔류파를 중심으로 후기 서

36) 함남 영흥출신의 서청대원. 호림장 합숙소 출신으로 부산에 파견되기 전인 1947년 2월 말경 평양의 3·1절 행사에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북으로 간 적도 있다. 그 암살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미군정에 의해 체포되어, 1심과 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대법원에 항고 중이던 차에 6·25가 터졌다. 그래서 전쟁 중의 비상계엄하 군법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서 석방되었다.

청이 발족되었다. 선우기성을 중심으로 한 합류파는 대동청년단으로 가고, 문봉제, 김성주, 김경신, 이성수를 중심으로 한 잔류파는 남아서 후기 서청시대를 열어나갔다. 그러나 두 세력 간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상호 폭력, 테러를 행사하기도 했다.

대동청년단에 가담한 합류파는 주로 함경도였다. 함북 출신으로는 장운필, 장창원, 김계룡, 반성환, 임일, 허금룡이 있었다. 함남 출신으로는 조영진, 손창섭이 있었다. 황해도 출신은 김인식, 강원도 출신은 손진이 있었다. 그런데 그대로 남은 잔류파는, 즉 재건파는 주로 평안도 출신이었다. 그 중심인물은 평남의 문봉제와 평북의 김성주였다. 그리고 중심조직은 평남 진남포와 용강군 출신으로 이루어진 진룡동지회와 대동강동지회였다.

후기 서청의 활동상은 대북방송의 재개, 대북공작의 조직, 대북유격대 활동 및 실형민 특별선거구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37)</sup>

#### ① 대북방송의 지속

서청이 건국전에 구축한 중요한 업적중 하나가 대북방송과 북한의 지하조직을 구축한 일이었다. 남한의 서북청년들은 ‘자유의 소리’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다. 그 선무방송은 서청이 조직된 직후인 1946년 12월부터 시작되어 매주 금요일 밤 1회씩 나갔다. 1946-1947.9 기간에 선우기성 서청위원장이 매주 정기적으로 하다가, 서청의 분열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10월에 다시 시작했다. 북한에 지하 청취망도 구축되었고, 대북방송의 역사도 이때 시작된 것이다. 선우기성이 대동청년단에 합류한 뒤에는 여러 인사들이 번갈아 방송을 했다. 그에 따라 방송을 듣고 북한의 각 지역에서 서청에 가입한다는 혈서 서약서와 회원명단이 연달아 서울에 도착하기도 했다.

#### ② 대북공작 활동

후기 서청에서 문봉제가 위원장이 된 이후인 1947년 9월부터는 대원 10여명을 상인, 변절자, 걸인 등으로 위장시켜 북한에 보내 지하조직들과 연결케 했다. 그들은 북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함으로써 6·25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크고 작은 반공 사건이 발생하였다.

37) 손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53-54.

### ③ 대북유격대 활동(계림공작대에서 호림유격대로)

백의곤(총대장)과 인순창(제1대장)과 임광우(제2대장)를 중심으로 한 서청의 계림공작대는 동해안 주문진에 서북청년회 영동지구본부를 두고 흥천군 기린지부, 횡성지부, 묵호지부, 강릉특별지부 등을 두었다. 목적은 대북유격전 및 첩보공작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7년 8월 주문진 북쪽 38접경지역의 기사문리 부근에 북한 간첩이 넘어와 지서 주임을 살해하자 계림공작대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주문진 남쪽 교황리의 민애청 아지트를 공격해 무장공비 7명을 생포해 주문진 경찰서에 넘겼다.

1948년 2월초 38선 바로 밑 명치리 경찰지서 주임이 북한 38보안대에 의해 피살되자 계림공작대는 주문진 주둔 육군부대와 합동으로 보복에 나섰다. 인순창의 부대는 육로를 통해, 임광우의 부대는 해안선을 따라 기사문리로 진격하여 북한 38보안대를 기습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설악산과 오대산을 통해 공비를 남파시켰다. 계림공작대의 인순창 부대와 임광우 부대는 오대산 부근 삼정평(三井坪) 아지트를 공격해 공비 3명을 생포하는 등 게릴라전을 벌였다.

대한민국 건국 후 민간단체인 계림유격대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다시 국방부 제4국 동해특별대에 편입되어 정부기구로 대북 첩보전과 유격전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1949년 2월에 동해특별대는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의 호림유격부대로 재편성되었다. 호림유격대는 주문진을 본부에 두고 유격전을 벌이던 백의곤 부대와 오대산에서 유격전을 벌이던 김현주 부대를 흡수하여 터널과 교량, 전선 파괴 및 북한군 사살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제5대대장 백은곤은 국사봉과 금강산의 내금강에서, 제6대대장 김현주는 38선 이북의 용대리와 서화리에서 각각 대규모의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많은 동료들과 함께 전사했다.<sup>38)</sup>

### ④ 실향민의 특별선거구 설치요구대회

5·10총선을 앞둔 3월 20일 남산공원에서 월남인을 위한 특별 의석 배정을 요구하는 ‘실향민 특별선거구 설치요구’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그들의 요구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실향민의 존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38) 호림유격대의 희생자들은 210명이었다. 이들의 공로를 뒤늦게나마 기리기 위해 1986년 10월 15일 호림유격전적비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안보공원단지에 세워졌다.

## V. 서청과 건국운동

### 1. 서청의 1948년 남북협상에 대한 정세인식

1947년 7월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한국독립 문제는 UN으로 넘어갔고, UN총회에서는 11월 14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나라를 세우라는 남북총선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감독하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 8일 한국에 왔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남한의 좌익들은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도록 결사적인 반대투쟁을 벌였다. 그 이유는 선거가 실시되면 남한에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과 소련군정이 추진하는 한반도의 통일공산 국가형성에 방해물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때 우익진영의 김구와 중도파의 김규식과 함께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하면서 우익진영을 크게 당황하게 했다.<sup>39)</sup>

서청은 누구보다도 통일정부를 원했었다. 그래야 북한의 고향을 찾고 부모형제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서청단원들은 대체로 이승만보다는 김구를 더 존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소련군과 김일성 집단이 자유선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하루빨리 나라를 건국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미군정하에서 무한정 공산주의자들과 투쟁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서청은 그동안 남한에서 속히 건국을 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여 총선거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총선거를 방해하는 좌익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이것이 서청의 건국운동이다.

김구가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서청과 우익청년단체들은 결사적으로 만류했다. 그들은 경교장 앞에서 연좌(連坐)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김구는 끝내 김규식과 북행(北行)을 결행했다. 1년 뒤인 1949년 서청대원 안두희 소위가 김구를 암살한 원인도 김일성에 이용만 당하고 건국을 방해한 김구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39) 김구가 남북협상에 매달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① 한독당 내의 강경파에게 끌려갔다. ② 김구가 장덕수 한민당 외교부장 암살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미군정의 법정에서 서게 되어 모욕을 당했는데, 이승만의 지원이 없어서 서운해 했다. ③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포섭하기 위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파견된 북한 공작원 성시백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다.



## 2. 서청의 제주4·3사건<sup>40)</sup> 개입

남한의 좌익들은 5·10총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으려고 결사적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방안은 수많은 폭동을 통한 결사적 반대, 바로 그것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인명피해가 많았던 사건이 제주도 전체를 폭동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은 제주4·3폭동이었다.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 정상에 봉화가 오르는 것을 시점으로 약 350여명의 무장유격대원들이 총, 죽창, 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제주도내 지서 24개중 12개 파출소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그 결과 5·10총선에서 제주도내 3개 투표소 중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는 극심한 방해공작으로 투표율이 미달되어 선거가 무효화되었고, 남제주군만이 간신히 선거가 치러졌다. 5·10총선거를 전후한 남로당의 만행으로 전국적으로 사상자 846명을 발생시켰고, 습격과 폭행이 1,047건에 달했다.<sup>41)</sup>

서청의 활동 중에서 가장 논란꺼리가 되고 심각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진 것이 바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서청의 개입 문제이다. 서청의 제주도 활동을 부정하는 좌익들의 비판의 요지는 이렇다: “서청은 제주4·3사건의 발생 전에 많은 민폐를 끼쳤고, 좌익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일삼았기에 4·3사건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목되었고, 더 나아가 4·3사건 진압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 배후에는 미군정, 이승만과 조병옥 등이 있었다.”

제주4·3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해인 1947년의 3·1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도민들과 경찰과의 갈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군정은 1947년 3·1사건 때의 발포사건 및 3·10총파업에 대한 합동진상조사를 했는데,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좌익정당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발포로 반감이 고조된 도민 감정을 남로당에서 대중선동하여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sup>42)</sup>

미군정의 민정장관 안재홍은 3·1사건과 민관총파업이 발생하자 그 여파로 박경훈 도지사가 사임하자 후임자를 물색하던 중, 한독당에 몸담고 있던 반공성향이 강한 유해진(당시 43세)을 발탁하였다. 1947년 4월 10일 제2대 제주도지사 유해진이 부임하면서 서청단원 7명을 대동하고 그의 호위를 맡겼다. 이들 서청단원들은 서부두 옛 수협 자리 개인집에서 기거하면서 밤에는 지사관사 주변을 경비했다. 제민일보(濟民日報) 4·3취재반은 “서청은 ‘4·3’의 진압과정에서만 아니라 그 발발 과정의 한 요인으

40) 원래 5공화국시절까지 제주4·3폭동(반란)사건이었으나, 87체제 이후 ‘민주화광풍’을 거치면서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주43사건, 4·3민중항쟁으로 심지어 4·3소요사태로까지 성격이 변질되고 말았다.

41) 박윤식, 『참혹했던 비극의 역사, 1948 제주4·3사건』(휘선, 2011), 136.,

42)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1993.02), 126.

로 거론될 정도로 '4·3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주도에 서청은 '공산당을 때려 잡는다'는 구실 아래 애매한 사람들까지 '때려잡는 일이 많아서 제주도민과 가장 마찰을 빚던 집단의 하나였다. 그런 서청의 제주 출현이 신임 도지사의 호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sup>43)</sup>고 지적하였다.

「G-2보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서청은 미군정의 정보수집활동에도 참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 보고서'의 약칭이다. 미군 CIC(방첩대) 요원들도 제주에 상주하게 된 것은 3·1사건과 총파업 발생 직후인 1947년 3월 중순 경이었다. CIC가 제주에서 주력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우익청년단체의 양성으로 추정된다. 1947년 11월의 「미군정보보고서」에는 “우익 서북청년단 제주도단장 안철은 최근 서북청년단원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소동에 대해 11월 18일 CIC 제주사무소에서 사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정보보고서는 “그(안철)는 자신들이 미국인과 협력할 작정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덧붙이고 있다.<sup>44)</sup>

경남신문에 실린 이경남은 연재기획물 「청년운동 반세기」의 '서청' 편에서 “서청에게 제주도는 악몽의 섬”이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적지 않은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서청은 악몽의 그림자”였다고 회고하여 상반된 시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그런데 중앙에서도 서청을 내려보내긴 했는데, 이들에 대한 숙소나 급식의 대책없이 몸만 파견했다. 중앙에서도 그럴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주에 내려온 서청은 당장 먹고 자는 문제에 봉착했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서 공산당의 실상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공산당으로부터 직접 탄압을 받고 월남한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도민 대다수가 남로당에 호의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횡포가 심했으며 서청은 공포의 대상이었다.<sup>46)</sup>

제주4·3사건의 전후 과정을 통해서 경찰과 서청의 횡포와 인권유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행해졌었다. 인권 침해의 구체적 근거로 두 차례의 고문치사 사건과 한 차례의 총살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 고문치사 사건은 1948년 조천지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김용철(당시 21세)은 좌익의 리더급 학생으로 1947년 3·1사건 피의자로 수배 중이었는데, 피신 중에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 중 6일에 돌연 사망했다. 김달삼의 해주연설문에 따르면, '박헌영 선생 절대 지지와 인민공화국 사수 주장'을 하다가 검거되어 심문 중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고문 경찰관 5명이 전원 구속되고 그 중 3명은 징역 5

43)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전예원, 1994), 404-405.

44) 제민일보 4·3취재반, 위의 책, 428에서 재인용.

45) 이경남, '청년운동반세기', 『경향신문』, 1987.1.28; 앞의 책, 429-430에서 재인용.

46) 위의 책, 146.

년, 2명은 징역 2년형을 받았다.<sup>47)</sup>

두 번째 고문치사 사건은 3월 14일 모슬포에서 양은하(당시 27세)가 사망한 사건이다. ‘조국이 분단되기 때문에 단독선거를 반대한다’는 연설을 한 혐의로 연행되었고, 양은하도 역시 그 무렵 조직활동을 하는 리더급 학생이었기에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했다. 관련 경찰관 6명이 구속되고 그중 5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sup>48)</sup>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무조건 연행한 것은 아니었고 분명히 연행이유는 있었지만 경찰의 고문치사로 잘못되었다. 그러나 강경한 진압행위와 그에 따른 무고한 희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해서 남로당의 무장반란사건의 본질을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로 1948년 3월말 한림면 금릉리에서 미군정을 비판한 좌파성향의 청년 박행구가 경찰과 서청에 잡혀서 집단구타를 당하고 총살로 즉결처분된 사건이다.<sup>49)</sup>

### 3. 제주4·3사건의 발발과 서청과의 연관성

제주4·3사건에 개입된 서청의 가장 큰 의문은 4·3사건을 촉발한 직접적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의 한반도 결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남로당의 반발을 알 필요가 있다.

1947년 10월 28일, 유엔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인구 비례로 비밀투표를 통해 총선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해 1월 8일, 선거감시를 위한 유엔한국위원단이 서울에 와서, 활동하고 북으로도 갈려고 하자, 소련군정과 김일성의 반대로 입북을 못했다. 여기에서 통일정부의 기회가 사라졌다. 그후 2월 26일, 유엔은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 만이라도 선거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5·10총선거를 통해 남한에서만이라도 건국하여 정부를 구성하도록 추진되었다. 이 일련의 모든 유엔 결의사항을 박헌영의 남로당은 결사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8년 2월 7일, 남로당은 30만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무력투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2·7폭동이다. 그 9개 항의 슬로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
2.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3.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통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에 맡겨라.

47) 제민일보 취재반, 『4·3은 말한다. 1』, 556-568.

48) 위의 책, 569-573.

49) 위의 책, 575-576.

4. 국제제국주의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파를 타도하자.
5.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6. 노동임금을 배로 올려라.
7.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8.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9.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만세.<sup>50)</sup>

이는 그 당시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하는 ①유엔의 조선위원단 반대, ②양군 즉시 철퇴, ③단독선거 반대 등과 유사했다.

제주도는 2·7폭동 당일에는 타지역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2·7폭동에 가담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제주도당의 조직을 파악한 후, 2·7폭동을 준비하는 회의 장소를 덮쳐서 1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당 위원 221명을 연행했기 때문이다.

2·7폭동 이전인 1월 22일 경찰이 남로당(복제주군) 조천지부에서 개최된 남로당원들의 불법회의장을 급습했을 때, ‘2월 중순에서 3월 5일까지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켜 경찰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 경찰은 1948년 1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당원 221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그러나 폭동을 모의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구속시킬 수는 없어서, 결국 제1차로 63명을 풀어주고, 3월 초순 전원 석방하였다.<sup>51)</sup>

미군정과 경찰은 5·10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관용을 베풀었지만, 결국 독이 되고 말았다. 석방된 핵심 제주남로당원들이 내친 김에 4·3폭동을 결행했다. 새로 생기는 의문점은 ‘중앙당의 지령없이 독자적으로 결행했는가?’이다.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감행한 것이라면,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 ‘이(李) 동무는 재차 3월 중순에 내도함과 동시에 무장반격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sup>52)</sup>라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즉 신춘회의 실행 초안에 대해 전남 올구가 올라가서 중앙당의 승인을 받고 재차 내려와 무장반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야한다.

해방정국에서 6·25직전 와해직전의 남로당 총책으로 부상한 박갑동은 자신의 저서 『박헌영』에서 제주도 폭동장소로 선택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남한만의 단독총선거에 대한 「적극적 보이코트」지령에 따라 남로당이 대대적인 무장폭동 장소로 택한 곳이 제주도다. 남로당이 굳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택한 이유는 지리

50) 대검찰청 공안부, 『좌익사건실록 제1권(1965), 372.

51) 제주도 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297; 박윤식, 『1948년 제주4·3사건』, 118에서 재인용.

52)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대림인쇄사, 1995), 76.

적인 특수성 때문에 해방직후부터 공산당의 조직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따라서 그들의 선전과 조직활동 등으로 도민의 사상이 자못 붉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sup>53)</sup> 이런 이유로 경찰자체도 도민의 80%이상이 좌익계로 기울어졌고, 특히 중학생과 초등학교 아동에 이르기까지 남로당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박헌영은 2·7폭동을 전후로 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지령은 3월 중순경에 현지 무장행동대 두목 김달삼에게 시달되었다고 증언한다. 당시 중앙당에서는 4·3사건이 터질 무렵, 당군사부 책임자 이중엽과 군내 푸락치 책임자 이재복(민간인, 중앙당 군사부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집중지도로써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했다는 것이다. 또 폭동의 두목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에 보냈다고 증언했다.<sup>54)</sup>

제주4·3사건의 무장대가 기습공격과 더불어 살포한 경찰과 민중에 대한 호소문과 빠라 내용을 보면, 두 달 전의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2·7폭동에서의 구호와 매우 유사한 점을 목격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호소문에서는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구국투쟁에 호응 꺾기하라!”고 선동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는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꺾기하라”고 선동했으며, 또 빠라에서는 “①미군은 즉시 철퇴하라! ②망국적 단독선거를 절대 반대한다! ③투옥중인 애국자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④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즉시 돌아가라! ⑤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⑥응원경찰대와 테러집단은 즉시 철수하라! 조선 통일독립 만세!”<sup>55)</sup>를 외쳤다. 즉 빠라의 6개항 중에서 서청의 테러행위에 대한 반발은 6개항 중의 1개로 마지막 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서청과 경찰 문제는 4·3사건 발발의 본질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어린 시절 4·3사건을 목격한 제주경찰출신 김영중 서장은 경찰과 서청의 탄압이 4·3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영중에 의하면, “3·1발포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곧이어 3·10총파업으로 이어지니까 다급해진 당국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서북청년단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육지부 응원 경찰이나 서청을 불러오게 한 원인은 남로당의 과격한 불법투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남로당이 많은 군중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금지된 집회와 시위, 파업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응원 경찰이나 서청이 내려오게 된 것이다.”<sup>56)</sup>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논단』과 같은 일부 보수언론을 제외하고 수많은 좌익성향

53) 박갑동, 『박헌영』(인간사, 1988), 4판,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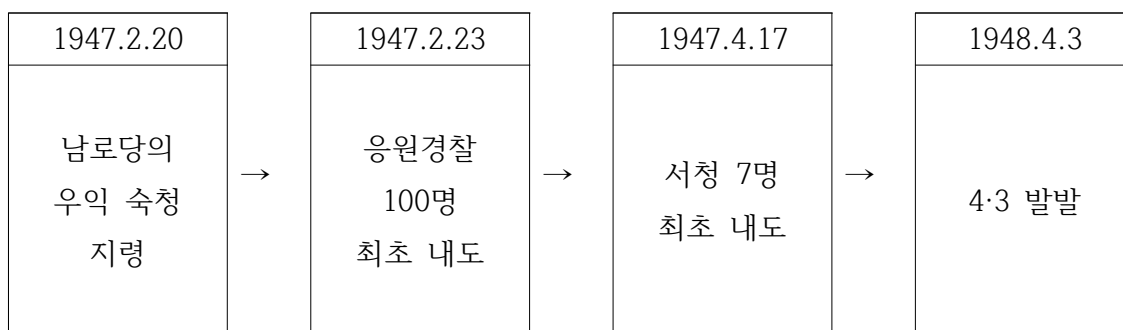
54) 위의 책, 198-199.

55)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 2), 137-138.

56) 김영중, 『제주4·3사건: 문과 답』(제주문화, 2021, 3판), 146.

의 방송언론사와 연구소 지식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과 테러가 4·3을 촉발한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sup>57)</sup> 재론하지만 그런 주장은 4·3을 일으킨 남로당의 의도와 궁극적 목적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이다. 남로당의 강령이나, 응원 경찰과 서청이 내도하기 전인 1947년 3·1기념투쟁 당시 등장한 각종 지령서와 결정서, 구호에 명백히, 모든 우익반동세력을 숙청하여 공산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는 목적이 명기되어있었다. 시기적으로 살펴본다면, 남로당은 1947년 2월 20일에 회색분자와 우익반동을 철저히 소탕하라는 지령을 내렸다.<sup>58)</sup> 제주도에 최초의 응원경찰이 도착한 것은 이 지령이 내려진 3일 후인 2월 23일이었다. 또 서청이 제주도에 처음 도착한 것도 숙청 지령이 내려진 후인 4월 10일이었다. 결국 4·3은 응원 경찰이나 서청이 오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 남로당의 우익숙청 지령과 응원 경찰 및 서청의 내도 시기



또 4·3폭동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서청의 탄압과는 무관한 것이 공격대상이 되었다. 어린이, 부녀자와 노인 등 민간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살해한 점, 남로당의 강령실천을 위해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 북한정권의 수립 지원을 위해, 인명살상과 방화, 약탈, 테러 등 폭력살인행위를 한 것이 바로 지하선거였다는 점, 적기가(赤旗歌)나 인민항쟁가를 부르며 인공기를 내건 것이나, ‘소련 만세!, 스탈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 스탈린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것은 경찰과 서청의 탄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sup>60)</sup>

4·3사건을 전후해서 서청의 입도(入島)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볼 수 있다.<sup>61)</sup> 첫 번

57) 대표적인 간행물로 『역사비평』, 『월간 말』, 『미술세계』 등이고 연구소로는 제주4·3연구소가 있다.

58) 김영중 편저,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삼성인터컴, 2014), 32.

59) 김영중, 『제주4·3사건: 문과 답』, 149-150.

60) 앞의 책, 150.

61)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4』, 148-149.

째는 1947년 3·1사건 직후 유해진 지사가 부임하면서 호위병으로 서청단원들을 활용한 것이 그 시초다. 4·3발발 직전까지 입도한 서청 인원은 대략 5백-7백명으로 추산된다. 이때까지는 특별한 일자리가 없었기에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좌익에 대한 서청의 강경한 대응 및 폭력사태 등도 발생하여 민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두 번째의 집단 입도는 4·3발발 직후의 일이다. 당시의 중앙 서청의 단장이었던 문봉제의 증언에 의하면, 경무부장 조병옥의 요청에 의해 제주도사태 진압요원으로 서청단원 5백명을 급파했다는 것이다. 그 서청단원들이 제주도 내 각 지역에 분산되어 기존 단원들과 함께 토벌전에 참가했다.

세 번째는 여순반란사건 직후의 상황으로 1948년 11.12월 두달 사이에 최소한 1천명 이상의 단원들이 경찰이나 경비대원으로 급히 옷을 갈아입고 토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토벌의 주역으로 부상하여 강경진압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 수많은 유혈현장이 발생하였다. 그 와중에서 제주도 총무부장 김두현이 서청에게 고문치사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제주도 행정 2인자가 보급문제에 불만을 품은 서청들에게 희생을 당한 것이다.<sup>62)</sup>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마침내 5·10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을 위시한 공산좌익들의 반란과 폭동을 진압하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건국되었다. 국회에서 간접선거에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9일, 제주4·3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절한 지창수 중위 등이 주도한 14연대의 반란으로 번진 여수, 순천의 반란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고통수권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14연대 반란을 진압 차 출동하려던 광주 4연대 반란, 대구 6연대 반란, 마산 15연대 반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자칫하면 막 탄생한 신생국 대한민국이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불과 2개월만에 전복될 상황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신생아가 막 엄마의 젖줄을 끊고 나와서 걸음마도 배우기 전에, 유아 사망 신고서를 내야할 판이 된 것이다. 더구나 그 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노심초사했고 하루빨리 반란을 진압하여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기를 원했다. 12월초 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이 강경진압의 정치적 배경이다. 1947년 3·1사건 이후부터 4·3사건 발발 이후 제주도 출신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불신은 미군정과 중앙정부에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이승만의 대책은 속히 국가관과 반공사상이 투철한 서청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미 정보보고서는 ‘청년단, 군대와 경찰을 강화시키다’는

62) 더 자세한 내용은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4』, 159-163.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겼다.

최근 대통령(이승만)과 내무부장관(신성모)의 합의에 따라 서북청년 단원들이 한 국군에 6,500명, 국립경찰에 1,700명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은 남한 전역에 있는 9개 경비대와 각 경찰청에 배정될 것이다. 모든 단체들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서북청년회는 경찰에서 단원 20명당 경사 1명, 50명당 경위 1명, 2백명단 경감 1명 등의 비율로 경사급과 간부급 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합의돼 있다.<sup>63)</sup>

제주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경우로는 이른바 밀고자들이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했다. 좌익 색출을 위해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감(私感)으로 밀고(密告)를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벌의식으로 경쟁상대를 낚시 고발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서청 본부의 문봉제 단장은 어느 잡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지방에서 좌익이 날뛰니 와 달라고 하면 서북청년단을 파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지방의 정치적 라이벌끼리 저 사람이 공산당원이라 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처단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라고 밝혔다.<sup>64)</sup>

입도한 서청 단원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으로도 변신했다. 송요찬 연대장은 서청 단원들을 군에 편입시켜 ‘특별중대’를 창설했다. 계급장이 없는 ‘군인 아닌 군인’이었지만 9연대 헌병이나 장교들도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송요찬의 9연대가 제주도에서 철수하고 함병선의 2연대가 주둔하자 월정리에 주둔하던 서청의 특별중대원 88명은 그대로 2연대 11중대 소속이 되었다.

서청은 제주신보를 강제로 접수하기도 했다. 1948년 10월말, 남로당 무장대빠라 인쇄사건으로 김호진 편집국장은 처형되었고, 박경진 사장 체제가 무너졌다. 제주 서청 단장이던 김능진이 발행과 편집을 맡았다.<sup>65)</sup>

서청과 제주4·3사건의 진압에 연관된 부문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서청의 입도가 제주4·3사건의 본질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남로당제주도당은 (중앙당에서 지령을 받았던 그렇지 않던간에) 단순히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훨씬 넘어서서 5·10총선거에 극렬 반대하여 공산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원래의 투쟁목표가 뚜렷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월북한 4·3의 주동자 김달삼이 해주에서 한 발언이 그 좋은 예이다.

63) 미군정 G-2보고서, No.1005(1948.12.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 267에서 재인용,

64)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4』, 155에서 재인용.

65) 위의 책, 171-175.



서청의 대거 입도는 제주도의 반란을 진압할 경찰과 군대의 병력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화과정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반공사상으로 무장하여 좌익에 적대감을 가진 서청 회원들이 입도한 이후 강력한 좌익투쟁 및 좌익색출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과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또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일부 제주도민들의 반발과 원성을 샀고 말았다. 이런 불평불만을 이용하여 남로당제주도당이 무장대를 앞세워 반미, 미군철수, 단선반대, 친일경찰 제거 등을 선전선동하여 반란을 확대했는데, 남로당 중앙당의 주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건국을 반대, 부정했기에 미군정이나 새로 수립되는 중앙정부가 협상의 결과를 얻는 것은 무리였으며, 나아가 무장한 폭동세력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도민들을 인질로 삼아 저항하면서 반란의 규모가 커졌다. 여기에 1948년 가을 여순반란사건은 중앙정부가 강경책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서청은 반란의 강경한 진압과정의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진압군측, 반란군측, 제주도민 3자간에 많은 사상자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VI. 대한청년단으로 통합과 6·25전쟁

### 대한청년단으로 통합과 군 입대 ‘봄’

1947년 대동청년단이 발족한 이후, 청년단체는 모두 6개의 단체로 나뉘어있었다. 대동청년단(대청, 지청천), 청년조선총동맹(청총, 유진산), 서북청년회(서청, 문봉제), 독립청년단(독청, 서상천), 국민회청년단(국청, 강낙원), 대한민족청년단(족청, 이범석) 등이었다.

1948년 8월, 건국이 선포된 다음 달인 9월 중순부터 민족청년단(족청)을 제외한 5개 단체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이유는 미군정 때 조직된 국방경비대에는 좌익이 많이 침투해 있었기에 반공사상으로 무장한 청년단체 출신으로 국군을 재편성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월 15일부터, 그들은 차례로 이 뜻을 경무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 공교롭게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서 남로당 지하조직이 사주한 14연대의 반란사건이 터졌다. 10월 20일, 이승만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려해서 나에게 진언했던 사태가 드디어 여수, 순천에서 터지고 말았다.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을 때 하지 사령관은 국방경비대를 믿을 수 있다고 나에게 장담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기반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단체들을 통합해 애국청년들을 단결시키는 길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sup>66)</sup>

그리하여 1948년 12월 19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내의 모든 청년단체가 대한청년단(총재 이승만, 단장 신성모)으로 단일화되었다.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은 통합을 거부했으나,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한 달 늦게 합류했다. 여순반란사건이 대한청년단이라는 우익청년단체들의 통합에 촉매작용을 한 것이다. 대한청년단은 탄생과 함께 전국의 말단 행정단위인 면(面), 리(里), 동(洞) 단부는 물론 직장단부까지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3백만이 넘는 반공망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서청의 간판도 사라졌다. 그 후 대한청년단은 6·25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9월 10일, 이승만 대통령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까지 4년 9개월간 존속했다.

서청은 제주4·3폭동, 여순반란사건 그리고 연이은 군내 반란사건 등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서청은 수차례에 걸쳐 미군정에게 국방경비대의 좌익색출을 요구했지만 그 건의는 거절당했던 쓰라린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자진해서 군 입대를 하여 자신의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좌경화한 군대도 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군 입대 '붐'이 일어났다. 군대는 서북 청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일터로 보였다. 서북 청년회 출신들은 육사 5기와 7기, 그리고 8기에 많았다. 주로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 왔기에 포병병과로, 또 북한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에 첩보부대로 많이 지원했으며, 반공사상이 투철했기에 정훈장교로 많이 활동했다.<sup>67)</sup> 후일 5기와 8기는 1961년 5·16군사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 2. 대북정보 수집을 위한 KLO부대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직후, 동경의 미극동사령부 정보담당 G-2는 서울에서 북한의 소련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월남한 서북청년들을 활용했다. 그리하여 미극동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 KLO)가 설치되었다. 겉으로는 정의사(正義社)로 위장하였다. 1948년 4월, 서청 부위원장 김성주는 10여명의 정의사 요원들을 선발했다. 그들은 전준, 박태현, 유인국, 전훈 등이었다. 그들은 북한의 6·25남침이 일어날 때까지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에 기습 남침을 당하자 군 당국이 자신들의 보고를 무시했다고 분개했다.

66) 손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59-60에서 재인용.

67)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 소위도 포병장교 출신이고, 첩보부대 출신으로 김일환(평북 신의주), 이영호(황해도), 유제국(황해도), 김동석(함경도), 계훈영(평북), 김인칙(황해도)가 있고, 정훈장교로 전두열, 윤하선, 선우휘 등이 있다.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대한민국의 멸망은 시간문제인 것 같았다.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반격작전을 위해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에 대규모의 병력을 상륙시키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상륙군의 진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 팔미도 등대에 불을 켜는 일이 중요했다. 이 임무를 서북청년들이 맡게 되었다. KLO 부대의 서북청년회 특수임무부대원들은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 덕적도, 팔미도 등지를 샅샅이 탐색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는 9월 15일 전날 밤, 팔미도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 계인주 대령, 연정 해군소령, 최규봉 대위와 3명의 미군장교가 팔미도에 올랐다. 15일 0시 등대에 불을 켜는 것을 신호로 먼바다에서 대기 중인 261척의 대선단이 인천 항구로 들어가 함포사격을 시작했다. 계인주는 이 공로로 미국의 최고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영흥도에 남아있던 서북청년회 출신 KLO 대원 20여명은 불행히도 북한군과 현지 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

미군이 참전하면서 KLO기구도 확대되어 본격적인 첩보활동을 벌였다. KLO로 산하에 3개 대가 조직되었다. 그것은 박태현(황해도 은율)을 책임자로 한 '위스키' 대, 전훈(평양)을 책임자로 한 '선' 대, 최규봉(함남 원산)을 책임자로 한 '코트' 대로 지역을 안배한 것이다.

### 3. 백골부대의 탄생과 탁월한 전공(戰功)

서북청년회와 국군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육군 제18연대인 백골부대의 창설이다. 백골부대인 제18연대의 창설을 명령받은 한신(함남 영흥출신)은 서청 백두산지부(회장 이장국)에 찾아와서 반공투사들이 지원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국방경비대에 좌익이 등지들 틀고 있기에, 여순반란사건의 재발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서청 회원들 3천여명이 단시일에 지원하였다. 그래서 다른 부대와는 달리 중대장이나 대대장은 '형님'으로 통했다. 이것은 강력한 전우애로 뭉칠 수 있었기에 '불패(不敗)'의 기반이 되었다.

제18연대의 용맹성은 전쟁초기 포항, 기계, 영천 전투에서 나타났다. 당시 낙동강 전선의 전황은 위급했다. 대구가 적에게 점령되어 부산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 대한민국은 패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백골부대 연대장 이춘식 이하 부대원 전원은 옥쇄를 각오하고 역습을 시도했다. 마침내 그들은 안강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대구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그에 따라 연대 사병 전원이 2계급 특진을 해 제18연대는 상사 부대가 되었다. 그들은 3사단 소속으로 휴전 직전에는 철원, 평강, 김화의 '철의 3가지' 전투에서 싸웠다.

#### 4. 서청의 독자적 행보와 정치적 배제

1948년 12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우익청년단체들은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고, 서청은 해산되었다. 서청은 대한청년단의 핵심부에서는 제외되었다. 그 당시 서청 간부들 중에는 아직도 김구, 안창호 등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한때 선우기성도 김구 계열의 이범석이 주도한 민족청년단에 합류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서청은 미국선교사와의 관계를 독점하고 있던 한경직 목사 등 월남한 기독교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서청을 견제하였기에, 서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6·25전쟁은 이런 서청에서 다시 세력강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듯했다.

서청과 이승만과의 갈등은 북진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행정권을 놓고 벌린 다툼에서 연유된다. 이승만은 대한청년단에게 북한으로 가서 청년단을 조직할 것을 명했고, 이에 반해 서청계열의 청년들은 서북청년회의 이름으로 독자적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새로운 규약과 도별로 조직을 만들었다. 그들은 선발대를 만들었으며 먼저 북한으로 출발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북진 이후 유엔군은 북한을 유엔의 관할지역으로 인식했기에 군정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군 정보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던 김성주(대한청년단의 서북청년대장)을 평안남도 도지사로 임명했다. 유엔군정은 북한에서 정당을 조직하고 청년단체를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청년단체로 서북청년회를 재조직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 와중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승만은 이를 계기로 해서 서청의 정치적 재기를 차단했다. 그 시작이 김성주의 이승만 암살음모사건이었다. 김성주는 사형을 언도받았고, 사형일 전에 헌병사령부 사령관 원용덕에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청 출신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sup>68)</sup>

### VII. 결론

역사연구에서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과 과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사건과 인물을 파악해 보는 이중적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이 역사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1945년 8월, 해방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현대사의 키워드를 4개로 압축해본다면, 분단, 공산주의, 건국 그리고 전쟁으로 표출해 낼 수 있다.

68)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241-244.

역사에서의 가정(if)이란 부질없는 짓이지만, 만약 서청이 좌익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또 만약 오늘날처럼 보수우익들이 기자회견 같은 좌익들을 상대로 점잖게 달래는 합법적 투쟁만을 능사로 했다면, 해방 이후 경찰력이 부족하여 치안유지가 어려운 미군정 시절에서 과연 좌익소탕과 남로당 일망타진이 가능했겠는가? 그리하여 만약 그 당시 어지러운 해방정국에서 좌익소탕이 미진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후 이승만정권이 제대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조기에 붕괴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반공국가의 기반을 갖추 수가 있었을까? 만약 반공국가의 기반이 흔들렸다면, 헌법에 정의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만약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면,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리해본다면, 서북청년들의 우선적 공헌은 1945년 가을부터 소련군정의 압제와 탄압으로 월남한 서북 청년들이 아직도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치관의 혼미에 빠져 방황하는 남한의 주민들을 반공사상으로 무장하도록 경각시켰다는 점에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서북청년들은 38선을 넘었기에 강인한 정신력으로 지역적 결속을 다져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서청의 초인적 힘을 평가할 수는 없다. 조선말부터 일제 식민지시대로 내려오면서 서북지방에 퍼진 기독교의 영향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서청은 한경직 목사(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세력을 후원을 받으면서 신앙으로 무장하여 전투적 크리스천으로 변모하면서 좌익소탕전에 나섰다. 그들은 특정인의 지시에서 아니라 자발적 내적 자각에서 그 험난한 길에,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야만 하는 좌익소탕의 길에 자원한 것이다. 그것이 구국의 길이라는 내적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서 이승만, 김구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서 후원을 받았다. 서청으로 결성되고 경찰과 미군정의 병력 부족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자원했으며, 경찰과 미군정의 후원을 받아서 어떤 우익청년단체들보다 좌익 소탕에서 전위대 역할을 수행했다.

서청은 공장과 사업장에서 정상적 경영을 방해하는 전평을 중심으로 한 좌익노조를 힘으로 분쇄했고 그 자리에 대한노동총연맹을 조직했다. 서청은 남선파견대를 지방에 파견하여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었다. 또 건국의 과정에서 5·10총선을 반대하면서 남북협상과 비현실적인 통일정부를 주장하는 임정의 김구와 결별하고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통해 건국을 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현실주의노선을 지지했다. 그리하여 건국을 방해하면서 끝없이 폭동을 일으키는 좌익남로당을 소탕하고 반공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승만의 집권에 큰 역할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대한청년단에 통합되어 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서청은 제주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 등 국방경비대내의 좌익에 의한 반란에

위기감을 느껴서 국군으로 대거 자진 입대하면서 장차 닥쳐올 남북간의 무력충돌에 대비하였다. 서청은 대북정보 수집 및 대북유격대 활동으로 38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대북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군 수뇌부의 방심으로 6·25남침을 허용하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전열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낙동강전선의 인강전투,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월미도를 등화한 KLO, 백골부대의 전공 등 불패무적(不敗無敵)의 신화(神話)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돌이켜보건대, 서청이 좌익소탕과 건국과정과 6·25전쟁에서 호국의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 그러한 부작용은 특히 지방에 파견 나가면서 많이 발생하였다. 북에서 내려온 외지인인 서북청년들은 그 지방 실정을 잘 몰라 지역인사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영똥한 인물들을 공산주의자로 공격하는 실수도 있었다. 지방유지들이 자신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서북청년회의 소행으로 떠넘겨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sup>69)</sup>

또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군정기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하고 5·10총선거에서 이승만과 경합하던 최능진(전 경무부 수사국장)의 후보자 추천서가 든 가방이 날치기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봉제의 증언에 의하면, 서청의 성북지부장 계호순 등이 개입되었고, 이것을 요청한 인물은 백성옥으로 그는 이화장을 이승만에게 기부한 사람이었다. 또한 서청 출신이며 육사를 통해 군에 진출하여 포병대를 이끌던 안두희는 1949년 김구를 암살하였다.<sup>70)</sup>

되돌아보면, 소득 3만불의 건망증이 심한 오늘날의 잘사는 후손들은 그들이 처절하게 살아야만 했던 ‘삶의 존재이유’와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망각하고 말았다. 이제 30여년 동안 민주화시대에 익숙해지면서 좌편향언론과 지식인들의 용단폭격 속에 “양민학살에 앞장선 국가폭력의 전위대, 테러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이 고착되면서, 서청의 건국과 호국의 진정한 역할이 부정되거나, 왜곡되거나, 망각되고 있다.

아직도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동정적인 일부 지식인들과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자(주사파)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대치했던 분단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게 건국했었던 점이나,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한 나라였다는 점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대한민국이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섬으로 구성되어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한 그들의 선의(善意)속에 걱정 없이 좌익남로당과 대화와 타협 속에 오

69) 이주영, 『서북청년회』, 62-63.

70) 중앙일보, (1949.6.12.); 김평선,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54에서 재인용.

순도순 사이 좋게 건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변(強辯)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들의 궤변에 기만당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의 위협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해방 후에서 건국할 그 당시 험난했던 3년간의 시대로 되돌아가 보자. 일제가 패망 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치안의 공백상태가 발생했고, 그들이 남기고 간 사업장과 공장들을 좌익노조들이 식칼, 몽둥이, 각목, 죽창으로 무장하여 그것들을 불법으로 탈취하였다. 길거리의 폭력은 일상사로 치안유지가 어려웠고 미군정과 경찰병력은 부족했고, 국군의 모체가 될 걸음마 단계의 국방경비대는 ‘좌익 푸락치의 은신처’로 변질되고 있었다. 1947년 월남하여 서북청년회 경남지부 선전부장을 맡은 손진은 2014년에 쓴 자신의 회고록,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말미(末尾)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①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적이라는 사실이다. ②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나라)라는 사실이다. ③ 세계가 탈냉전 시대라 하더라도 한반도는 냉전시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sup>71)</sup>



손진(1920-2017)

이것은 북한에서 해방 이후부터 등장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세습 공산주의체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민족주의내지 민족공조라는 낭만적 접근을 경계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손진이 자신의 회고록을 발간한 지 불과 3년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우익정권은 무너졌다. 손진의 경고를 무시한 국민들은 급기야 좌익의 선전선동에 휩쓸리면서 주사파정권을 탄생시켰던 역사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 연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민들이 서청이란 우익청년단체

가 반공사상으로 무장하여 좌익투쟁에 앞장서서 건국에 기여한 희생과 헌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익은 역사전쟁이란 장기전(長期戰)에서 좌익에게 패했다. 즉 반란과 폭동을 ‘국가 폭력’에 의한 민중의 희생임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로 향하게 하려는 좌익의 집요한 시도에 굴복한 것도 중대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역사는 기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역사전쟁은 기록물을 놓고 벌리는 투쟁이라는 점이다. 서청을 비롯한 우익청년단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나아가 그것에 근거하여 균형된 역사서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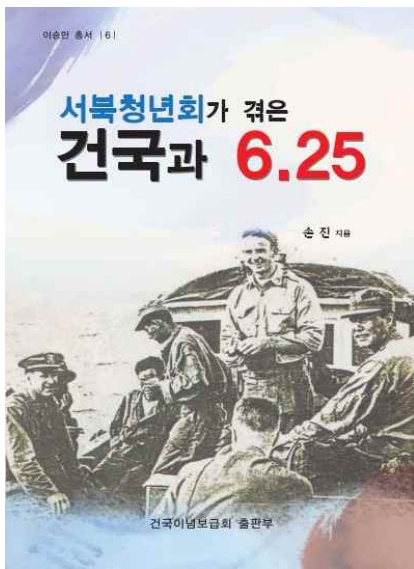
71) 손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172.

제다. 다음은 손진의 한탄이다. “최근에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포상문제가 대두되면서 나는 당시 6·25전란사에 기록하겠다는 이선근 정훈국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sup>72)</sup>

두번째 과제는 역사기록에서 망각된 건국과 6·25전쟁, 호국의 과정에서 희생된 서청 회원들에 대한 포상문제이다. 87체제 이후 ‘민주화광풍’이 불어닥쳤고, 5.18특별법 제정으로 5.18유공자에게 ‘묻지마’ 보상이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이와 더불어 제주 4·3사건에서 주동자의 폭동과 반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국가폭력과 희생자만 강조하면서 피해 보상액으로 무려 1인당 최대 9천만원이 지급된다. 역사전쟁이 법률전쟁으로 확전된 것이다. 건국유공자와 5.18유공자나 4·3희생자 3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대우를 받아야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재론하지만, 서청을 비롯한 건국유공자에 대한 대우 문제가 지적되면서 우선 서청 회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기록이 소홀했다는 자체 반성이 대두되었다. 다행히, KLO부대원들은 남광규 교수(고려대 정치학)의 자문을 받고 10년간의 장기투쟁 끝에 간신히 국가유공자로 포상을 받게 되었지만, 포상에서 제외된 수많은 서청 회원들의 영혼들은 지금도 지천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처럼 좌우익 대립이 격화,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정치가 혼미를 거듭하는 상황일수록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건국사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국민적 자각과 각성이 필요하다.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서청과 우익청년단체가 건국과 호국을 위해 헌신한 역사, 잘했던 점과 부작용을 초래했던 점 모두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72) 손진, 앞의 책, 124.



## 참고문헌

### 단행본

- 교과서 포럼 편, 『한국현대사』, 기파랑, 2008.
- 김영중, 『제주4·3사건: 문과 답』, 제주문화, 2021, 3판.
- 김영중 편저,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삼성인터컴, 2014.
-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4.
- 박갑동, 『박헌영』, 인간사, 4판, 1988.
- 박윤식, 『참혹했던 비극의 역사, 1948 제주4·3사건』(휘선, 2011).
- 양동안,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치사상용어 바로 알기』, 대추나무, 2020.
-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2015.
- 이주영, 『서북청년회』, 백년동안, 2015.

### 논문

- 김상태,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1998.11.
- 김진웅, 「미군정 기 국내정치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대구사학』, 97집, 2009.
-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02.
- 김평선,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2020, 제15쇄.
- 박명규, 「제주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류상영, 「8.15 이후 좌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임대식,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정종식, 「서북청년회의 결성과 활동」,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증언 및 회고록

- 손진,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건국기념보급회, 2014.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전5권, 전예월, 1998.
- 조병옥, 『나의 회고록』, 1959.

### 보고서

- 대검찰청公安부, 『좌익사건실록 제1권(1965)』,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대림인쇄사, 1995), 7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 웹사이트

문봉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643)<제30회>서북청년회’, 『중앙일보』(1972.12.23.

『역사비평』(제주4·3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1998.2),

『한겨레신문』(‘서북청년단 재건’ 파문....,도대체 어떤 단체였길래, 2014.9.29.),

『제주의 소리』(“경찰복과 군복, 빨갱이 사냥의 합법성” 2014.5.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0166&cid=42958&categoryId=42958&expCategoryId=42958>.

News & Joy, 서북청년회①, 1946 서울, 백색테러단체의 탄생, 2018.4.19.

## 제주 4·3 사건 역사 왜곡

-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4·3 사건부터 박진경 대령 암살까지 -

박철균



## 제주 4·3 사건 역사 왜곡<sup>1)</sup>

-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4·3 사건부터 박진경 대령 암살까지 -

박 철 균<sup>2)</sup>

순 서

I. 들어가는 글

II. 왜 박진경인가?

III. 미군정 당국의 대유격작전 실시 배경과 박진경 대령 작전개념

IV. 박진경 대령 부임 전 제주도 전장 실상

V. 박진경 대령 왜곡

VI. 맺음말

### I. 들어가는 글

4·3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은 4·3 사건 초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폭력으로 방해했던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무장 폭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정당하게 행사한 국가 공권력을 왜곡하여 적대시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왜곡의 중심에 박진경 대령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또 제주도민이거나 도민이 아님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상처이고 아픔이며 함께 화해하고 치유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화해와 치유에는 어떤 집단이나 진영의 이익이나 희망적 선입관을 초월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정립과 이에 대한 인정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각 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내가 제주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김일성 일가의 왕조 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다면 4·3 사건 당시 미군정 당국과 조선경비대의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 작전은 매국적인 극악·반동적 행동이며 숙청의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무장 세력에 대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작전은 건국을 위한 애국적, 영웅적 군사작전이다.

1) 본고는 제주 4·3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에서 소장 중인 자료와 서적, 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근거와 출처를 상세히 기록하고자 하였다.

2)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단장.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과 그들의 무장세력인 인민유격대가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 제주도는 대혼란으로 치달았다. 남로당 공산 무장세력<sup>3)</sup>들의 무차별 린치와 살육으로 제주 전체의 치안 질서가 흔들리는 극도의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이에 미군정 당국은 당시 제주 도내의 민간 치안 세력만으로는 사태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조선경비대<sup>4)</sup>를 투입하기로 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던 제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였기 때문이다.

박진경 대령은 미군정 당국의 명에 따라 1948년 5월 6일 제주도 9연대장<sup>5)</sup>으로 부임하여 6월 18일 새벽, 암살당할 때까지 정확히 43일 동안 제주도 현지에서 후방지역 작전 중의 하나인 대유격작전<sup>6)</sup>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지휘관이다. 박진경 대령은 우선 빈약한 참모 조직을 정비하고 병력을 충원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 박진경 대령은 공산 폭도 백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주민이 한 명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 보호 지침을 하달했다.<sup>7)</sup> 성과는 없었으나 공산 세력에게는 귀순할 것을 권고했고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수장인 김달삼과의 귀순 회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작전 보안을 유지하고 기습적으로 유격기지를 습격하여 일부 전과를 올렸다. 작전 간 체포된 포로들은 대공 용의점 파악과 유격대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합동심문조에 보냈다. 미군정 당국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유격작전이였다.

이러한 그의 작전 결과로 산중의 인민유격대 기지는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박진경 대령은 강인한 체력과 희생정신으로 작전에 몰두했다. 제주도사태의 안정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멸사봉공의 충성심의 발로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전이 한창이었던 1950년 12월 30일 박진경 대령의 공훈을 기려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박진경 대령을 호국전몰용사 공훈록에 기록하였고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sup>8)</sup> 백선엽 장군은 박진경 대령의 53주기 추모식에서 박진경 대령을 국군의 초석이요 국가를 목숨으로 지키신 초창기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였다.

3) 제주도 남로당 공산 무장세력의 공식 명칭은 인민유격대, 본고에서는 폭도, 유격대, 인민군 등도 같은 용어임. 남로당의 유격기지가 주로 한라산 쪽에 있어서 산(山)측의 산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음.

4) 남로당 문건에는 국방경비대로 쓰기도 했다.

5) 5월 15일 11연대가 추가로 제주도에 투입되면서 9연대와 합편 되고 11연대의 연대장으로 보직됨.

6) 현재 교리상의 용어이며, 대계릴라작전, 공비 토벌작전 등의 단어로도 쓰일 수 있다.

7) 2003년 12월 본인은 채명신 장군과 남대문 인근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사 중 채명신 장군은 자신이 제주도 소대장 시절 연대장이었던 박진경 대령의 주민보호 지침에 영감을 받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시절 '백 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베트남 주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언급했다.. 2001.4.2. 박진경 대령 추모식 중 채명신의 추모사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호국전몰용사 공훈록 책 번호3에 수록되어 있고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https://www.imhc.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397&siteId=imhc&menuUIType=sub>

그러나 1990년대부터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장되기 시작하였다. 마타도어식 용어 혼란 전술과 문장과 문구 왜곡을 자행했다. 현재는 박진경 대령이 제주 4·3사건 학살의 주범이니, 포로를 고문하고 학대하였으며 무차별 살상 명령을 내렸고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여 연대병력이 탈영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왜곡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 남로당 지시로 조선국방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였던 문상길 중위 일당의 박진경 대령 암살을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한 영웅적 행동으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참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먼저 왜 박진경 대령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미군정의 조선국방경비대 투입 배경과 박진경 대령의 작전개념을 설명하고, 4·3사건의 발생 원인과 박진경 대령 관련 왜곡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과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박하고자 한다.

4·3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은 4·3 사건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에 대한 2차 가해이다. 4·3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립의 출발점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II. 왜 박진경인가?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5월 6일에 부임했다. 이 시기는 미군정 당국이 제주도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4·3 사건에 개입하려는 결정을 한 시기이다. 박진경 대령은 오사카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여 영어 능력이 탁월했다. 1944년 동 대학 졸업 후에는 일본의 학도특별지원병으로 강제 징집되어 일본군 소위로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었다.<sup>9)</sup> 박진경 대령은 미국 야전교범을 번역하였고 조선 경비대 부산 5연대 근무 시절 미군과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등 미군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웠다. 박진경 대령은 조선 경비대의 누구보다 더 미군정 당국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을 구실로 좌익에서는 미군정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인물로 묘사하고 박진경 대령과 미군정 당국의 관계를 일치화시킨다. 왜곡된 주장에서

9) 박진경 대령은 치바현에 있는 마쓰도 공병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 일본군 요새 구축 중, 해방되어 귀향하게 된다.

항상 박진경 대령은 미군정의 무차별한 강경 진압 작전을 선두에서 지휘한 인물이다. 또 무차별 사살, 포로 고문, 학살 등 일반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들을 박진경 대령과 연루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박진경 대령의 작전을 왜곡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미군정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노력과 제주도사태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당시 미군정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5월 10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회 의원을 투표로 선출하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애국적인 노력을 했으나 좌편향적인 시각은 그 본질적 의도와 사실관계를 덮어버리고 미군정 당국을 왜곡된 사실로 포장하여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 작전이 주민을 탄압하고 무고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4·3 사건 진압과 사태 안정화를 위한 미군정 당국의 조치 들이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이행되는 남로당 무장세력들의 폭력적 투쟁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박진경 대령의 강압 작전에 반항하여 제9연대 장병 41명이 탈영을 감행<sup>10)</sup>했다는 주장, 그리고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박진경 대령을 살해했다는 저들의 주장에 모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크게는 4·3 사건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진행되는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폭력적 반란도 모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박진경 대령의 대유격작전으로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선거 방해 공작으로 강제 입산된 주민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기지로부터 풀려났으며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실체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조선국방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에 의한 박진경 대령 암살은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조선국방경비대 안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미군정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작전에 임하게 된다. 박진경 대령의 작전과 박진경 대령의 순국은 4·3 사건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좌익의 모자를 쓰고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처지에서 생각하면 박진경 대령이 더없이 불편하고 미운 존재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시 왜곡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신보 1952년 10월 24 일자 기사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내(來) 11월 7일 고 박진경(朴珍景)대령 추도비 제막식이 거행된다. 4·3사건 발발 당시 11연대장으로서 공비토벌과 민심선무에 많은 공훈을 남긴 고 박진경대령을 추도하여 앞서 도내 각 기관장과 유지들이 회합, 총장 9척의 자연석비를 건립기로 결정하였음은 기보(既報)한 바이거니와 그간 군경원호회를 비롯한 각계의 진력으로 공사는 예정보다 급속한 진척을 보아 석비 조각을 완료, 수일 내에 제주방송국 내에 건립될

10) 실제로는 조선 경비대 내 남로당 프락치들의 계획적인 행동, 본론에서 자세히 후술 됨.



것이다. 이 건립장소는 고(故) 박(朴)대령이 전사한 장소인 것이다.”

위 기사를 보면 1990년대 이후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이 진행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당시에는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민들의 존경과 추모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 없이 좌익들의 4·3 사건 전체의 왜곡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 Ⅲ. 미군정 당국의 대유격작전 실시 배경과 박진경 대령의 작전개념

#### 1. 미군정 당국의 대유격작전 실시 배경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 4·3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부임했다. 美 군정 당국은 4·3 사건 이후 초기 상황을 ‘치안상황<sup>11)</sup>’으로 판단하였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조선경비대를 투입하게 된다. 그리고 공산 무장세력에 대한 대유격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당시 박진경 대령의 작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350여 명의 반란으로 제주도의 12개 경찰 지서와 우익단체 간부 등이 습격당하여 하루 동안 15명(우익인사 8, 경찰관 4, 무장대 3)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봤다.<sup>12)</sup> 미제 소총 6정, 일제 소총 1정과 실탄 119발 등 총기와 실탄 등도 노획당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지도부는 ① 인민공화국 절대 사수, ② 5·10 단독선거 반대, 군정수립 음모 분쇄, ③ 미 점령군의 즉시 철퇴, ④ 경찰대의 일체의 무장해제, ⑤ 응원경찰대의 전면 철수, ⑥ 인민유격대의 합법화, ⑦ 투옥 중인 xxx 무조건 전면석방 등 투쟁의 명분을 담은 호소문<sup>13)</sup>을 발표했다.

아래 포고령은 4·3 사건 이후 4월 10일에 남로당 무장대가 인민해방군 제5연대 명의로 주민들에게 살포한 뼈라(전단)로 호소문의 내용과 유사하나 남로당이 제주도 무력 폭동에 임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 등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sup>14)</sup>

11) 군의 투입 없이 경찰력만으로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

12)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67쪽., 무장대 측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경찰 사망이 10명으로 되어 있음.

13) 이운방, 『4·3사건의 진상』(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증언자료집 I, 1989. 4.), 218쪽.

14)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29쪽.

## 포고령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여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서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반동을 완전히 숙청하므로서 UN조선위원단을 국외로 몰아내고 양군을 동시 철퇴시켜 외국의 간섭 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 인민해방군 목적달성을 전적으로 반항하고, 또 반항하려는 극악 반동분자는 엄벌에 처함.
- 인민해방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협력하고 또 극악 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함.
- 친일파 민족반역도배들의 모략에 빠진 양심적인 경관, 대청원은 급속히 반성하면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장함.
- 전 인민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해방군을 적극 협력하라.

4281(서기1948)년 4월 10일

해방지구 완전지대에서, 인민해방군 제5연대<sup>15)</sup>

남로당 유격대의 포고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써 반대하고 극악반동을 완전히 숙청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무장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sup>16)</sup> 4·3 사건 이후 위 포고령에 따라 저들이 생각하는 반동분자들에 대해 무차별 테러를 계속했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5월 10일 선거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주민을 강제로 입산시켰다. 선거 이후에는 일부 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일부 주민은 저들에게 동조하거나 그간 우익 치안 세력들의 강경 진압 등을 피하고자 산중에 남기도 하였다.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남로당 적대 무장세력이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이행하고 있음에도 4·3 사건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 경찰이 진압을 못 하고 사태가 계속 악화하였다. 경찰력만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4월 16일 미군정에서는 조선국방경비대 투입을 결정했다.<sup>17)</sup> 美군정은 4월 1개 대대를 제

15) 고재우, 『제주4·3 폭동의 진상은 이렇다』1998, 79쪽;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년 10월, 322쪽, 이 빠라는 1948년 4월 21일 모슬포경찰서 통신계에 근무하는 강순형 이강호 순경이 절단된 전 화선 연결을 위하여 출동하였는데, 대정을 보성리에서 상모리쪽으로 80m 지점의 소나무밭 일대에서 29매를 수거하였다.

16)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29쪽.

17) 『조선일보』, 1948.4.17.

주도에 증파하고 도령을 공표하여 선박 운행을 금지하고 해안을 봉쇄하였으며 자체 경계를 강화하면서 군병력을 투입하는 단계별 대유격작전을 구상하게 되는 것이다.<sup>18)</sup> 이 당시 딘 군정장관이 제주도 군정관 겸 59 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에게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를 잘 보면 4·3 사건 이후 미군정의 제주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 조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1. 귀관은 제주도의 상황에 정통하라.
2. 4월 18일 제주도에 도착한 두 대의 L-5 연락기는 귀관의 지휘하에 있다.
3. 한국 국방경비대 추가 병력이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 시 이 대도 현재의 다른 한국 경비대와 같이 귀관의 작전통제 하에 놓일 것이다.
4. 귀관은 귀관의 배치에 따라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군부대를 이용하라.
5. 대규모의 공격에 임하기 전에 귀관은 소요 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
6. 경비대의 작전에 의해 붙잡힌 포로들은 경찰에게 인계하지 말라. 그들을 경비대에 의하여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토로 후송하도록 조치하라.
7. 일일 상황보고를 무선통신으로 본부에 보고하라.<sup>19)</sup>

첫째,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에 배치된 경찰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락기와 경비대 병력 1개 대대를 추가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 미군과 함께 사태 진압에 나설 대상으로 경비대를 설정하고 있는데 당시 미군의 생각보다는 공산 폭도들의 폭력 사태가 심각하여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5항에 보면 공격 작전에 임하기 전에 소요 집단에 지도자와 접촉하여 항복할 기회(귀순공작)를 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소위 4월 말 김익렬 ‘자수·귀순 협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박진경 대령도 남로당 군사총책 김달삼을 만나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귀순 공작 시도가 있었다. 또 하나, 미군정 당국은 무장대 지도자와의 접촉을 귀순 공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귀순공작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항복, 투항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18)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40쪽.

19) Cheju-Do Operation," April 18,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20) 원문에는 "Prior to any large scale offensive action, you will make every effort to contact

셋째는 당시 사태 악화를 우려하여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포로를 경찰에 인계하지 말고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이른 시일 안에 본토로 후송하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은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극악무도한 상해와 테러는 물론이고 치안 병력의 보복적인 폭력 행위 모두 용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배경에는 1948년 3월 경찰에 연행되었던 청년 3명이 고문으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작용했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민심을 동요시켰으며 미군정 당국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으므로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은 남로당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4·3 사건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sup>21)</sup>

미군 문서를 종합해 볼 때, 미군정은 1948년 4월 3일 이후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의한 사태 악화로 인해 조선국방경비대를 투입하여 진압방침을 세웠으며, 강경 일변도의 무차별 진압 작전이 아닌 포로들을 보호하고 또 가능했다면 무장대를 귀순시켜 큰 충돌 없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sup>22)</sup>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작전이 성과가 없을 때는 당시 사태의 안정을 위해 남로당 무장대에 대한 진압 작전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의 수정주의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의 뒤를 이은 신수정주의 학자, 존 메릴의 논문인 ‘제주도 반란’에도 딘 군정장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이 나온다. 또 박진경 대령에게 단계별 토벌작전과 관련하여 하달한 지침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협상(평화협상)은 딘 소장 방문 후 박진경 대령이 연대의 지휘권을 인수한 후 분명히 이루어졌다. 박진경 대령은 경비대 총사령부 인사국으로부터 연대를 지휘하도록 보임되었는데 이는 박진경 대령이 일본군에서 제주도에 근무하여 제주도의 지형과 축성 구조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 출발 전에 개인적으로 딘 장군으로부터 반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받았다.’<sup>23)</sup>

미군정은 4월 20일에 경비대 5연대 1개 대대, 5월 6일에 경비대 11연대 2개 대대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에서 추진했던 대한민국 단독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가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 실패하고 사태가 더욱 악화하자 브라운 대령을 5월 20일경 제주도에 보내 제주도 내 모든 대유격작전을 총지휘하도록 하였

---

the leader of the illegal element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surrender.”라 되어있음.

21) 4·3 사건은 남로당 세력이 2월 22일 신천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려는 무장 폭동이었으나 남로당 무장세력들은 1948년 3월의 고문치사 사건이 4·3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22)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41쪽.

23)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79-), 1980, Vol. 2. (1980), pp. 139-197, Published by: Duke University Press, 중 175쪽.,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 文友社, 1963, 440쪽.

다.<sup>24)</sup> 이러한 미군정의 조치는 경비대 투입 결정 이후에도 제주도사태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브라운 대령은 5월 22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폭동진압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 아래 지시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들과 민간인 밀집 지역인 해안마을(주민)에는 경찰력이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 대한 테러·살해를 금지했다. 조선 국방경비대는 제주도 내 인민해방군 즉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또 포로 심문을 위한 심문센터를 설립하고 심문센터에서 획득된 정보를 활용하여 폭동참가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행정기능 복구 등 당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태 안정과 주민 보호를 위한 군정 당국의 필수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무차별 강경 진압이 아닌 단계적 체계적 대유격작전 지침임을 알 수 있다.

1. 경찰은 모든 해안마을을 보호하며, 무기를 소지한 폭도들을 체포하고, (폭도들이) 주민들을 테러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 경비대는 제주도 내에 조직된 인민해방군을 진압하라.
3. 경찰과 경비대에 체포된 포로를 심문할 심문센터를 설립하라. 심문센터에서 획득된 정보는 범죄자의 재판에 이용되거나 폭동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데 이용된다.
4. 행정 관리들은 경찰과 경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정기능을 최대한 빨리 복구하라.
5. 절단된 전신주를 다시 세우고 도로를 복구하라.<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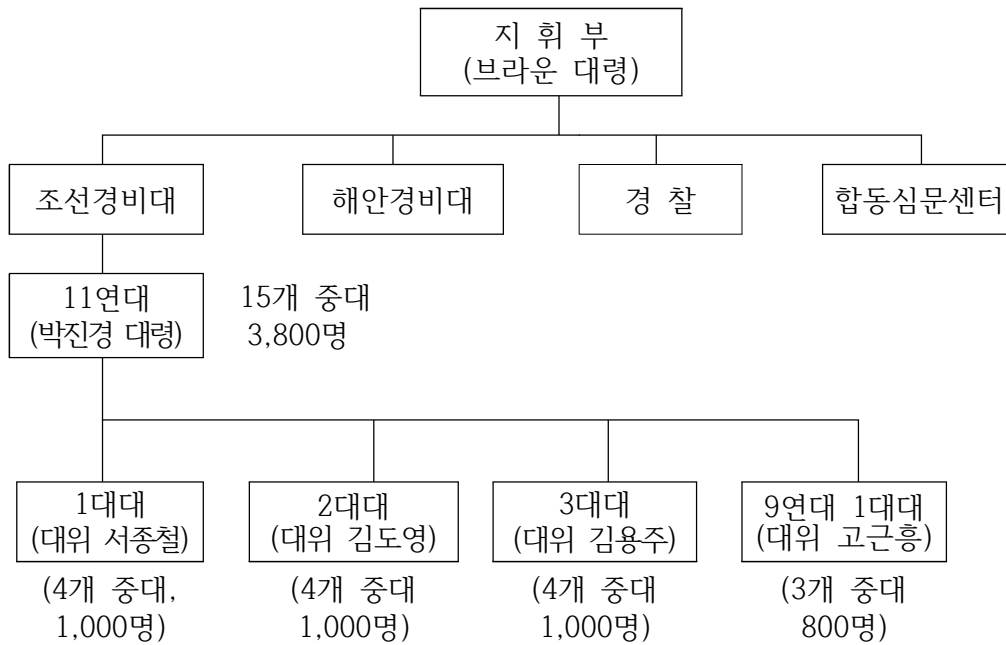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브라운 대령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내 군경합동 대유격작전을 실시하는 작전 지휘체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24)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3, US Army Milita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25)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79쪽.

26) 주한미육군군정청,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Rothwell H. Brown." 1948.7.17.

## 진압부대 편성 및 지휘체계



브라운 대령이 1948년 7월 1일 자로 작성하여 미육군 군정청 사령관에게 보고한 보고서에는 제주도 폭동진압을 위해 1948년 5월 22일까지 취해진 조치의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지침에 따라 포로에 대한 심문취조실(합동심문센터) 설립 등 체계적인 대유격작전의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체계적인 작전 시스템이 구축된 시기는 박진경 대령의 1차 대유격작전이 있기 약 10일 전이었다

## 2. 박진경 대령의 작전개념

박진경 대령에게 부여된 임무는 미군정 당국의 작전개념과 지침에 따라 제주도에서 대유격작전을 실시하고 도내 치안 및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딘 장군이 개별적으로 박진경 대령에게 전달했던 무력 최소화 지침, 그리고 전술한 딘 장군의 지침에 따라 우선 김달삼과의 귀순공작 시도도 있었다.<sup>28)</sup> 그러나 귀순공작이 여의치 않자 단계별 대유격작전을 구상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4·3사건 토벌작전사』<sup>29)</sup>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27) 김영중, 『제주 4·3 사건 문과 답』, 2021., 도서출판제주문화, 2021.3판, 357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9권에도 수록되어 있음.

28) 이선교,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08년, 서울: 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 토벌작전사』, 2002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1쪽.

“연대의 작전개념은 우선 제1단계로 선무 귀순공작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여 좌경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대 단위별로 주민 선무공작에 주력하면서 입산 공비들에게는 귀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폭도들이 이에 불응하고 대항해올 때 적극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제11연대가 계획한 제1단계 작전은 주민 자체 방위로서 각 마을 단위별로 마을 주위에 돌담을 구축하여 방벽을 만들고 자위대<sup>30)</sup>를 조직하여 자체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제2단계 작전은 본격적인 공비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

조선경비대는 병력 보충과 작전 체제 구축 등을 마치고 연대의 인민유격대 토벌 작전은 5월 30일에야 하게 된다.

#### IV. 박진경 대령 부임 전 제주도 전장 실상

미국의 중도 성향 역사학자인 Alan. R. Millett는 그의 저서 『The War for Korean War』에서 제주 4·3 사건을 한국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sup>31)</sup>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4·3 사건이 단순한 폭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sup>32)</sup>을 분명히 지닌 제주도 전체의 잘 구성된 체계적인 공격이었다는 데 있다. 그럼 이런 큰 주장만으로 제주도 4·3 사건을 한국전쟁의 시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 실제 제주도 내에 전투와 교전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주요 상황을 살펴보자.

4·3 사건 발생 : 남로당 인민유격대(정예부대와 마을자위대) 350여 명의 반란으로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 간부 집 등이 습격당하여 하루 동안에 15명(우익인사 8, 경찰관 4, 무장대 3)이 사망하는 인명피해 발생.<sup>33)</sup>

4월 7일 : 우익 청년 3명 피살, 남로당에 의한 경찰살해 보상금 걸려(자료집7권, 53쪽)

4월 12-13일 : 우익청년/경찰 3명 피살, 유격대 1명 사살(자료집7권, 54쪽)

4월 13-14일 : 경찰 작전중 1명 피살(자료집7권, 55쪽)

4월 15-20일 : 경찰 1명, 우익 2명 피살, 제주읍 전화선 절단, 전신주 36개 파괴,

30)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보조하는 남로당 자위대와 구분되는 우파 자위대인 민보단을 의미함.

31) A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n War』, 2005, University Press of Kansas, 142쪽에는 “The Korean war began on April 3, 1948, on Cheju-do with widespread, orchestrated attacks by Communist-led partisans...”라고 되어 있다.

32)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공산당에 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

33)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67쪽., 무장대 측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경찰 사망이 10명으로 되어 있음.

경찰 부친 1명 피살, 민간부부 피살, 경찰 가족 1명 피살(자료집7권, 55-57쪽)

4월 24-30일 : 제주읍 동쪽부터 서귀포까지 전화선 차단, 미군C-47기 1대 이륙 중 저격, 미군정청 내 PX 파괴, 폭도 4명 경찰에 사살, 우익인사 3명 피살, 선거관리위원 피살, 경찰 6개 마을 급습 8명 체포, 대동청년단 부인 2명 피살(자료집7권, 58-60쪽)

5월 1일에는 소위‘오라리 방화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당시 제주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닌 사건으로 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 사실관계가 잘 정리된 나종삼의 저서『4·3 사건의 진상』이라는 책자 153쪽을 인용한다. 참고로 오라리라는 마을은 4·3 사건 당시 좌익이 다수이면서도 우익도 함께 거주하는 제주도 내 마을이었다. 마을 내 우익성향의 주민들은 좌익의 괴롭힘에 시달려 이사 가려 하는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오라리에서는 4·3사건 이래 남로당자위대와 경찰로부터 번갈아 가며 죽임을 당하는 인명피해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제주읍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오라리 연미 마을의 우익 대동청년단(대청) 단장과 부단장 등 2명이 납치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4월 30일에는 동서 간인 대청 단원의 부인 2명이 세간살이를 제주읍 내로 옮기기 위해 마차를 대동하고 마을에 들어왔다가 주민들에게 납치되어 산으로 끌려갔다. 마차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대가 마을 뒷산을 수색하면서 접근하자 두 여인 중 한 명이 포승을 풀고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되었고, 다른 한 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sup>34)</sup> 5월 1일 오전 9시경, 전날 남로당자위대로부터 살해된 대청단원 부인의 장례식이 있었다. 마을 부근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경찰 3, 4명과 서청·대청 단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매장이 끝나자 트럭은 경찰관만을 태운 채 돌아갔고 우익 청년단원들은 그대로 남았다. 그중에는 오라리 출신 대청 단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오라리 마을에 진입하면서 좌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5세대 12채의 집을 불태웠다. 우익청년단원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마을을 벗어날 무렵인 오후 1시경, 마을에서 1km가량 떨어진 민오름 주변에 있던 남로당 마을자위대 20명가량이 총과 죽창을 들고 청년들을 추격했다. 청년단이 급히 피했지만, 이 시각을 전후해 마을 어귀에서 이 마을 출신 경찰관의 어머니가 피살되었다. 오후 2시경, 서청·대청 단원들로부터 남로당 마을자위대 출현 소식을 접한 경찰기동대(경찰간부후보생 1개소대 등 100여명)가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오라리 마을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로당 마을자위대는 이미 마을을 떠났고, 주민들은 불붙은 집을 진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총을 쏘며 진격해오자 주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산 쪽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고무생 여인이 숨졌다.”<sup>35)</sup>

34) 林甲生(제주시 이도2동, 당시 납치됐다 탈출한 대청단원의 부인) 증언. (濟民日報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152~153쪽)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April 27, 1948.

35) 좌익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오라리 방화사건이 좌익 무장세력에 의한 대청 단원 부인의 납치와 살해와는 무관하다는 것과 미군정이 당시 항공 정찰을 하면서 오라리 화재



5월 1-6일 : 3일 오후 남로당 인민유격대 100명 애월면 공격/경찰 대응, 4일 폭도 50명이 함덕리 공격 대청 2명 납치, 5일 새벽 남로당 인민유격대 화북리 습격 3명 피살, 5일 새벽 삼양리 대청 2명 피살, 6일 경찰 폭도 1명 사살(자료집7권, 62쪽)

5월 7-11일까지 제주도 선거폭력 사태(자료집7권, 63쪽)

	사망	부상	실종	방화	습격
경찰	1명	21명	4명		
우익인사	14명	5명			
공산폭도	21명				
주택				22채	
투표소					1곳

5월10-12일 : 10일 대규모 폭도들 한림면 공격, 경찰/경비대 합동작전으로 격퇴, 무장폭도 25명 체포, 11일 폭도들 경찰관 2명 납치, 12일 폭도 30명 민간인 1명 살해, 12일 새벽 폭도 80명 세화지서 공격, 10-12일 공산 폭도들이 구좌면 송당리 지역 수습 차례 습격, 12일 경비대는 무장 공산폭도 25명을 체포/다른 곳에서 포로 193명 체포(자료집7권, 65쪽)

5월13-20일 : 13일 자정 폭도 300명 함덕리 공격 경찰 1명 피살/민간인 2명 피살, 13일 저지리에서 경찰1명/주민 6명 피살, 14일 저지리 지서 전소, 14일 폭도 200명 한림 공격 면장 부인 피살/1명 중상 주택 6채 소실, 14일 폭도 명월리/상명리 등 공격 방화, 15일 폭도들의 한림 습격 폭도 5명 사살/경찰 1명 피살, 경찰 제주읍/애월면 일대 폭도 1명 사살, 16일 오등리와 오라리에서 경비대 폭도 1명 사살, 17일 대동청년 단장 피살,

위에 요약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내에서는 지속적인 좌우익 간의 살육과 교전이 있었다. 누가 위의 상황을 단순한 소요사태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권력과 무장세력의 교전이 아니라 좌익 무장세력이 무차별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살육을 했다는 점이다. 또 공산 무장세력은 전화선 절단이나 전신주 파괴 등 제주도 내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선거를 철저히 폭력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현장을 촬영한 것을 보고 미군정의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익세력을 시켜 마을 방화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 VI. 박진경 대령 왜곡

### 1. 4·3 사건 학살의 주범

2021년 제주 KBS에서 4.3사건 특집으로「암살 1948」이라는 다큐멘터리를 4월 2일 저녁에 방송했다. 박진경 대령의 도민 학살 왜곡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16분 30초/나레이터) 그의 강경 토벌작전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양민과 폭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도가 출현한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해 갔다. 무차별적 토벌은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었다. 당시 수용소에 수감 되었던 한 중학생의 석방 증명서 미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취조를 했다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 군홧발에 짓밟혀야 했을까.<sup>36)</sup> (17분 18초/김종민<sup>37)</sup>) 정말 닥치는 대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연대장이 학살 명령을 했다.<sup>38)</sup>

올해 3월 10일 제주도 좌익단체들은 제주도민이 세운 추모비에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을 씌우고 역사의 감옥이라 하며 박진경 대령을 4·3 사건의 학살자라고 명명했다. 또 제주의 소리에서는‘3월 12일 자 기사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학살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제주 4.3 학살 주범 박진경 대령’이라는 표현을 썼다.<sup>39)</sup>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인사들은 박진경 대령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학살이란 단어를 박진경 대령의 공비토벌 작전에 사용한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심각하게 왜곡된 주장이다. 학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가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상으로는‘고의로 특정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근의 사례는 러시아가 부차 등 우크라이나의 도시에서 행한 민간을 학살을 들 수 있다. 또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야만적 살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월 3일 새벽, 한라산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자 남로당의 유격대가 도내 24개 지서(경찰 파출소) 중 12개 지서를 습격 하고, 경찰 가족, 우익인사, 선거관리위원들을 무차별 살육과 테러를 자행하였다. 전술하였지만 1948년 4월 3일 하루에만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의해 총 20여 명이 살해된다.<sup>40)</sup>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기미

36) KBS제주 4.3사건 특집, 「암살 1948」, 2021.4.2. 저녁에 방송, 책임 PD 김정중, 프로듀서 김은정.

37) 전 제주 4.3 사건 중앙위원회 전문 위원.

38) <https://www.youtube.com/watch?v=hY8aXse5Fw8>

39)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338>, 제주의 소리는 하나의 사례이고 경남 도민일보 등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 번 박진경 대령을 4·3 사건 학살의 주범으로 왜곡한 바 있다.

가 보이지 않자 조선국방경비대 투입이 결정되고 조선 경비대는 대유격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4·3 사건과 관련하여 좌익들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1995년에 제민일보 4.3 취재반이 작성한 단행본, 『4.3은 말한다』, 제3권, 419쪽부터 428쪽에는 박진경 대령 재임 기간 작전 사상자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중 조선 경비대가 남로당 유격대를 사살한 전과는 작전 중 사살 25명뿐이다. 이 중 11명은 6월 3일 경비대와 경찰의 합동작전의 결과라 조선국방경비대가 정확히 몇 명을 사살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볼 때, 어떻게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박진경 대령의 대유격작전에 대해서는 채명신 장군도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한쪽에서는 박진경 대령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는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4.3 초기에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서 많은 주민이 입산했습니다. 그런데 박진경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양민 보호작전은 인도적이면서 전략적 차원의 행동입니다.<sup>41)</sup>(중략). 그는 주민들을 선무 공작으로 입산 인민유격대로부터 분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격전에서 유격대와 주민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이는 모택동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유격대를 섬멸하려면 우선 주민을 유격대와 분리해야 합니다. 내가 월남에서 작전할 때도 베트남과 주민을 분리하는데 작전의 주안을 두었습니다."<sup>42)</sup>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3명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매우 당혹했었고 포로 관리에 대한 지침도 내린 바 있었다. 그리고 11연대의 미 고문관 두르스 대위는 박진경 대령과 11연대의 작전을 확인 감독하고 있었다. 민간인 학살이 가능했을 리 없다. 특히 미군정의 직접적인 작전 통제하에 본격적인 대유격작전을 실시하면서 미군과 조선경비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민심을 동요하게 하는 제주도민 학살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 발발 당시 제주도에 부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누가 언제 누구를 학살했단 말인가?

박진경 대령의 인간적인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육군참모 총장을 역임한 이세호(육사2기, 당시9연대 1대대 부대대장)장군은, "박진경 대령은 진짜 인격자이고 살아 계셨다면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 하실 분이시다. 성품이 독재형이 아니다."라고

40) 제주4.3 위원회, 4.3 사건 자료집 12권, 237쪽-238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14쪽, 15쪽. 4·3 사건 당시 제주도 화북지서장이었던 문창송 경위가 1949년 6월 7일 당시 제주도 남로당 유격대장 이덕구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특공대 20명을 투입하여 이덕구를 사살하였다. 이때 이덕구의 전령이자 호위병이었던 양생돌이 소유하고 있었던 무장대 자료를 압수했고, 이를 문창송 씨가 이 문건을 단행본으로 대중에 공개한 책이,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이다.

41) 정부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18쪽.

42) 채명신(2001.4.17. 4.3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삼 채록) 증언

증언했다.<sup>43)</sup> 또 합참 본부장을 역임한 류근창(육사2기, 당시 제11연대 군수과장) 장군은, "박진경 대령은 훌륭한 분이셨다. 양민을 무조건 학살할 성품이 아니다. 모두한테 존경받는 인품의 소유자다."라고 증언했다.<sup>44)</sup> 박진경 대령은 선배, 동료, 부하로부터 존경받는 참군인이었다.

박진경 대령과 조선국방경비대의 산중 주민들에 대한 체포는 정상적인 대유격작전(현재 군 교리상 후방지역 작전의 하나임)을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유격기지 내의 민간인을 체포한 후에는 합동심문조의 심문을 거쳐 대공 용의점을 확인했고,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으며, 인민유격 대와 주민을 분리하려 했다. 그리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주민들은 석방했다.

## 2. 포로 관련 고문, 학살

(17분18초/김종민<sup>45)</sup>) 정말 닥치는 데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연대장이 학살 명령을 했다. (나레이터) KBS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한지 한달 여 동안 군경 토벌대에 끌려간 사람은 약 6,000 여명에 달한다. 당시 무장대 수는 불과 500여 명이였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총칼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이 무수했다.<sup>46)</sup>

본고 8쪽 지휘 체계도는 제주도에서의 미군정 작전의 포로 취급에 대한 좌익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지휘체계도 상의 작전 요소별 임무는 위에서 언급한 브라운 대령의 지침에 잘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로심문센터에 대한 것이다. 저들이 박진경 대령이 포로들에 대해 고문을 하고 이유 없이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의 지휘체계를 이해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진경 대령의 11연대는 브라운 대령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 내 남로당 인민유격대 진압작전을 실시했고 진압 작전 간 적의 유격기지에서부터 체포된 포로들은 모두 범죄 수사단,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센터로 인계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언이 있어서 소개한다. 당시 소대장으로 이 작전에 참가한 한 장교(조연표 소위, 육사 4기)는 “우리는 작전 간에 50세까지의 남자를 모두 학교에 나와 있는 방첩대에 인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여기서 방첩대란 심문센터에 나와 있는

43) 이세호(2001.7.15.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44) 유근창(2001.7.27.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45) 전 제주 4.3 사건 중앙위원회 전문 위원.

46) KBS제주, 2021년4월2일 방송, 『암살,1948』, 전술한 바 있으나 왜곡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 일부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함.

군의 심문관을 말한다.

문 : 진출 간의 전투라던가 또는 다른 일은?

답 : 당시 CIC(방첩대)<sup>47)</sup>가 파견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작전 간에 50세까지의 남자를 모두 학교에 나와 있는 CIC에 인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전 간에 교전은 별로 없었고, 작전 후 백록담에 발을 씻고 원위치로 복귀했습니다.<sup>48)</sup> (중략)

1948년 4월 20일경 제주도에 부임하는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딘 군정장관이 내린 지침에도 포로 보호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5월20일 군경합동 대유격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브라운 대령의 작전지침에도 포로 보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 이렇게 미군정에서 포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전술한 바 있지만 미군정 당국의 본격적인 제주도 개입 이전에 치안세력에 의해 포로에 대한 반인권적 사건 때문이었다.

연대는 박진경 대령 부임 전부터 임무 수행을 했던 미군정 당국의 고문관 드루스 대위가 있었다.<sup>49)</sup> 전술한 바 있지만, 경비대 작전은 11연대의 미고문관 드루스 대위에 의해 모든 작전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었다. 따라서 포로에 대한 고문 등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박진경 대령은 경비대 4개 대대(15개 중대 3,800여명)<sup>50)</sup>를 지휘하여 5월 30일에서 6월2일까지의 1차 작전과 6월14일부터 17일까지의 2차 작전을 수행하였다. 작전 결과, 경비대 작전의 정보가 누설되어 남로당 유격대 주력은 놓쳤으나 1차 작전 시 입산 주민 595명과 2차 작전시 포로 53명 등 650여 명을 합동심문센터에 인계하였다.<sup>51)</sup> 경찰이 포로심문센터에 인계한 주민 숫자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

6월 16일 자 미군 측 기록에 의하면 포로심문센터에는 1·2 차 작전 간 3,000여 명이 인계되었는데 심문 결과 대부분 석방하고 4개 심문팀은 575명을 심문 중이었다.<sup>52)</sup> 좌파 인사들은 암살범들의 법정 진술을 거론하면서 박진경 연대장이 6,000여 명을 체포하여 학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성시백이 운용했던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2일 자

47) CIC. 당시 방첩대(현재 용어로는 범죄수사대)는 박진경 대령 소속 부대나 조직이 아닌 독립기구였다.

48) 조연표(육사4기, 당시 9연대 1대대 2중대 소대장, 대령 예편, 2001년 10월 15일, 나종삼 4·3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채록) 증언.

49) 두르스 대위는 경비대에 대유격작전 명령이 내려진 직후인 4월 19일 무렵 제9연대에 부임한다. 이 시기는 박진경 대령 부임 전으로 김익렬 중령이 9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출처 : 김익렬 유고.

50)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83쪽; 『제주 4.3사건 자료집 12권』, 273쪽.

51) 주한미 육군사령부 일일 정보보고서, 1948.6.4 및 1948.6.15.

52) 주한미 육군사령부 민간인 고문관(Josep E. Jacobs) 보고서, "제주도 소요사태" 1948.7.2.,

기사<sup>53)</sup>를 인용한 것인데 그 기사에는 경비대와 경찰에 붙잡힌 폭도들이 6,000여 명이며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 서울에서 판검사들이 파견되어 재판했다고 되어 있다.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약 6,000명이라는 숫자는 4.3사건 이후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과 경비대에게 체포된 폭도들의 총 숫자임을 알 수 있다. 교묘하게 박진경 대령 재임 기간에 체포된 포로의 수를 부풀렸다. 박진경 대령은 5월 6일 제주도에 부임했다. 부풀려진 포로의 숫자, 고문, 학살 명령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박진경 대령이 자행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4.3사건 이후 남로당 공산 유격대가 마을에 테러와 살인을 가하면서 우익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월 10일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테러와 살육에는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녀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1948년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경종씨의 사례를 보자.

나의 부친 김경종(당시 42세)은 오등리 리장이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폭도들은 제헌의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주민들을 한라산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부친(김경종)은 오등리 리장 겸 선관위원장으로 5·10 선거를 보이콧하려는 남로당측의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5·10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친의 이러한 행동은 남로당세력인 공비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5·10 선거를 단선단정이라고 하였으나 1948년 2월 6일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 초안을 채택했으니 자기들(남로당)이 먼저 단독정부를 지지했다. 그들의 눈에는 리장 김경종은 인민의 적이고 반동이었다. 공비들이 합법적인 권력기관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도처에서 저질렀고, 부친 김경종을 비롯한 저의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했다. 5월 8일 아침 8시쯤 폭도 열댓명이 우리집을 덮쳤다. 저의 부친은 그날(5월 8일) 출타 중이어서 난을 피했고 저의 할머니(72세)와 어머니(42세),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어린 동생(2세)이 공비들의 죽창으로 이 세상을 떠났고, 집은 불태워졌다. 그리고 어린 여동생(12살)은 그날 죽창에 찔린 상처와 정신적 충격으로 앓다가 21세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 목포중앙초등학교 교사로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난을 피하였다. 당시 폭도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해했으며, 공격대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았고, 폭도 중에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sup>54)</sup>

위 사례는 공산 무장세력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위해 무차별 살육을 한 사례로 1968년 북한의 무장 공비 침투 시 이승복이라는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육한

53) 제주4.3위원회, 제주 4.3사건 자료집 2권 133쪽.

54) 高文昇, 『제주사람들의 설움』, 1991.9., 98~101쪽., 김병언(63세, 제주시 오등리) 증언

사건을 연상시킨다. 제주도 내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대혼돈의 상황 속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산중으로 끌려가는 데 집에 혼자 남이 있을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산중 유격기지에서 생활하며 어린이를 빗개(정보원, 보초)로 활용했는데 평소 높은 봉우리에 서 망을 보고 있다가 경찰이나 경비대 등 토벌대가 접근하면 깃발을 들어 이들의 접근을 알리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기지에서 발견되면 적 무장대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심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적 기지에서 발견된 어린이들이 포함된 모든 인원을 정보 획득을 위한 심문을 한 것과 어린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전투 현장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어린이를 무차별 살육한 것과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또한 좌익 학생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자신들의 이념적 노선에 동조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살상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도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다. 육사 5기로 임관하여 부산의 제5연대에 배치되었다가 4·3사건 초기에 제주도에 간 김형룡(金炯龍) 소위는 여러 명의 좌익 학생들이 동조하지 않는 학생 1명을 테러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내가 제주도에 복무하고 있는 동안 잊히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다. 제주도에 차출된 병력을 재편성 겸 교육을 위해 제주농업중학교에 주둔한 일이 있다. 당시 나는 기숙사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1948년 5월 어느 날 새벽 2시경이었다. 내가 자는 방 바로 앞에서 ‘사람 살리라’는 비명과 함께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황급히 나가보니 어느 학생 한 사람이 목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목 부위를 칼에 찔려 있었다. 나는 즉시 비상용으로 휴대하고 있던 가제와 붕대로 싸매어 응급조치하고 사병 한 사람을 달려 제주 도립병원으로 이송시켰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학생은 한림이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다. 따라서 좌익계 학생들은 이 학생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학생은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혔고, 좌익계 학생들이 그를 죽이려고 미행하자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숙소를 옮겨가면서 생활했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난 날은 학교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기숙사에서 잠자다가 변을 당했다. 범인을 잡지도 못하였다. 이 학생은 응급조치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제주도가 얼마나 살벌했고 어지러웠는지 짐작되기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sup>55)</sup>

좌익계 학생들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까지 들어와서 장교가 잠자고 있는 방 앞에서 학생회 간부에게 테러 행위를 가한 것은 대담한 행동이며, 이

55) 金炯龍, ‘高校學生들 끼리도 刺殺企圖’(육사5기생회, 『陸士 第5期生』, 1990. 6, 123쪽.

사건은 제주 사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좌익계가 우익계보다 훨씬 우세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 3. 9연대 41명 집단탈영

(18분 40초) 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 작전이 계속되자 9연대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일부 군인들이 탈영한 것도 그즈음의 일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제주 출신이었다.<sup>56)</sup>

제주 KBS의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많은 다수의 좌익 언론은 9연대 군인들의 집단탈영을 박진경 대령의 가혹한 토벌 작전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1948년 5월 6일, 박진경 중령은 제9연대(실병력은 모슬포 주둔 1개대대)장에 취임하였다. 이어 박진경 중령은 제주도로 이동한 제11연대장(3개대대)에 5월 15일부로 취임하게 되고 같은 날로 제9연대 1대대를 배속받음으로써 4개 대대를 지휘하게 된다.<sup>57)</sup> 박진경 대령은 서둘러 부대 준비를 하게 되는 데 우선 사상이 의심스러운 1대대장 오일균 소령을 사령부로 보냈다. 이어서 비어 있는 11연대의 2개 대대와 9연대 1개 대대 등 3개 대대장(대위 서종철, 대위 김용주, 대위 고근흥)을 5월 24일 총원받았고 연대 참모 요원 3명(대위 최갑중, 중령 김종평, 소령 백선진)도 보강한 후인 5월30일부터 4개 대대로 본격적인 대유격작전을 전개했다.

9연대 군인들이 집단탈영했던 5월 20일에는 박진경 대령이 이렇다 한 작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박진경 대령의 1차, 2차 작전 이전까지의 상황은 인민유격대에 의한 공격과 대응, 그리고 저들의 역대응이 주둔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1연대는 박진경 대령의 지휘를 5월 15일부터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제주도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또 지리적으로도 박진경 대령은 연대본부가 있었던 제주읍과 모슬포의 9연대는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었다. 당시 남로당 유격대의 도로 차단과 전화선 절단으로 인해 당시 탈영 사건을 연대본부에 보고했던 대대장 직무대리인 1중대장 이세호 중위는 모슬포에서 배로 제주읍으로 이동할 정도였다. 탈영한 9연대 일부 군인들은 과연 박진경 대령의 어떤 작전을 어떻게 보고 가혹한 토벌 작전이라고 여기고 탈영했단 말인가?

1948년 5월 20일 탈영한 군인들은 조선경비대 제9연대 내에 침투해 있던 좌익분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들이 탈영할 때까지 실시되지도 않았던 박진경 대령의 대유격작전에 반발하기 위해 탈영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 책임자인 문상길 중위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탈영을 한 것이다. 모슬포에 주둔했던 9연대 내

56) KBS제주 4.3사건 특집, 「암살 1948」, 2021.4.2. 저녁에 방송, 책임 PD 김정중, 프로듀서 김은정.

57)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5.15.



에는 장교들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남로당 좌익분자들이 침투해 있었다. 남로당 인민유격대로부터 노획한 노획문서<sup>58)</sup>에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세 포조직을 조선경비대에 가담시켰다는 내용이 나온다.<sup>59)</sup>

9연대의 좌익 프락치 실태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남로당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내에 수록되어 있어 원문을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1948년 3월 중 남로당 유격대가 4·3 사건 무장 폭동에 국방경비대를 동원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다.<sup>60)</sup> 4·3 사건 이전, 제주도 조선경비대는 9연대가 전부였다.

4·3 투쟁의 전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감찰청(藍察廳)과 구서(1區署) 습격에 국경(國警)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나머지 각 지서는 유격대(遊擊隊)에서 담당하기로 양면 작전을 세워 즉시 좌기<sup>61)</sup> 프락치에게 연락을 부치고 동원 가능 수를 문의한 바 800명 중 400명은 확실성이 있으며 200명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 반동은 주로 장교급으로서 하사관(下士官) 합하여 18명이니 이것만 숙청하면 문제없다는 보고가 있었음.<sup>62)</sup>

9연대 내의 좌익분자들에 대한 지도는 일제하에 제주도에서 일본군 하사관으로 복무했고, 좌익들이 많았던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 출신인 문상길 중위가 맡았다. 9연대 내에는 통신·정보참모부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남로당 좌익분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심지어 제주 4·3 사건이 터진 후 급파된 증원 부대장 오일균 소령조차도 남로당 당원이었다.<sup>63)</sup>

### 가. 남로당 제주도당 문건으로 확인된 탈영 동기의 진실

문상길은 5연대에서 1개 대대가 증파되는 4월 20일 경 김달삼과 만나 9연대의 탈영병 추진을 일차적으로 합의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남로당 노획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올구(조직지도원)를 파견하여 문소위<sup>64)</sup>와 정상적인 정보교환을 하여 오든 바 4월

5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59)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 75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268쪽., “본도 주둔 제9연대가 신설되어 1차 모병이 있으므로 대정 출신 동무 4명(고승옥(高升玉), 문덕오(文德五), 정두만(鄭斗萬), 류경대(柳京大) 등 프락치 4명을 입대시켰음.”

60) 4·3 사건 당시 조선국방경비대에 실탄이 없었고 경비대 내의 장교 프락치에 대한 동원은 중앙당의 지시라는 이유로 실제 4·3 사건 당시에는 조선경비대를 동원하지 않았다.

61) 좌기라는 표현은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원문이 국한문 혼용의 종서체였기 때문이다.

62)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 76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268-267쪽.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38쪽.

64) 육군본부에서 발행된 『임관순대장』에는 1948년 3월 15일 중위로 진급하였으나 남로당 문서에는 소위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육사 3기 동기생이었던 조선경비대의 남로당 프락치 이윤락 중위도 문상길 중위와 같은 날 진급했으나 역시 남로당 문건에는 소위로 기록되어 있다.

중순에 이르러 돌연히 부산 제5연대 1개 대대가 내도하여 산부대(남로당 인민유격대)를 포위 공격하게 되었으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연락이 있어 군책(군책임자 김달삼)이 직접 파견되어 문제를 수습하기로 되었음. 군책<sup>65)</sup>과 문소위가 만난 결과 국경의 세포는 중앙 직속이므로 도당의 지시에 복종할 수 없으나 행동의 통일을 위하여 밀접한 정보 교환, 최대한의 무기 공급, '인민군 원조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 교양자료의 배포 등의 문제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더욱이 최후단계에는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하였음.<sup>66)</sup>

이 글에서 문상길 소위가 남로당 세력과 내통하면서 조선경비대의 병력 증원상황 등을 보고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문상길 중위가 남로당의 프락치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 문소위와 정상적인 정보교환을 했다는 면에서 당시 문상길 소위는 조선경비대 내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인민군 '원조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이라는 일차 합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순 탈출이 아닌 인민군 원조부대로서의 탈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또 2 차합의는 5월 10일의 김달삼-오일균 간 남로당 대책 회의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후술하겠지만 이 회의에서 박진경 대령 암살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

◎ 최대의 힘을 다하여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무기 공급, 그리고 가능한 한 도내에 있어서의 탈출병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sup>67)</sup>

이 대목은 조선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한 문장인데, 저들은 이 문서의 지침대로 5월 20일 집단탈영 때 무기와 실탄을 소지했었다.

또 남로당 인민유격대로부터 노획한 문서인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sup>68)</sup>에 의하면 1948년 5월 20일 상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5월 20일 문 소위 지시에 의하여 9연대 병졸 최상사 이하 43명이 각각 99식 총 1정식을 가지고 탄환 14,000발을 트럭에 실어 탈출, 도중 대정지서를 습격, 개(경찰) 4명, 급사 1명을 즉사시키고, 지서장에게 부상시킨 후 서귀포 경유 상산(上山)하려고 했으나 그 연락이 안 되어 결국 22명은 피검, 탄환 다수 분실 혹은 압수당하고 겨우 4, 5일 후에야 나머지 21명과 아 부대와 연락되었음. (이 때에는 각각 99식 총 1정식과 99식 탄환 100발식만이 남아 있었음). 이 때 연락이 안 된 원인은 문 소위가 우리

65) 군 책임자의 줄임말로 김달삼을 뜻함.

66) 『4·3 사건 자료집 12권』, 269-270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77-78쪽.

67) 『4·3 사건 자료집 12권』, 271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80쪽.

6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에게 보낸 연락 방법과 탈출병들이 연락한 연락 방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sup>69)</sup>

노획문서에 문 소위 지시로 탈영이 있었던 5월 20일과 실제 탈영이 발생한 날짜가 일치한다. 또 탈영 당일 문상길 중위가 9연대 1대대 당직사령이었고 탈영은 9연대 1대대 최모 상사 인솔하에 이루어졌다. 미군정 보고서에는 최모 상사 등 41명이 실탄 5,600발을 휴대하고 차량으로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되어있다.<sup>70)</sup> 탈영 당일 당직사령인 문상길 중위는 병사들의 탈영 사실을 확인하고 새벽녘에 비상을 걸었으나 인원 점검만 했을 뿐 적극적인 탈영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일부 병력을 피습당한 개정 지서로 보냈으나 곧 돌아오고 말았다.<sup>71)</sup> 문 중위는 자신의 지시로 병사들이 탈영했으니 탈영 대책에 적극적일 리가 없었다.<sup>72)</sup> 이들의 탈영은 가혹한 토벌작전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간상으로 탈영은 박진경 대령의 작전 개시 이전이었으며, 남로당 노획 문건, 40명 이상이 차량, 실탄, 무기 등을 가지고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합류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보았을 때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탈영이었고 이는 조선경비대의 활동을 사보타주하라는 남로당 지시를 이행한 것이었다.

#### 4. 박진경 대령 암살 동기

(25분 22초) 검찰은 한라산 무장대 총책임 김달삼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인 손선호 하사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상길 중위는 동족상잔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상길 중위, “박 대령 부임 후의 대내 공기는 전반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 부대에 무조건 공격 명령이 내려졌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44분 45초) 김종민, 문상길의 행동에는 적어도 자기 확신이 있는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상관을 암살했다. 그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문상길을 단순하게 상관을 암살한 암살범이 아니라 동족, 특히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역사의 법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sup>73)</sup>

박진경 대령의 2차 대유격작전이 종료된 6월 17일 밤에 임관호 2대 제주도지사가 제주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제주읍에서 연대장 긴급 축하연을 열었다. 술을 잘 못 마

69)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81쪽., 『제주4·3 사건자료집 12권』, 271쪽.

7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5.24.(No. 842)

71) 나종삼, 위의 책, 189쪽.

72) 나종삼, 위의 책, 189쪽.

73) KBS제주 4.3사건 특집, 「암살 1948」, 2021.4.2. 저녁에 방송, 책임 PD 김정중, 프로듀서 김은정.

셨던 박진경 대령은 자정 무렵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침실에서 곤히 잠이 들었다. 침실이라야 집무실 한쪽에 마련한 야전침대였다. 자정이 넘은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 주둔 9연대 1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의 지시를 받은 손선호 하사 등 일당 8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어 손전등을 비추고 취침 중인 연대장을 M-1 소총으로 사살하였다.

박 연대장의 장례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남산동에 있는 경비대 총사령부에서 통위부장(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와 유가족,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등 각계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部隊葬, 육군장 제1호)으로 치러졌다.<sup>74)</sup>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은 육군장(陸軍葬) 제1호로 기록된 고급 장교의 첫 희생이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언론에서도 재판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암살사건 즉시 군·경은 물론 미군 CIC(방첩대), CID(범죄수사대) 요원들이 투입돼 암살범을 찾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sup>75)</sup>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사건 7일 만에 모 하사관이 보낸 한 장의 투서로 실마리가 풀렸다. 투서는 '3중대장 문상길 중위와 연대정보과 선임하사 최상사를 잡아보면 암살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sup>76)</sup> 문상길 중위가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다면 만천하에 자신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다고 알리고 자수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 프락치로 조선국방경비대 9연대 책임자로 암약했었고 이미 5월 20일의 조선 국방경비대 9연대 장병 41명의 탈영을 했기 때문이었다. 문상길은 남로당 지시에 따라 남로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기 때문에 자신의 박진경 대령 암살 사실을 은닉하고 싶었을 것이 확실하다.

문상길 중위를 시작으로 암살사건 연루자들이 속속 체포됐다. 그들은 문상길(文相吉·중위), 손선호(孫善鎬·하사), 배경용(裴敬用·하사), 양회천(梁會千·이등상사), 신상우(申尙雨·하사), 강승규(姜承珪·하사), 황주복(黃柱福·하사), 김정도(金正道·하사), 이정우 등 모두 9명이었다.<sup>77)</sup> 암살사건 관련자 중 이정우는 M-1 총 1정을 소지한 채 입산해 인민유격대에 합류하여 체포를 피했다.<sup>78)</sup> 직접 총을 쏘아 연대장을 암살한 사람은 부산 5연대 출신 위생병 손선호 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암살범들을 고등군법회의에 넘기기 위해 7월 12일 서울로 압송했다.<sup>79)</sup>

74) 『京鄉新聞』, 1948년 6월 23일. 후일, 박대령의 부대장은 육군장 제1호로 기록된다.

75) 6th Division,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73, June 18, 1948.

7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1쪽.

77) 『國際新聞』, 1948년 8월 10일; 『京鄉新聞』, 1948년 8월 15일; 『漢城日報』, 1948년 8월 15일.

7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14쪽, 82쪽.

79) 『自由新聞』, 1948년 7월 13일.

고등군법회의 재판의 초점은 연대장 암살의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데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지형(李智衡) 중령은 문상길 중위가 인민유격대 책임자인 김달삼과의 두 차례의 회담을 하고 그의 사주를 받아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손선호 하사가 M-1 총으로 박 대령을 암살했다는 내용의 기소문을 낭독했다.<sup>80)</sup>

암살의 주범인 문상길 중위는 법정진술에서 동족상잔을 피해야 한다는 김익렬 전 연대장의 방침에 찬동했기 때문에 김익렬 중령과의 회견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김달삼을 만났고, 두 번째는 박 대령 부임 후로 “김달삼이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 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sup>81)</sup> 그러나 문상길은 김달삼이 ‘박 연대장을 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김달삼 지령설’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 됐다.

또 문상길이 김달삼을 두 번 만났다는 말은 완전한 허위 증언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 항공기지 오무라(大村)부대가 건립한 장소(대정읍 상모리 3376-1)<sup>82)</sup>를 해방 후 미군정청이 접수하여 받은 대정초급중학교에서 받은 조선경비대 9연대가 사용하고 있었다. 김달삼<sup>83)</sup>(본명 이승진)은 1946년 10월 20일부로 공민과 담당 촉탁 교사로 월급 300환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이 학교에 부임하였다. 문상길도 1947년 4월 19일 조선경비사관학교를 3기로 졸업하고 동년 11월에 제주 조선경비대 제9연대에 배치되었다. 문상길은 이승진(가명 김달삼)과 자주 어울렸다. 이승진(김달삼)은 김익렬과 함께 일본군 복지산업비사관학교 출신이며 군사 문제에 해박했고 문상길 중위 역시 일본군 부사관 출신이었으며 둘은 같은 연배의 청년으로 사상적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퇴근 후 만나 시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4·3사건이 일어난 후 문상길이 말을 타고 나타나 김달삼 집에 며칠 머무르다 가기도 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sup>84)</sup>

자신만만한 확산범이 무엇이 두려워 김달삼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던 말인가? 문상길은 자신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장 김달삼과 내통하고 경비대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남로당 지시로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싶었다.

## 가. 남로당 인민유격대 노획문서를 통해 밝혀진 진실

제9연대 프락치 책임자인 문상길은 법정진술 시에 4월 20일 경비대 1개 대대가 제주도 파견되는 데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김달삼과 회동한 사실과 5월

80) 새한일보, 1948년 10 상순(2권 16호); 신상준, 『제주 4·3 사건』하권 497쪽.

81)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4일.

82) 제주연구원. 제주육군제1훈련소구술조사(부대시설위치를 중심으로).(제주:일신옵셋인쇄사, 2019), p.38.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사건교육계피해조사보고서. (제주: 평화사, 2008), p.197.

84)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권, (제주: 도서출판 한울), p. 200.

10일 김달삼·김양근-오일균·이윤락 4자회담에서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은 일절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3 사건 자료집 12권』<sup>85)</sup>과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86)</sup>

9연대 연대장 김익렬이가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 대표와 회담 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국방경비대)의 산(山) 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4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전후 2회에 걸쳐 군책(軍責)<sup>87)</sup>과 김연대장과 면담하여 금반 구국항쟁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을, 인민과 국경(국방경비대)을 이간시키려는 경찰의 모략 등에 의견 일치를 보아 김연대장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음(제1차 회담에는 5연대 오일균씨도 참가, 열성적으로 사건 수습에 노력하였음)<sup>88)</sup>

이 대목에서는 남로당 무장세력이 소위 김익렬의 ‘평화회담’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경비대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익렬 9연대장이 하고자 했던 소위 ‘평화회담’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억제 전술에 교묘히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브라운 대령의 1948년 7월 1일 보고서에도 나온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에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인해 5월 10일 선거가 무산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두 명의 11연대장들이 공산 선동가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단호한 작전이 필요한 곳에 지연전략을 구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sup>89)</sup>

5월 10일 제주읍에서 도당 대표로서 군책과 조책<sup>90)</sup> 2명과 국경측에서 오일균 대대장 및 부관, 9연대 정보관 이소위 등 3명과 계 5명이 회담하여 ⊖ 국경 프락치에 대한 지도 문제 ⊖ 제주도 투쟁에 있어서의 국경이 취할 바 태도 ⊕ 정보 교환과 무기 공급 등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음. (중략) ⊕ 제주도 치안에 대하여 미군정과 통위부<sup>91)</sup>에서는 전면적 포위 토벌 작전을 지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면 결국 제주도 투쟁은 실패에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국경에 대해서는 포위 토벌 작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보타주 전술을 쓰며 국경 호응 투쟁에 관에서는 중앙에 건의한다. 특히 대내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 이하

85) 4·3 사건 자료집은 11권까지만 대중에 공개되고 도서관 등에 배포되어 있다. 그 경위는 맺음말에서 후술한다.

86) 『4·3 사건 자료집 12권』, 237쪽-238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14쪽, 15쪽.

87) 남로당 제주도당 군 책임자를 줄여서 쓴 단어로 김달삼을 뜻한다.

88) 『4·3 사건 자료집 12권』, 270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78쪽.

89) 김영중, 『제주 4·3 사건 문과 답』, 2021., 도서출판제주문화, 2021.3판, 356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9권에도 수록되어 있음. 박진경 대령도 미군정의 지침에 따라 귀순공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90) 조직 책임자

91) 당시 국방부의 명칭

반동 장교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된다.<sup>92)</sup>

이 대목은 남로당에서 제주도의 국방경비와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와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 국경 프락치에 대한 지도 문제’라는 항목은 국방경비대 내에 남로당 프락치가 실존했음을 명확히 입증해 준다. ‘⊖ 제주도 투쟁에 있어서의 국경이 취할 바 태도’라는 항과 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방경비대를 동원한 전면적 토벌작전은 제주도 남로당의 투쟁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국방경비대의 토벌 작전 참여를 저지하고 지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보타주 전술을 쓰라고 했다는 점이다.

또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국경 내의 호응 투쟁<sup>93)</sup>에 관하여 중앙에 건의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보타주 전술을 도당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국방경비대 내의 프락치를 동원한 투쟁은 중앙당의 결정 사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㉔항 끝에 나온 반동의 거두 박진경 대령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문상길 중위가 당시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지시에 따라 박진경 대령을 살해하였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 나. 기타 정황과 재판 결과

문상길의 수상한 행적은 더욱더 그가 계획적인 암살을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1차 작전을 끝낸 9연대 1대대는 제주에서 정비 겸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세호는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제주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증언했다.<sup>94)</sup> 작전이 끝나는 날 연대장 진급 축하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상길은 입원이라는 거짓 구실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2차 작전에서 열외로 하여 병원에 있으면서 연대장 암살계획을 준비했다.

한 미군보고서는 “당의 전복활동을 전담하는 이 조직(제주읍 특별위원회)의 무모하고 냉혹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놀랄만한 한 가지 사례는 경비대 제11연대장을 살해한 일일 것이다. 연대장의 움직임은 경비대에 침투한 세포들이 확실하게 보고했다”<sup>95)</sup>고 기록하였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복활동을 전담하는 지하조직인 제주읍 특별위원회가 문상길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연대장 암살에 관여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피고인들도 한결같이 김익렬 전 연대장과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을 비교하면서

92) 『4·3 사건 자료집 12권』, 270-271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79-80쪽.

93) 호응 투쟁은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함께 무장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뜻한다.

94) 이세호 증언, 2002년 10월 4일, 동부이촌동 자택, 4·3진상조사 전문위원(나종삼, 김종민, 현석이) 채록

95)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 Do from Colonel Brown, 1 July 1948.[첨부문서 : 제주도 남로당원을 조사해 얻은 제1차 보고서 (1948. 6. 20)]

무모한 토벌전을 막기 위한 것이 암살의 동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 박진경 연대장을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전략).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박 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sup>96)</sup>고 말하고, 경찰이 저지른 일과 전임연대장 시절인 5월 1일에 발생한 오라리 사건 등이 박대령 부임 후의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상부의 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박진경 연대장을 비난하면서 직속상관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없이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암살범들의 사상문제는 도외시한 채 암살범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했다. 관선변호인 김흥수(金興洙) 소령은 이들의 배후를 확실히 알지 못 한 채 “문 중위 이하 각인은 산사람의 지령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무슨 사상적 배경도 없고 다만 민족애와 정의감에서 나온 범행이었으니 특별히 고려해 달라”고 변호했다. 이는 당시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내부사정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양(金養) 민선변호인도 4·3사건의 원인이 악질경관과 탐관오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관 이지형 중령은 “그릇된 민족 지상의 이념에서 군대의 생명인 규율을 문란케 한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sup>97)</sup> 선고 공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하루 전인 8월 14일 열렸다. 재판부는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신상우, 손선호, 배경용 하사관 등 4명에게 총살형을 선고했다. 또 양희천에게는 무기징역을, 강승규에게는 5년 징역을 각각 선고했으며 황주복·김정도 하사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sup>98)</sup>

재판장인 통위부 감찰총감 이응준 대령에 의해 내려진 이 판결은 유동열 통위부장을 거쳐 딛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은 후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었다.<sup>99)</sup> 그런데 변호인의 감형 진정서가 제출되고, 각계에서 감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총살형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다. 그 덕분인지 신상우·배경용에 대한 총살형은 집행 직전 특사에 의해 무기형으로 감형되었다.<sup>100)</sup> 그러나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결국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의 한 산기슭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 다. 암살범 문상길 손선호의 행적

박진경 대령 암살 주범인 문상길 중위는 경북 안동 출신이며 어릴 적에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 후 안동으로 돌아왔다. 일본군 부사관 출신으로 좌익 단체인 국군준비대

96) 『漢城日報』, 1948년 8월 14일.

97) 鄭東熊, 「동란 제주의 새 비극-박대령살해범 재판기」, 『새한민보』, 1948년 10월 상순.

98) 『京鄉新聞』, 1948년 8월 15일.

99)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5일.

100) 『京鄉新聞』, 1948년 9월 25일.



에 가담하고 조선 민주 애국청년 동맹에도 가입한 좌익정년이었다.<sup>101)</sup> 그는 국군준비대가 해산되자 대구의 제6연대에 1기생으로 입대했고, 육사 3기로 임관하여 제주도 제9연대에 배치되어서는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좌익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제9연대에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 명령이 하달되자 토벌을 공공연히 반대하였으며, 경비대 1개 대대(대대장 오일균 소령)가 증파되자 대책 수립을 위하여 4월 20일경에 김달삼과 회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연대장 이치업 중령과 후임연대장 최경록 중령을 암살하려 했고, 소대장을 위협하거나 살해하려 했으며, 선거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어느 날 전임연대장 이치업 중령이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는데, 같이 식사했던 미 고문관(맨스필드 중령, 미군은 장교가 부족하여 제주도 군정관이 9연대 고문관을 겸무)이 병원으로 신고 가서 응급치료 하였다. 연대장은 4일이 지나서야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연대장의 병명이 급성장질부사로 알려졌으나 확실치는 않다. 그런데 박 대령 암살로 열린 군법회의 진술에서 문상길은 “억울합니다. 내가 전 연대장 이치업 중령을 독살만 시켰다면 지금쯤 평양에 가서 최고 영웅훈장을 탔을 텐데, 그걸 못해서 억울합니다.”라고 했다.<sup>102)</sup> 이는 당시 본부중대장이던 문상길이 연대장을 독살하려다 실패했음을 의미하였다. 그는 신임연대장 최경록 중령도 2번이나 암살하려 했으나 개(犬)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도 밝혀졌다.<sup>103)</sup>

또한 문 중위는 9연대 1대대장 직무대리를 했던 이세호 중위를 암살하려 했다고 한다. 문 중위는 소위 시절 이세호 중대장 밑에서 소대장을 했으며 숙소를 중대장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집단탈영 사건이 터졌을 때 대대장이 공석이므로 이세호는 대대 선임 장교여서 제1중대장 겸 대대장 직무대리였고 문상길은 제3중대장으로서 그날 대대 당직사관이였다. 이세호가 당직을 했던 문 중위를 책임 추궁했다라면 탈영책임자를 금방 알아냈을 터였다. 문상길은 이때 이세호를 암살하려 했으나 책임추궁을 심하게 하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는 이세호가 8월에 조선국방경비대 본부로 전출한 뒤 연대장 암살사건으로 서울의 영창에 있던 문상길을 면회할 때 문상길이 고백한 내용이다.<sup>104)</sup>

문상길 중대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바 있는 소대장 김준교 소위는 “우리가 99식 총과 일본도를 갖고 산에 숨어있는 수상한 자들을 잡아 오면 문상길 중대장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대장을 기합을 주고는 그들을 모두 풀어주곤 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고하냐?’고 항의하면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 문상길이는 공비와 내통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다.<sup>105)</sup>

101) 金南天,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기(2)」 『청년생활』, 1950. 1. 32쪽

102) 李致業(82세,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9연대장 역임, 2001. 10. 26 채록) 증언

103) 國防部, 『韓國戰爭史』 제1권, 441쪽

104) 李世鎬(79세,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대장 직무대리, 2001. 3. 12. 및 2002. 10. 4 채록) 증언

또한 소대장 채명신 소위는 여러 차례나 문상길 중대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언덕 아래의 물웅덩이에서 목욕하다가 총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부하 소대원들이 엄호사격을 한 덕으로 살았다”라고 하였다.<sup>106)</sup> 그리고 한 번은 밤에 3/4톤 차량으로 병사 2명을 대동하고 밤에 서림 저수지에 배치된 2개 분대의 근무상태 점검을 위한 순찰을 하다가 인민유격대의 매복에 걸려 죽을 뻔 하였다. 적은 채 소위가 시간을 끌기 위하여 어둠 속에서 말을 걸자 “채명신 소위! 포위되었으니 저항 말고 손 들고 나오라” “우린 제주도 인민항쟁군이다. 빨리 항복하라” “채 소위, 고집부리지 마라. 너희 부대 속에도 우리 편이 많다” 는 등의 말을 들었다. 채명신은 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연대장 암살범으로 체포된 후에야 그날 밤의 일들이 이해되었다고 하였다.<sup>107)</sup> 즉 인민유격대가 채 소위가 순찰하는 코스와 시간은 물론 계급과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고 기습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저들이 중대장 문상길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채 소위는 미인계에 걸릴 뻔한 경험도 있었다. 어느 날 문상길 중대장은 채명신 소위에게 특별외박을 강요하면서 공급계(보급계) 김 중사에게 채 소위를 수행토록 지시하였다. 채 소위는 모슬포에서 김 중사의 친척 동생뻘이 된다는 여학생을 소개받았고, 자연스럽게 방안으로 들어가 술상까지 받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중사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으며, 채 소위는 술과 쌀밥으로 저녁까지 대접을 받고, 자고 가라는 유혹까지 받았다. 그러나 채소위는 그녀의 입에서 공산 남로당에서 쓰는 ‘인민항쟁’ ‘경찰 때문에 제주도민이 일어섰다’는 말이 튀어나오자 정신이 펄쩍 들었다. 그는 순찰을 인계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대로 돌아왔다. 채 소위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미인계였다’라고 하면서 중대장이 외박을 강요한 의미를 그 뒤에서야 이해하였다고 하였다.<sup>108)</sup>

또한 문상길은 투표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5·10 선거 당일, 경비대는 경찰과 함께 투표장을 경비하게 되었는데, 문 중위는 부하들에게 “투표장을 경비할 것이 아니라 투표장을 파괴하라”라고 명령함으로써 문 중위의 부하들이 배치된 투표장에서는 경찰과 경비대 간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sup>109)</sup> 문상길 중위는 기혼자였으며 그의 족보에는 부인 이름이 있고 부인의 묘가 만주에 있다고 되어 있다.

박진경 대령을 M-1 총으로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서 기혼자였다. 그는 조선 민주 애국청년 동맹에 가담하였고 대구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대구의 제6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1948년 3월에 부산 제5연대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가 4월 20일에 제5연대 1개 대대(오일균 대대)가 제주도 출동 시

105) 金俊教(78세,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당시 9연대 소대장, 2001. 2. 13 채록) 증언

106) 蔡命新,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3. 57~59쪽

107) 蔡命新, 위의 책, 59~63쪽

108) 蔡命新,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63~69쪽.

109) 金南天,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기(1)』(청년생활, 1949. 12), 34쪽.

제주도에 왔으며, 제주도에서는 선거 방해와 급식 관련 태업 등 나름대로 부대 내에서 좌익활동을 하였다. 그는 문상길 중위와 사상이 맞아 호흡이 맞아 사상적으로 문상길의 충실한 부하가 되었다.

## VI. 맺음말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은 물론 4·3 사건의 발발 원인에 대한 왜곡도 상당하다. 4·3 사건에서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에 반대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아니면 어떤 나라로 통일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4·3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1948년 3월에 경찰에 의해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제주도의 남로당 핵심 간부들은 1948년 2월 22일 신촌 회의에서 4·3 무장 폭동을 실행하기로 했다.

전향한 남로당원의 제보를 받은 제주 경찰은 1948년 1월 22일에 남로당 회의장을 급습하는 등 2회에 걸쳐 220여 명을 연행하였는데 회의장에서 입수한 문건에는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 폭동을 시작하고, 경찰 간부와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며, 총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 하라”는 폭동 지령문이 있었다.<sup>110)</sup> 이와 같은 지령문은 2월 12일에도 압수되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체포를 면한 간부급 19명이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몇 차례 회의하다가 22일의 신촌 회의에서 3일간의 강온파간 격론 끝에 투표를 거쳐 경찰에 대한 무장투쟁을 결정하게 되었다.<sup>111)</sup>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남로당 제주도당과 인민유격대에서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박진경 대령의 제주도 근무 기간 43일이 포함된 시기이다. 이 문서는 내용의 범위와 상세함 등을 보아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장이었고 군책이었던 김달삼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달삼은 1948년 8월 21일에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 회의와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에게 남로당 제주도당의 투쟁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소위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신빙성이 높다는 1차 보고서이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정확한 사

110) 주한 미육군 971 방첩대 격주간 보고서, 1948년 2월 1일~2월 15일.

111) 이삼룡(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양조훈, 김종민 채록) 증언. 이삼룡의 증언으로 '신촌'회의'의 실체가 알려졌다. 그의 증언에는 봉기가 결정된 후 고문치사 사건이 나니 우리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였다는 내용도 있다.

실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경 대령은 남로당으로서는 반동의 거두였으며 숙청의 대상이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도착한 지 4일 후인 5월 10일 숙청이 결정된다. 9연대 장병의 탈영은 두 번에 걸쳐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이다.<sup>112)</sup>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문상길이 등장하고 정상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문상길이 남로당의 프락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부보고서 작성 때 제주도 출신이었던 발간책임자는『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내용을 4·3 사건 자료집에서 빼려 했다. 왜 저들이 이 보고서를 빼려 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간다. 결국 이보고서는 4·3 사건 자료집 12권에 수록되기는 하였지만 12권은 4·3 사건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들과 관계관들에게만 보고서 작성용으로 약 30권을 제공한 게 전부였다. 4·3 사건 자료집 12권은 발간되지 못했다. 정부보고서 작성 시 전문위원으로 정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나종삼은 남로당 인민유격대 자료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4·3 사건 자료집에 수록되게 된 에피소드를 전해주었다.<sup>113)</sup> 그의 증언을 첨부한다.

작고하신 현길언 교수는 그의 저서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에서 4·3 사건을 보는 시각을 “폭도들의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사례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반란의 목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반국가적인 반란이라 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반인권적 사례 또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4·3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방향과 시각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 일부 반인권적인 공권력을 일반화하여 공권력 전체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폭력행사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 정치 권력과 대중영합주의에 의한 역사 왜곡이다. 이러한 왜곡은 반목과 대립의 악순환을 지속해서 일으키고 일반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 군인과 경찰을 왜곡해서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 갈등과 대립·반목의 복잡한 실타래를 해결하는 첫 출발은 사실관계 정립과 그에 대한 인정에 있다. 4·3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립의 출발점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것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112) 5연대 1개 대대의 제주도 추가 배치에 따른 대책 회의가 열렸던 4월 20일에 1차 합의가 있었는데 이 시기는 박진경 대령이 부임하기 이전이었다.

113) 나종삼 증언(종로 소재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사무실, 2022년 7월 10일, 17:00-17:20, 박철균 기록). 4·3 사건 자료집 작성책임자가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자료집 수록에 반대하여 나종삼 위원과 한차례 논쟁을 벌인 후, 지원단장을 설득하고 동 내용을 4·3 사건 자료집 12권에 수록하게 되었다고 증언함. 세분 내용 첨부 참조.

붙임 : 나종삼 증언(『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4·3 자료집 12권에 수록된 경위)

장소 : 종로 소재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사무실

시간 : 2022년 7월 10일, 17:00 - 17:20

기록 : 박철균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1948년 3월 15일부터 1948년 7월 24일까지의 남로당 제주도당과 무장대에서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1948년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가해서 김달삼이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당시 박헌영은 미군정의 체포령을 피하려고 월북해 있었음)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임을 알 수 있어요.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김달삼-김익렬 회담시 김익렬의 반응까지 기록되어 있어 그 회담에 직접 회담한 사람이 작성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달삼이 직접 작성한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4·3 위원회에서 자료집을 작성했는데 자료 편집 시 내가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니 이 자료를 자료집에 넣자”고 주장하자 자료집 발간 책임을 맡았던 김종민이 이를 반대했어요. 이유인즉 “그 자료는 이미 책으로 발간되었으므로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냐 자료집 발간 목적이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빼면 자료집 발간 목적이 훼손된다”고 하며 언쟁을 벌였고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서류를 김종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김종민은 자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사코 자료집에서 빼려 했고 나는 그 자료를 넣으려고 복사한 자료를 주면서 그 자료를 넣으려고 했었지.

나는 화를 식히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경복궁 경내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 출신 김한욱 지원단장이 찾는다는 연락이 휴대폰으로 왔어. 옆방에서 큰소리가 났으니 단장은 왜 싸우는지 알고 싶었겠지.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한 부 복사해서 지원단장실로 들어갔지. 그리고 지원단장에게 이 자료가 남로당의 내부 문건으로 4·3 사건 진상 조사에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자료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내 의견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장의 지시로 남로당 무장대 자료가 자료집 12권에 수록될 수 있었습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고문승 『제주 사람들의 설움』, 1991.
- 고재우, 『濟州4·3暴動의 眞相은 이렇다』, 1998. 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 토벌작전사』, 2002.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 金南天,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기(1)』, 청년생활, 1949.
- 김영중, 『제주4·3사건: 문과 답』, 제주문화, 2021, 3판.
- 金炯龍, 『陸士 第5期生』, 1990.
-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대림인쇄사, 1995).
-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3.
-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5.15.
- 육군본부, 『임관순대장』
- 육군본부, 『후방지역작전』, 야전교범 운용-3-3(2018.1.1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이운방, 『4·3사건의 진상』(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증언자료집 I, 1989. 4.).
- 이선교, 『제주4·3 사건의 진상』, 2008년, 서울: 도서출판현대사포럼.
- 鄭東熊, 「동란 제주의 새 비극-박대령살해범 재판기」.
- 濟民日報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권(1994. 3); ③권(1995. 3), 전예원.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 권(1989. 4); II 권(1989. 8), 한울.
-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12.
-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②권, ⑤권, ⑥권, ⑦권, ⑩권.
- 蔡命新,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태학사, 2016.

### 증언

- 金俊敎(2001. 2.13. 채록) 증언.
- 나종삼(2022. 7.10. 박철균 기록) 증언.
- 유근창(2001.7.27.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 이삼룡(2002. 7.11. 양조훈, 김종민 채록) 증언.

이세호(2001.7.15.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李致業(2001, 10.26. 채록) 증언.

조연표(4·3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삼 채록) 증언.

채명신(2001.4.17. 4.3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삼 채록) 증언.

## 신문

『國際新聞』, 『京鄉新聞』, 『朝鮮日報』, 『漢城日報』, 『自由新聞』, 『朝鮮中央日報』, 『漢城日報』, 『새한민보』.

## 영문

A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n War』, 2005, University Press of Kansas.

Cheju-Do Operation," April 18,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79-), 1980, Vol. 2. (1980), pp. 139-197, Published by: Duke University Press.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April 27, 1948.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3, US Army Milita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 Do from Colonel Brown, 1 July 1948.

## 웹사이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imhc.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397&siteId=imhc&menuUIType=sub>.

<https://www.youtube.com/watch?v=hY8aXse5Fw8>.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338>.





토론문 / 대한민국은 월남자들이 세운 나라

김 용 삼



## 대한민국은 월남자들이 세운 나라

김용삼<sup>1)</sup>

### 1. 박진경 대령을 통해 본 제주 4·3

박철균 님의 발제문 ‘제주 4·3사건 역사왜곡’은 제주 4·3을 접근하는 통로를 박진경 대령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4·3사건의 진면목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제주 4·3은 1946년 10월 1일의 대구 폭동과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국군 14연대 반란의 중간에 교량처럼 존재하는 사건이다. 대구 폭동은 남한을 군사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의 질서를 뒤흔들기 위해 스탈린이 지령한 ‘신전술’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제주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좌익들이 벌인 사건이다.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에서 가장 가까운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1개 대대 병력을 파견하려 하자 14연대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14연대 반란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한 현역 군인들의 반란에 좌익 민간인들이 합세한 사건이었다.

세 사건의 일련의 흐름은 대한민국의 부정이고, 반대였다. 공산당의 도전은 ‘단선(單選)·단정(單政) 반대’라는 구호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집요한 폭동·반란으로 표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4·3 사건이 제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제주에서 일어났다.

발제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박진경 대령은 미군정 당국의 명에 따라 1948년 5월 6일 제주도 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6월 18일 새벽, 암살당할 때까지 43일 동안 제주도 현지에서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폭동·반란을 일으킨 빨치산 세력의 토벌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던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 한국 육군을 이끌어갈 인재

미군정장관 윌리엄 딘(William Frishe Dean) 소장은 한국군 장교 중 백선엽과 박

---

1)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진경이 가장 정직하고 머리가 좋아 한국 육군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적극 후원했고 한다. 단 소장은 자신이 아꼈던 박진경 연대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아 자신이 직접 제주도로 날아가 C-47 수송기에 박 대령의 유해를 실어 왔다.

박 대령의 장례는 6월 22일 서울 남산동에 있는 경비대 총사령부에서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통위부장, 단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육군장(陸軍葬) 제1호로 치러졌다. 이러한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박진경 대령은 한국군을 이끌어갈 재목이었다.

그가 제주에서 휘하 부대를 지휘하여 수행한 빨치산 토벌작전(대유격작전) 관련 내용은 존 메릴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새로 9연대장에 취임한 박진경 중령은 3단계 전략에 따라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1단계는 마을을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고 자위대를 훈련시켜 전략촌을 구축했다. 2단계는 경비대가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지원 하에 대대적인 중산간 지역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진압부대는 30~40미터 간격으로 한라산 자락을 샅샅이 수색했고, 정찰기는 공중에서 정찰활동을 통해 게릴라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었다. 산간 마을들이 불탔고 주민들은 해안의 난민 수용소로 이주되었다. 3단계는 빨치산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난민수용소 내에 좌익 색출센터를 설치했다.’<sup>2)</sup>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입장에서 보면 박진경 대령의 위상은 정반대 대척점에 위치한다. 그들 시각에서 보면 박 대령은 분단국가 수립을 봉쇄하고 공산통일을 위해 봉기한 의로운 혁명 전사들을 무력화시킨 악질 반동이 분명하다.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 대령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제멋대로 날조하여 그를 역사의 죄인, 악당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박진경 대령은 포로 학살·고문·학대의 주인공, 빨치산이나 주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상 명령을 내린 살인마, 박 대령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여 연대 병력이 탈영한 미치광이 지휘관으로 날조 왜곡했다. 박진경 대령을 역사의 악인(惡人)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들의 저항은 정당한 의거요 봉기, 민중항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반대한민국 세력의 주장들이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역사 조작이란 사실을 발제자의 논문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2) 존 메릴 지음, 이종찬·김충남 공역,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두산동아, 2004, 101~102쪽.

## 2. 국제적 시각에서 제주 4·3 바라보기

박진경 대령을 통해 본 제주 4·3 바라보기가 국내적 시각에서의 분석틀이라면, 국제적 시각에서 제주 4·3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 4·3이 1948년 4월에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국제적 시각으로 규명하는 작업의 첫 단추는 1947년 3월 12일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 연설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산 종주국 소련과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전후에 동유럽과 발칸반도에서 격렬하게 추진되는 소련의 팽창정책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 지도부는 소련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포기하고 대결 및 봉쇄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트루먼 독트린’ 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을 주적(主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냉전에 돌입했다.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유럽 제일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즉 유럽을 먼저 지키고, 유럽 경제를 우선적으로 부흥시키는 전략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6월 5일 막대한 달러를 풀어 유럽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마셜 플랜을 가동했다. 7월에는 공산 진영에 대한 ‘봉쇄정책’을 발표했고, 1949년 4월 4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여 미국과 서유럽의 집단안보를 강화했다.

소련도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공산권 국가 간 경제협력기구인 코민포름(Cominform, 공산당·노동자당 정보국)을 창설했다. 코민포름에는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프랑스·이탈리아 등 9개국 공산당 혹은 노동자당 대표가 참여했다.

### 캘커타의 ‘동남아 청년대회’ 주목해야

소련은 또 세계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영으로 구분하는 즈다노프 독트린(Zhdanov doctrine)을 발표했다. 이로써 2차 대전 때 형성된 동서 양 진영의 동맹관계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유럽 위주의 강경 대응책을 구사하는 것에 맞서 소련은 자신들의 침투 목표를 유라시아와 아시아 지역으로 정했다. 소련은 1948년을 전후하여 아시아 주 일대에 무장투쟁을 지령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이른바 민족해방투쟁(Wars of National Liberation)을 전개하게 된다.<sup>3)</sup>

1947년 9월 코민포름 개회사에서 안드레이 즈다노프는 “세계는 미·영·불 그리고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반독재 집단인 소련과 다른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2대 진영으로 분열되었다”면서 “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련은 또 각종 국제공산주의 기구의 하급 지역기구를 아시아 지역에 설치하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면서 소련의 새로운 정책과 침투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제주에서 남로당이 격렬한 폭력투쟁 전술 폭동·반란을 일으킨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1948년 2월 19일부터 인도의 캘커타에서 열린 ‘동남아 청년대회’다. 이 대회에는 월맹(북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론(스리랑카), 버마,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말라야 등 지역 국가 대표가 참석했고, 비지역 국가에서도 옵서버와 초청자 자격으로 북한을 위시한 8개국이 초빙되었다.

이 대회는 표면상 세계청년연맹(WFDY)과 국제학생협회(IUS)이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두 단체는 모두 공산주의자들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고, 더구나 그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가 1947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캘커타 회의에서 소련은 처음으로 동남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양극화 이론’을 내세움으로써 이를 기조로 하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침략적인 제국주의 세력이며 그들의 의도는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고, 미국의 독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의를 통해 모스크바로부터 캘커타 회의에 참여했던 각 나라들에 무장투쟁이 지령되었고, 소련은 각국의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했다.

김점곤의 연구에 의하면 캘커타 회의를 통해 소련은 동남아의 공산주의자들과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회의 이후 수개월 내외에 말레이반도,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대와 한국에서 일제히 일어난 무장투쟁은 모스크바의 명령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4)</sup>

김점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1948년 2월 19일 캘커타 회의는 이후 남한에서 일어난 제주 4·3 폭동, 국군 14연대 반란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제주 4·3 발생 원인에 대한 국내적 시각의 연구와 함께 진지하게 병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라는 점에서 관련 학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 3. 제주 4·3은 누구의 지령으로 발생했는가?

제주 4·3 규명작업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 4·3 폭동·반란의 지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제주 4·3의 발생 과정에서 이 문제는 간과한 채

3)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73, 79~80쪽.

4) 김점곤, 앞의 책, 81~82쪽.

박진경 대령 같은 ‘인간 도살자’의 학살 만행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자발적 민중봉기, 인민항쟁이었다는 식으로 도식화 해놓았다.

하지만 여러 사료를 통해 해방 공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소련 측 사주에 의한 작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폭동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헌영이 김일성과 함께 1946년 7월 스탈린에게 불려간 사실이 발견된다. 이때 스탈린은 김일성에게는 “앞으로 북한을 잘 이끌어가라”고 했고, 박헌영에게는 “폭력수단을 동원하여 남한 주둔 미군을 공격하라”는 신전술 지령을 내렸다. 이것이 9월 총파업과 대구 폭동의 방아쇠였다.

대구 폭동이 한창이던 1946년 10월 박헌영은 미군정의 체포령을 피해 월북 도주했고, 남로당의 수뇌급 간부들도 뒤를 이어 대거 월북했다. 이들 중 극소소만이 평양 정권에 참여했을 뿐 대다수는 권력에서 소외되었다.

박헌영은 38선 접경 지역인 황해도 해주에 ‘제일인쇄소’란 위장 간판을 달고 그곳에서 남로당을 지도했다. 박헌영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남한에 내려 보냈는데, 남로당에서는 북에서 내려오는 박헌영의 지령문을 ‘박헌영 선생의 서한’이라고 불렀다.

1947년 들어서도 남한에서 국립대학교안 반대투쟁, 3·1절 투쟁, 3·22 총파업 등으로 사회 혼란이 계속됐는데, 이것은 1947년 1월 22일 소련군정 사령부 교육관 니콜라이 그즈노프 소좌의 지시를 받은 박헌영이 남로당에 ‘서한’을 보내 지속적으로 폭동과 파업을 배후 조종한 결과였다. 남로당은 처음에는 국립대학교안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각 학교의 맹휴를 제1단계로 하여 폭동을 야기하도록 선동하라”는 비밀 지령에 의해 반대 투쟁을 뜨겁게 전개한 것이다.

월북한 남로당 지도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식객 취급을 받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해수에 집결하여 무위도식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북한에서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남한 내에서 ‘주목할 만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김점곤은 남로당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전쟁을 결심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남한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북로당 권력층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한에서 무력투쟁을 벌이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한다.<sup>5)</sup> 그러한 무력투쟁이 제주 4·3 폭동이었다.

#### 4·3 폭동은 평양에서 계획하고 지령된 것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 성과 없이 무기 휴회되고 1948년 1월 초 한국에 온

5) 김점곤, 앞의 책, 211쪽.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활동을 개시하여 남한만의 총선이 가시화되자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은 남한의 제헌의원 선거를 폭력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평양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은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부터 2주 동안 전국에서 “유엔위원단 반대”, “남조선 단정 반대”, “미소 양군 동시 철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 반동분자 타도”,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극렬 폭력 시위를 벌였다

남로당은 실력으로 단독선거를 저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폭동, 파괴, 살해 등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소위 ‘2·7 구국 투쟁’이었다. 당시 남로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선의 분할 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 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둘째, 남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셋째,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 통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 인민에게 맡겨라.

넷째, 국제 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 반동파를 타도하라.

이러한 남로당의 주장이나 슬로건은 북측 실력자가 된 김일성이 내놓은 주장과 동일했다. 당시 남로당은 미군정청의 불법화 선언으로 체포령이 내려져 그 수뇌부가 월북하여 북한 정권에 참여했거나, 북로당 조직에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4·3 폭동은 평양에서 계획하고 지령된 것이며, 서울에 있는 명목상의 남로당 중앙은 평양에서 내려온 지령을 실천에 옮긴 것이 된다.

2·7 폭동이 벌어지기 전날인 2월 6일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한국위원단 대표들과 만나 남북협상 방안을 제시하며 위원단 사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와중에 폭동이 발생하자 잠시 주춤했으나 사태가 수습되자 2월 10일 김구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 총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로당 간부였던 박갑동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남로당의 프락치 활동은 한독당을 비롯하여 민주독립당·조선농민당·사회민주당·민족공화당·조선신진당 등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정당이나 단체에 파고들었다. 프락치 공작은 박헌영의 직계인 김형선의 총지휘로 진행되었는데, 공작 아지트는 명동 소재 대한중석 앞에 있던 청사진 점포였다.<sup>6)</sup>

프락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소속되어 있던 한독당이었는데, 남로당 프락치였던 경기중학 미술교사 박 모와 조 모 변호사의 활약으로 김구의 세세한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남로당 중앙당과 북한의 소련군정에도 보고되었다.

6) 박갑동, 『박헌영-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인간사, 1983, 195쪽.



## 김구 월북 및 건국 반대는 성시백의 공작

해방 후 북한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사회부(이후 통일전선부로 개칭) 부부장이었던 성시백은 1947년 5월 김일성으로부터 특수공작임무를 부여받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서울로 잠입했다.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남한에 북로당 남조선특별정치위원회’를 구축하여 고도의 공작을 펼치는 것이었다.<sup>7)</sup>

성시백은 북에서 제공받은 공작자금으로 「조선중앙일보」, 「광명일보」 등 10개의 신문사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1948년 5·10 선거 때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국회의원 후보들을 매수했다. 제헌국회의원 당선자 198명 중 성시백으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은 사람이 62명이나 되었다. 그는 5·10 선거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을 매수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익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갔다.

성시백은 김일성 특사로 김구에게 파견되어 남북연석회의에 김구를 참석시키는 공작을 성공시킴으로써 김일성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김구의 대한민국 건국 반대, 남북연석회의 참석은 거물간첩 성시백의 공작의 결과이며, 레베데프 비망록에 의하면 김구에 대한 공작은 소련군정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음이 상세하게 밝혀졌다.

2월 10일 김구의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성명에도 불구하고 1948년 2월 19일 유엔 소위원회는 38선 이남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미국 안을 채택했다. 3월 1일 하지 미군정 사령관은 “5월 9일(후에 5월 10일로 변경) 38선 이남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150만 당원을 확보하여 남북한을 통틀어 최대의 정당이라고 자랑하던 남로당은 하지 사령관의 성명이 발표되자 즉각 “남한만의 단독 총선을 적극적으로 보이콧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메릴은 제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북한으로서는 원치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었으며,<sup>8)</sup> 남로당 중앙지도부가 제주도의 무장 폭력 투쟁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sup>9)</sup> 그러나 남로당 고위 간부였던 박갑동은 제헌의원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보이콧’ 지령에 따라 남로당이 무장폭동 장소로 택한 곳이 제주도라고 존 메릴과는 반대되는 증언을 내놓았다.<sup>10)</sup>

7) 성시백 관련 내용은 『해방 20년사』, 희망출판사, 354쪽, 선우종원, 『나의 조국 대한민국』, BGI출판사 2010, 167쪽 참조.

8) 존 메릴 지음, 이종찬·김충남 공역, 앞의 책, 75쪽.

9) 존 메릴 지음, 이종찬·김충남 공역, 앞의 책, 94~95쪽.

10) 박갑동, 앞의 책, 198쪽.

제주도에서 남로당 가입자는 6만~7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존 메릴은 해방 후 제주도민의 80% 정도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남로당 지지자였다고 말한다.<sup>11)</sup>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 특성 상 지도급 인사가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되면 지연 혈연관계나 협소한 공동체 사회에 따른 배타적인 도민의식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불온한 사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

## 남로당 중앙의 폭동 지령

남로당 중앙당은 2·7 투쟁이 별 성과 없이 끝나자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제주도위원회에 연락책(이재복·조경순)을 보내 “폭동을 일으켜 단선·단정을 강력히 반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은 남로당 제주도위원장 안세훈이 경찰에 피검중이어서 조직부장 김달삼에게 전달되었다.<sup>12)</sup>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경찰이 노획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남로당 제주지부는 1948년 3월 15일 경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에서 당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무장 반란 문제를 장시간 논의한 후 13대 7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남로당 중앙위원회가 ‘제주 투쟁에 대한 격려문’을 보내오자 이에 대한 답신에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자신들의 투쟁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들은 “조국해방 투쟁사상에 불멸의 금자탑”을 이루는 영예를 실시에 관철할 것을 지표로 하여 망국멸족의 단선 분쇄의 가열한 초소를 죽음으로 지킬 것이며, 통일독립을 우리의 손으로 전취할 때까지 과감히 투쟁할 것을 확언하고 맹세합니다.

1.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만세!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sup>13)</sup>

이 자료로 볼 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구국투쟁 차원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남로당 중앙당은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내의 프락치 책임자 이재복, 폭동 두목인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폭동을 부추겼다.

11) 존 메릴 지음, 이종찬·김충남 공역, 앞의 책, 64~69쪽 참조.

12) 현길언,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백년동안, 2015, 45쪽.

13) 아라리연구회 편, 『제주민중항쟁』, 소나무, 1988, 408~413쪽. 현길언, 앞의 책, 45쪽에서 재인용.

흥미로운 사실은 제주도의 남로당과 좌익은 유엔 감시 하에 자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5·10 제헌의원 선거를 무장 폭동을 일으켜 거부하고 방해한 데 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대의원 선출 지하 선거(소위 해주 선거)에는 제주도 민의 85%가 참가했다는 점이다.<sup>14)</sup>

남로당은 5·10 선거가 민족통일정부 수립을 가로막는 단독 선거라고 선동하여 투표를 거부하기 위한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해주 지하선거에는 적극 참여했다. 이런 증거들로 미루어 보면 남로당이 그토록 원했던 통일정부란 조선인민공화국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 4. 서북청년단 활동의 세계사적 의미

제주 4·3사건의 핵심 본질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둘러싼 역사 전쟁이다.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이 결정되었고, 이를 위한 첫 단계가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5·10 총선이었다. 이 선거를 방해해야만 대한민국 건국을 막을 수 있고, 자신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공산 통일국가(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선거 방해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한다.

제주도라는 바다에 갇힌 섬은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좁고 분위기가 살벌했다. 빨치산과 토벌군 사이에 위치한 주민은 그때마다 세력이 강해보이는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하려 했다. 폭동·반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도내 400여 마을 중 259개 부락이 전소되고 1만 2,250호의 가옥이 불에 탔으며, 12개 면사무소 중 5개, 12개 경찰관서, 학교 34개소, 우체국 1개소가 소실되었다. 섬 인구의 10%에 이르는 3만여 명 이상이 희생되고 이재민 10만 명이 발생하는 등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게 된다.

당시 남한에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아 미군정 통치상황에서 경찰은 일본 통치에 협력한 원죄로 신뢰를 받지 못했고, 군대는 좌익세력의 대대적인 침투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저항도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친일 경력의 군인이나 친일 경찰의 청산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공산 세력의 전복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 서북청년단은 기독교 수용한 강렬한 민족주의적 성향

그러한 국가 수호의 일선에서 좌익 공산세력과 목숨 걸고 싸운 존재가 서북청년단

14) 존 메릴 지음, 이종찬·김충남 공역, 앞의 책, 111쪽.

을 비롯한 우익청년단이었다. 이주천 교수의 ‘건국(建國) 전후 우익청년단체의 활동 재평가’ 발제문은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사료를 통해 증명해 낸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이처럼 혁혁한 공을 세운 우익청년단체의 존재를 제주 4·3 사건의 박진경 대령의 사례처럼 양민을 학살하고 백색테러를 일삼는 ‘역겨운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이유는 명쾌하다. 그들을 역사 속의 ‘쓰레기 집단’으로 매도해야만 그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말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천 교수의 연구를 통해 서북청년단이 백색테러나 일삼는 깡패 집단이 아니라 반공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했고,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았으며, 동지적 유대감이 강하고, 좌익과의 투쟁에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조직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기독교를 수용한 강렬한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에도 큰 역할을 한 선구자적 집단이었음을 증명해 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전에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6·25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140만 명 정도의 월남자가 발생했다. 특히 6·25 남침 이전에 월남한 분들은 북한에서 토지개혁이나 주요산업 국유화 과정에서 토지나 사업체를 빼앗긴 지주나 자본가, 친일파로 낙인찍힌 지도자급 인사들, 기독교인이나 공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식인 등 훈련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상대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근대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거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두뇌 유출 현상이었고, 남한 입장에서 보면 훈련되고 교육받은 엘리트 두뇌집단의 대량 유입이었다. 특히 월남자의 상당수는 왕성한 생산 활동이 가능한 남성이 대부분이어서 북측의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과, 이로 인한 충격은 컸다. 북한이 6·25 후 사실상 전통 봉건사회로 회귀한 데는 공산주의라는 요인도 작용했지만, 이처럼 유능한 인재 집단이 월남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월남민들 중 일부는 서북청년단을 결성하여 남한 사회에서 좌익·공산주의의 준동을 막아냈고, 국군 14연대 반란사건을 계기로 좌익 군인들이 숙청된 빈자리를 서북청년단이 입대하여 메워주었다. 당시 4,749명의 장교와 병사들이 숙청되었고, 숙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5,000명이 넘는 좌익 군인들이 탈영하거나 월북했다. 이는 전군 병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로써 군부 내에서 남로당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성공했다.

반공의식이 투철한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군에 입대하여 좌익 인사들의 숙군으로 인한 공백을 훌륭하게 메운 결과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 국군이 전열이 무너지지 않고 싸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한 반격의 기회를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 대한민국은 월남자들이 세운 나라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월남한 사람들은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악착같은 근성과 기질을 발휘하여 남한의 상권을 장악하고 기업을 일구었으며, 해방·좌우익 격돌·전쟁 등 격렬한 혼란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을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오늘날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웠다. 북한의 지력 고갈, 두뇌 유출은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지력 폭발을 가져왔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는 6·25 당시 서울지역에서 457명의 재학생이 학도병으로 참전했고, 전사자(35명)가 가장 많이 나온 학교다. 이는 1회부터 6회까지의 졸업생 1,198명 중 40%에 해당하는 숫자다. 특히 3회 기수의 경우 169명 중 118명이 참전하여 70%에 이르는 참전율을 기록했다. 6·25가 발발했을 때 서울고는 개교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학교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명문인 이튼스쿨과 일본의 귀족학교인 학습원(學習院) 출신의 참전율이 20%대였다. 단일 학교에서 이처럼 높은 참전율을 기록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경이적인 일이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높은 참전율을 기록했을까?

서울고 초창기 입학자의 과반수가 이북 출신이거나, 월남자의 자제들이었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반공의식이 투철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다수가 자원하여 전장에 뛰어들었고, 많은 분들이 전사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서북청년단 같은 월남자들이 세운 나라다. 6·25 남침 때 북한군과 맞서 싸웠던 국군 지휘부는 대부분 북한 출신 월남자들이었다. 김일성과 소련과 공산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월남한 북한 출신 기독교인들은 남한에 정착하여 기독교를 더욱 확산시켰다. 때문에 남한의 기독교회는 남한의 반공 민주화와 궤를 같이 한다.

좌파 학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은 월남자들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월남자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연구한 김 교수는 남한은 “월남자들로 인해 이민자의 나라의 성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다섯 개 중 네 개가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나 창설자들이 다 월남자들이다. 조선일보는 전형적인 월남자들의 신문이고 사립학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월남자들이 세웠다. 제3공화국까지는 경찰, 군부 엘리트도 반 이상이 다 월남자들이었다.

6·25 전쟁 중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정일권·백선엽 장군이 북한 출신이고, 역대 국무총리 중 백두진(황해 신천), 유창순(평남 안주), 노신영(평남 강서), 강영훈(평북 창성),

정원식(황해 재령), 이수성(함남 함흥) 등 유독 북한 출신이 많았다.

정계에서는 북한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가 제헌의회 때 12명을 기록한 이후 늘 20~30명 선을 유지했고, 9대 국회 때는 41명이 당선되었다. 재계에는 현대의 정주영, 진로의 장진호, 대농의 박용학, 태평양의 서성환, 신동아의 최순영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함께해온 주력 기업들의 창업주가 북한 출신인 월남자들이다.

대한민국이란 신생공화국의 기초공사는 이북 출신 월남자와 반공주의, 기독교가 굳건한 토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군의 역할, 반공의 불꽃, 산업화의 대장정은 상당부분 월남민들의 고군분투에 상당부분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산주의 파상공세 민간이 막아낸 유일한 사례**

이주천 교수의 발제문은 국가 공권력이 미처 공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련공산당과 김일성의 자금 지원과 사상지도, 전술전략 지도를 받은 좌익의 파상공세를 목숨 걸고 막아낸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교수의 발제문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서북청년단의 해방 공간에서의 활약상은 이 지구상에서 자금과 조직,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공산주의의 파상 공세를 국가 공권력의 무력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막아낸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사례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의미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반공의 산 증인이란 점인데, 그 주역이 바로 서북청년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토론문 / 서북청년단의 재발견

남 광 규





## 서북청년단의 재발견

남광규<sup>1)</sup>

이주천 교수의 논문은 해방 이후 건국, 6·25에 걸쳐 건국과 호국과정에서 좌익과의 투쟁 최전선에서 맨 몸으로 앞장섰던 우익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의 활동상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서북청년단에 대해 자료에 바탕한 사실 전달과 함께 공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사실적 연구물로 평가할 수 있다. 좌파와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들의 활동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반공, 테러 인사들로 각인되어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파 내에서도 서북청년단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가 없어서 좌파의 해석에 묵시적 동조를 하거나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이 건국과 호국에 끼친 막대한 공로가 잊혀졌고 후세에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공산주의와 소련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항하고 공산 치하의 북한을 실제 경험한 이들의 반공투쟁은 세계 반공사에도 기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들의 활동이 왜곡, 폄하되고 일반 국민들의 기억 속에 부정적으로 각인되거나 사라져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이면에는 소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국과 호국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저항과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동원된 서북청년단에 대한 평가도 거기에 맞추어 기술한 좌편형적 역사 해석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좌편향의 연구물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서북청년단이야말로 북한 내 공산주의와 소련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이었고 또한 북한에서 박탈당한 피해 집단으로 오로지 경험과 기억만으로 월남해서 남한 내 좌익과의 투쟁에 자발적으로 선봉대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박탈당하고 빈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북이란 지역적 유대감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고 생계로 인해 일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킨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기독교사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서청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업적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 북한 내 반공투쟁에 앞섰던 이들은 주로 엘리트층에 속한 소수의 지주들과 기독교인들이었고 대부분이 학생과 청년들이었다.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북한 내에서 발생한 다섯 개의 반공 투쟁의 내용을 보면 그런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소련군과 좌익의 만행에 개탄한 그들이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

월남해서 반공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무지 혹은 침묵으로 방관하던 대다수 남한 국민들을 반공대열에 참여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서북청년단원들의 특징인 반공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점,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은 단체였다는 점, 합숙생활을 통해 동지적 유대감을 형성한 점, 좌익과의 투쟁에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며, 반드시 보복한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요소들은 이들이 단기간에 조직화, 세력화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김일성 암살미수사건, 북한실정을 폭로한 순회강연 활동, 38선 철폐운동, 서울 소련영사관을 습격한 반소반공운동, 좌익노조 파업을 분쇄하고 조직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등의 매우 어렵고 주요한 투쟁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해방 이후 국제정세의 흐름과 한반도의 선택에 대한 판단에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서북청년단이 이념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지도자는 김구를 따르는 성향이 강했으나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노선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서 투쟁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애국적 정통성과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둔 민족운동의 핵심 주체였음을 내세우는 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국방경비대 내에 침투한 좌익과 제주 4·3폭동을 일으킨 남로당과의 투쟁과 진압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주 중요한 활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피해를 본 것은 불가피하다.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전략, 전술은 무장폭동과 반란을 주도하면서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항상 이를 진압한 세력들에게 민간의 희생원인을 돌린다는 점이다. 이런 패턴은 건국, 호국과정뿐만 아니라 5·18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이다.

1948년 12월 서북청년단이 해체하고 대한청년단이 생겨서 면, 리, 동, 직장 단위로 3백만이 넘는 반공망이 형성된 것은 6·25를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민간자산이었다. 이제라도 건국, 6·25전쟁, 호국의 과정에서 희생된 서북청년단의 공과와 희생을 올바르게 조망하고 좌우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선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